

현대정치연구

2021년 봄호 (제14권 제1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차례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과 한계 :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시뮬레이션 분석 홍은주·박영환·정준표	5
한국형 발전국가에서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에 따른 합의 민주주의의 요구 : 세계화와 외환위기 및 코로나19 이후에 ‘민주주의의 질’ 성찰 김석동	47
한국 민족주의의 두 가지 길: 박정희와 김대중의 연설문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류상영·김민정	87

■ CONTENTS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Linked Electoral System in South Korea:
Simulation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Hong, Eun-Ju · Park, Young-Hwan · Jung, Joon-Pyo5

Demand for Consensus Democracy Depending on Social Pluralization and
Inequality in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Quality of Democracy’ after
Globalization, the Financial Crisis, and COVID-19

Kim, Seok-Dong 47

Two Paths of Nationalism in South Korea: A Text Mining Analysis of
Official Speeches of Park Chung-hee and Kim Dae-jung.

Rhyu, Sang-Young · Kim, Min-Jung 87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과 한계: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시뮬레이션 분석

홍은주 | 영남대학교*

박영환 | 영남대학교**

정준표 | 영남대학교

| 국문요약 |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그 목적대로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다당제 형성에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와 비교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의 정당정치 변화에 얼마나 유용한 선거제도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그 비교대상으로 7개의 가상 선거모델을 설정하여 정당별 득표의 분포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에 유리한 조건은 위성정당이 부재하고, 연동형 적용 의석수가 많고, 비례대표의석의 규모가 클 때이다. 그러나 정당의 전략적 선택으로 이런 조건들과 반대되는 선거상황이 펼쳐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대 정당의 전략적 선택을 막지 못함으로 인해 다당제 형성에 실패하였고, 나아가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완화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21대 총선거결과 원인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위해 위성정당 설립 외에 지역구 차원에서 정당지지 패턴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위성정당, 지역주의 정당체계

* 제1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2020년 4월 15일 한국의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그 목적대로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다당제 형성에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와 비교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의 정당정치 변화에 얼마나 유용한 선거제도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실제 적용된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그 비교대상으로 7개의 가상 선거모형을 설정하여 정당별 득표의 분포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확대의 과정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제헌국회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이다. 1963년 한국 최초로 비례대표제인 전국구제도가 도입되는데 전체 의석의 1/4(총 175석 중 전국구 의석은 44석)을 전국구로 선출하였다(김용호 2000, 264). 이후 비례대표제의 개편 및 확대는 1당의 프리미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다가 민주화 이후 비례대표의석의 배분방식에서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면, 3공화국에서는 전국구 의석 배분방식이 1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였다. 1당의 득표율이 50% 미만일지라도 전국구 의석의 반을 차지하도록 하였다(김용호 2000, 267). 5공화국에 와서는 1당의 프리미엄이 더욱 강화되는데 1당이 전국구 의석의 2/3를 무조건 차지하도록 하였다. 이런 비례대표제 배분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민주화 이후 들어선 노태우정부에서는 1당이 지역구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한 경우 전국구 의석은 의석률에 따라 배분받게 되고,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 경우 전국구 의석의 1/2을 우선적으로 배분받게 되었다(김용호 2000, 268). 그러나 한국의 정치가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전국구 의석 배분방식에서는 여전히 비민주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1992년에 전국구 의석 배분을 각 정당별 의석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김용호 2000, 268). 한발

더 나아가 1994년 제정된 통합선거법은 전국구 의석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비례대표의석 할당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김용호 2000, 268).

2000년대 들어 20대 국회의원선거 까지 한국의 선거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던 1인2표 병립제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1인1표 하에서 비례대표 배분의 위헌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지역구 득표에 기초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유권자의 절반의 선택권(지역구에서 후보지지와 비례대표에서 정당지지)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 결정에 따라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지역구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병립한 1인2표제가 시행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적 방향은 소수 정당의 원내진출과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선거제도의 개혁은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을 골고루 대변하고 입법적 반응성을 제고시키는 의회를 상정하고, 이런 의회의 실현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모색하여 왔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국회는 2018년 7월 26일 한국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고 정치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일련의 정치개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였다. 특위 활동의 종료 시점에 다다랐을 무렵 위원회는 소위 심상정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을 현 5.4:1에서 3:1로 조정하고,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에다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의석수와 일치시키며, 이때 어떤 정당의 당선된 지역구의 총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기반하여 산출된 의석수보다 많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리고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심상정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심상정안의 핵심은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을 시켰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득권 정당의 의석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의 의석획득을 용이하게 하여 원내진출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군소 야당의 도움이 절실했으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에 찬성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의석 상실이 불을 보듯 뻔했으므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반대를 하였다. 결국 범여권은 21대 국회 의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소위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를 가동시켰고, 협상 결과 도출된 수정안을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수정안의 내용은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게 총 의석수 300석,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부칙으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대해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심상정안에서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폐지하였다.

50% 연동률이 적용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른 결과 온건 다당제는커녕 일당우위 양당제의 양상이라는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전혀 의도치 않은 개혁의 결과였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접했을 때, 우리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원인 진단은 물론 그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결함과 작동원리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런 경험적 분석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에서 다당제 구축에 얼마나 유용한 선거제도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정당정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지역주의 정당체계 극복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II. 기존문헌 검토

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왜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결과(다당제 형성 및 지역주의 정당체계 완화)가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들로 주를 이룬다(강우진 2020b; 김종갑·이정진 2020; 김형철 2020; 윤지성 2020; 정의정책연구소 2020; 조한석·박명호 2020; 진시원 2020). 이들 연구의 공통된 주장은 거대 양대정당의 의석 극대화 전략에 의한 위성정당 창당이 제도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의원선거 이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이 제도 도입의 정당성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김종갑 2018; 김형철 2017; 김한나 2019). 주요 논의는 의석 불비례성의 개선, 군소 정당의 원내진출 용이, 사표방지에 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역할과 비판이다.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선거제도와 정치제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쟁이 단순히 비례성 확보의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표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이관후 2019). 이 연구는 정치적 대표에 관한 철학적 숙고를 거친 뒤 어떤 유권자성(constituency)(이른테면, 지역, 계급, 정체성 등)에 가치를 둘 것인지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와 달리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즉 기득권 양당체계 타파, 군소정당 원내진출 용이, 지역주의 정당체계 극복)에 초점을 두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유용한 선거제도인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은 물론 제도의 유용성 평가를 위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관련 선거제도의 대안들의 가상적 적용이 필요하다. 가상적 분석을 통해 어떤 선거제도 대안이 원래 선거제도의 개혁 취지에 가장 부합한지 아닌지를 비교평가해 봄으로써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분석은 21대

총선결과를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대부분의 기존문헌들이 특정 시점에서 21대 총선결과에 기초하여 선거제도 개혁이 원래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본 연구는 총 7개의 가상 선거모형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제도적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현재 선거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 의도했던 정치개혁의 목표에 얼마나 부합한 제도인지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꼽고 있는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장점은 다수대표제에 비해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 획득이 가능하므로 득표율과 의석률 간 비례성이 높고, 따라서 사표가 적게 발생하여 군소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이고, 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유도한다는 것이다(김용호 2000; 박찬욱 2000; 전용주 2016). 특히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를 통해서는 의회 진출이 불가능한 전문가와 신진 정치세력, 사회적으로 제약이 큰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도와줌으로써(조기숙 2000) 의회의 대표성을 증진시켜 준다. 한편 뒤베르제(Maurice Duverger)는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관계를 선거제도의 기계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로 설명하는데, 비례대표제는 높은 비례성 때문에 군소정당의 사표를 줄여 다당제 형성에 기여한다(Duverger 1954). 다당제 정당체계하에서 소수자 집단을 대변하는 정당과 특정 지역에 지지기반이 약한 정당들이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는 비례대표제를 도입, 확대해왔다. 각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의회민주주의에서 웨스트민스터 모델의 대표적인 국가인 뉴질랜드는 단순다수제 하에서 ‘제조된 다수’가 발생하면서 득표율 대비 의석률의 불비례성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 선거제도의 불비례성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결국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비례대표제로의 개정이 확정되었다(강원택 2000). 뉴질랜드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스페인인 오랜 기간 내전과 권위주의체제를 경험한 이후 민주화 과정으로 전

환하면서 여러 정치집단의 요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모색하여 왔다. 1977년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선거법 개정은 스페인의 하원선거에 정당명부제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송기도 2000). 포르투갈 역시 1926년 군부 쿠데타 이후 40년 넘게 권위주의체제를 경험하면서 경쟁적 정당정치와 자유선거는 실종되었다. 1974년 카네이션 혁명을 통해 민주화의 길을 걸으면서 1975년 제헌의회는 폐쇄형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포르투갈의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는 의회 내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대표성 보장이었다(고주현 2018).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순수 비례대표제도 정당 간 미세한 이념 차이로도 원내진출을 가능하게 만들으로써 다당제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정병기 2018). 필리핀은 1998년 선거에서 필리핀 역사상 최초로 하원선거에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결합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1인2표제를 실시하였다. 소외계층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정영국 2000).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에서도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다른 국가들처럼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진출이라는 대의명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비례대표제의 논의는 약간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자의적이든 여론의 요구에 움직이든 정치권은 단순히 비례대표제의 확대나 강화와 같은 제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답습해 오고 있는 한국정치의 폐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9년 4월 24일 공식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심상정안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실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실시된 선거제도는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이지만 심상정안과 수정안에 가로놓인 공통점은 정당의 의석배분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확정하되 비례대표의석 할당을 지역구의석과 연동을 시키는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른바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명분은 한마디로 기존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중심의 1인2표 병립제하에서는 군소정당의 원내진입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적 요소를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양당 구도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국가들(독일,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사용했었지만, 그 좋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제 결과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 의도한 바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김한나·박현석 2019; 강우진 2020a). 한국의 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도 마찬가지다.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에 지향했던 의도와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제도 자체에서 파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결함과 다른 선거제도와의 가상분석을 통한 비교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III. 시뮬레이션 분석: 21대 국회의원선거와 7개의 가상의 선거모델

다당제 형성과 지역주의 정당체계 완화를 위해 어떤 선거제도가 가장 적절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원안(심상정안)에서 비례대표 의석수 및 연동률의 적용이 변형된 수정안(원안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 폐지)이 실제 21대 총선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수정안을 기준범주로 삼아 다른 선거모델과 비교 분석을 시행한다. 여기서 다른 선거모델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은 애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했던 원안, 즉 심상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기 전의 선거제도, 즉 병립형 선거제도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었던 주요인으로 위성정당 창당과 원안에서 후퇴한 비례대표 의석의 축소를 들고 있다(김종갑·이정진 2020; 김형철 2020; 윤지성 2020; 정의정책연구소

2020; 조한석·박명호 2020; 진시원 2020). 사실 정치권의 연동형 비례대표선거 제도 협상 과정에서 학계에서는 양대 정당 중심으로 위성정당 창당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정준표 2019). 한국에서 지역구 의석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는 기득권 양대 정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추가 의석 확보(비례대표 의석)에 불리한 제도이다(정준표 2019). 정당의 득표율로 정당의 의석배분을 정하고 당선된 지역구 의석에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상 양대 정당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다. 결국 이런 우려는 현실화가 되어 21대 총선에 원내 제1, 2정당 모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범여권의 '4+1협의체'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의 타협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 47석에 대해 연동률을 50% 적용하고, 그나마 47석에 대해서도 30석만 연동형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17석은 과거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일부병립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였다. 원안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연동률과 연동형 의석수까지 줄어드는 누더기 수정안이 실제 선거에 적용되면서 과거 병립형 선거제도 때와 유사한 선거결과가 나타났다.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이 적용되고, 또 위성정당이 창당되면서 원래 제도가 시도했던 바와 다르게 결과가 도출됐을 수 있다는 것을 위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안(심상정안)이 실제 총선에 적용되었다면, 위성정당 없이 선거를 치렀다면, 또는 비례대표 의석률이 확대된 과거 병립형 선거제도로 21대 총선을 치렀다면 과연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에 맞는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정(정당수, 정당 득표율 등)에 앞의 각 조건들의 유무를 포함시킨 가상의 선거모델들을 필요로 한다. 이 가상의 선거모델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는 어떤 선거제도가 가장 개혁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안된 선거제도(원안, 수정안, 병립형)와 위성정당의 존재 유무, 연동형 적용의 비례의석의 규모에 따라 8개의 선거모델을 상정할 수 있다(홍은주 2021). <표

1>은 8개 선거모형을 요약한 것이다. ‘위성심상정’은 위성정당이 존재하는 심상정안, ‘무위성심상정’은 위성정당이 부재하는 심상정안, ‘위성수정안30’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로서 위성정당이 존재하고 부칙이 적용된(30석만 준연동형) 수정안, ‘위성수정안47’은 위성정당이 부재하고 부칙이 미적용된(47석 모두 준연동형) 수정안, ‘무위성수정안30’은 위성정당이 부재하고 부칙이 적용된 수정안, ‘무위성수정안47’은 위성정당이 부재하고 부칙이 미적용된 수정안, ‘병립84’는 비례의석 비율이 심상정안과 동일한 병립형, ‘병립47’은 비례의석 비율이 수정안과 동일한 병립형을 말한다.

〈표 1〉 8개 선거모형

선거제도	조건		선거모형
심상정안	위성정당 ○		위성심상정
	위성정당 ×		무위성심상정
수정안	위성정당 ○	부칙 ○	위성수정안30(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
		부칙 ×	위성수정안47
	위성정당 ×	부칙 ○	무위성수정안30
		부칙 ×	무위성수정안47
병립형	비례의석 비율이 심상정안과 동일		병립84
	비례의석 비율이 수정안과 동일		병립47

이제 8개의 선거모형이 정당수 및 정당별 득표율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21대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1. 심상정안 적용

심상정안은 그 제안 취지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이

5.4:1에 달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고 비율을 3:1(225석:75석)로 조정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가상분석은 이미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이루어지므로 심상정안이 제안하는 225석 대 75석의 의석비율로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3:1이라는 심상정안의 취지를 살려 21대 총선에서 선출된 253석의 지역구의석에 이 비율을 적용하여 84석이라는 비례의석을 상정한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하였지만 8개의 선거모델은 21대 총선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상분석이 이루어지므로 21대 총선에서와 같이 정당수, 정당별/권역별 득표율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정당의 자격조건은 지난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명부 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을 얻을 때이다.

1) ‘위성심상정’ 선거모델

심상정안의 작동원리를 설명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로 정당별뿐만 아니라 권역별 지역구 당선자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심상정안의 제49조제2항에서 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각 정당이 6개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받을 때 그 권역의 지역구 당선자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정준표 2019, 2). <표 2>는 21대 총선 결과를 정당별/권역별 비례득표수와 지역구 의석수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21대 총선의 정당별/권역별 요약

제21대	권역	서울	인천·경기	강원·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제주	합계
인구수		9,766,288	16,046,564	7,072,184	7,966,259	5,134,387	5,840,605	51,826,287
총비례대표득표수		5,562,331	8,417,581	3,653,689	2,776,427	4,365,729	3,124,107	27,899,864
지역구의석수		49	72	36	40	25	31	253
무소속	당선자수	0	1	1	1	1	1	5
더불어민주당	비례득표수	0	0	0	0	0	0	0
	지역구의석	41	62	23	7	0	30	163
미래통합당	비례득표수	0	0	0	0	0	0	0
	지역구의석	8	8	12	32	24	0	84
미래한국당	비례득표수	1,841,544	2,641,948	1,290,055	1,899,603	1,549,727	218,643	9,441,520
	지역구의석	0	0	0	0	0	0	0
더불어시민당	비례득표수	1,846,902	2,920,461	1,146,895	1,178,823	449,419	1,764,612	9,307,112
	지역구의석	0	0	0	0	0	0	0
정의당	비례득표수	541,583	898,775	365,445	376,623	179,237	336,293	2,697,956
	지역구의석	0	1	0	0	0	0	1
국민의당	비례득표수	459,479	603,553	243,999	256,125	195,844	137,719	1,896,719
	지역구의석	0	0	0	0	0	0	0
열린민주당	비례득표수	327,109	487,281	180,567	191,031	81,821	244,954	1,512,763
	지역구의석	0	0	0	0	0	0	0
의석할당 정당 합계	비례득표수	5,016,617	7,552,018	3,226,961	3,902,205	2,456,048	2,702,221	24,856,070
	지역구의석	49	71	35	39	24	30	24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구체적으로 위성정당이 존재하는 심상정안의 비례대표 배분의 산출방식을 살펴보자. 심상정안의 제189조제2항, 제3항은 비례대표의석을 각 정당(비례대표의

석을 배정받을 자격을 갖춘 정당)에 배분하는 방법과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을 권역별로 최종 배분하는 방법을 밝히고 있다.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심상정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의석 배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¹⁾ 지역구 의석정수를 T_D , 비례대표 의석정수를 T_P 라 하면 국회의원정수 T 는 $T = T_D + T_P$ 로 각각 253, 84, 그리고 337이다. 의석할당정당, 즉 비례대표의석을 배정받을 자격을 갖춘 정당의 집합을 S , 무소속 후보를 각각 하나의 정당으로 가정할 때의 모든 정당의 집합을 N , 심상정안 제49조제2항의 6개 권역의 집합을 B 라 하고 위성정당의 존재를 가정할 때, 의석할당정당의 집합 S 에는 정당 명부 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과 지역구 5석 이상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포함된다.

k 권역의 i 정당의 지역구 당선 의원수를 D_i^k , 비례대표 득표수를 V_i^k 라 하면, i 정당의 전국 지역구 당선 의원수 D_i 는 $D_i = \sum_{k \in B} D_i^k$, 비례대표선거의 전국득표수 V_i 는 $V_i = \sum_{k \in B} V_i^k$ 가 된다. 심상정안 제189조제2항제1호는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연동배분의석수”(L_i)를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연동배분의석수 L_i는 다음 공식의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고 이 반올림한 값이 1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text{연동배분의석수} = [(\text{국회의원정수} - \text{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times \text{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text{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div 2$$

1) 이하 심상정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작동원리에 관한 설명은 정준표(2019)의 논문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작동원리와 문제점”의 pp. 4-9.에 있는 서술과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위 식에서 “국회의원정수-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를 “전국연동배분기준의석”이라 하고 이를 N_T 라 하면,

$$N_T = T - \sum_{i \notin S} D_i = T_P + \sum_{i \in S} D_i$$

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총의석 337석에서 무소속당선

자 수 5석을 뺀 332석이 된다. 위 공식에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이하 “비례대표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되는데(안 제189조제2항제1호), i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을 q_i 라 하면 $q_i = V_i / \sum_{i \in S} V_i$ 가 되며, 위 공식은

$(q_i \cdot N_T - D_i) / 2$ 로 표현할 수 있다. 위 공식의 값을 i 의석할당정당의 “50%보정의석수”라 하고 이를 HC_i 로 표현하자. 의석할당정당의 50%보정의석수를 전부 합하면 $T_P / 2 = 42$ 가 된다. <표 3>에서 “비례전국연동의석수”는 $q_i \cdot N_T$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각 정당의 연동배분의석수 L_i 는 우선 HC_i 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를 구하고 이 값이 양수일 경우 이 값을 그대로 연동배분의석수로 확정하고 0 이하일 경우에는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각 의석할당정당의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를 “총연동배분의석”이라 하고 이를 T_L 이라 하면 $T_L = \sum_{i \in S} L_i$ 가 되고, <표 3>에서는 166이 된다.

연동배분을 하고 남은 비례대표의석을 “총잔여배분의석”이라 하고 이를 T_R 이라 하면, $T_R = T_P - T_L$ 이 되는데, $T_R < 0$ 인 경우는 T_P 를 대상으로 조정배분을 하게 되고, $T_R \geq 0$ 의 경우는 T_R 을 대상으로 잔여배분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총연동배분의석(166석)이 비례대표 의석정수(84석)를 초과하므로 각 정당의 연동배분의석수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정수를 헤어(Hare)방식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면 이것이 각 정당의 “조정의석수”가 된다. 이 조정의석수를 A_i 라 하자. 심상정안 제189조제2항제3호의 공식 “비례대표국회의원의의석정수 × 연동배분의석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의 값을 “비례조정의석수”라 하고 이를 PA_i 로 표현하면, $PA_i = T_P \cdot L_i / T_L$ 가 된다. 헤어방식은 이 비례조정의석수 PA_i 의

정수 부분을 각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는 것이다(안 제189조제2항제2호). 이렇게 헤어방식을 적용한 결과가 바로 i 정당의 조정의석수 A_i 가 되는 것이다. <표 3>에서 각 정당의 비례조정의석수의 정수 부분만을 합한 결과는 82석으로, 2석의 잔여의석이 있으므로 단수가 큰 순서대로 미래한국당(단수: 0.880)이 1석, 다음으로 국민의당(단수: 0.578)이 한 석을 가져가는 것이다.

한편, $T_L \leq T_P$ 라면 총잔여배분의석 $T_R = T_P - T_L$ 을 비례대표득표비율에 따라 헤어방식으로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데(안 제189조제2항제2호), 이는 우선 i 정당의 “비례잔여의석수” $PR_i (=q_i \cdot T_R)$ 를 구한 다음, 그 정수 부분을 각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한 값이 심상정안 제189조제2항제2호의 “잔여배분의석수”로서, 이를 R_i 라 하자. 비례대표의석의 정당별 전국배분(<표 3>)에서는 총잔여배분의석이 $84-166=-82$ 로 잔여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의 과정을 거쳐 L_i (연동배분의석수)와 R_i (잔여배분의석수) 혹은 A_i (조정 의석수)를 구했다면, <표 3>의 i 의석할당정당의 “총비례의석수” P_i 와 “총의석수” F_i 는 $T_L \leq T_P$ 인 경우에 각각 $P_i = L_i + R_i$, $F_i = D_i + L_i + R_i$ 이 되고, $T_L > T_P$ 인 경우에 $P_i = A_i$, $F_i = D_i + A_i$ 가 된다.

심상정안에서 위성정당이 존재할 때, 각 정당의 최종 의석배분은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32석, 더불어민주당 31석, 정의당 10석, 국민의당 7석, 열린민주당 5석이 된다.

〈표 3〉 ‘위성심상정’에서 비례대표의석의 정당별 전국배분

의석할당정당($i \in S$)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미래 한국당	더불어 시민당	정의당	국민 의당	열린 민주당	합계
비례대표득표수(V_i)	0	0	9,441,520	9,307,112	2,697,956	1,896,719	1,512,763	24,856,070
지역구당선자수(D_i)	163	84	0	0	1	0	0	248
비례전국연동의석수 ($q_i \cdot NT$)	0.000	0.000	126.109	124.314	36.036	25.334	20.206	332
50%보정의석수(HC_i)	-81.500	-42.000	63.055	62.157	17.518	12.667	10.103	42
연동배분의석수(L_i)	0	0	63	62	18	13	10	166
비례조정정의석수(PA_i)	0	0	31.880	31.373	9.108	6.578	5.060	84
정수부분	0	0	31	31	9	6	5	82
조정의석수(A_i)	0	0	32	31	9	7	5	84
총의석수($F_i = D_i + P_i$)	163	84	32	31	10	7	5	332

심상정안에서 위성정당이 존재할 때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의석은 어떻게 배분되는지 알아보자. 의석할당정당의 총비례의석수의 권역별 배분은 전국적 차원의 각 정당에 대한 총비례의석수 배분방식과 동일하다. 단지 배분의 대상이 정당이 아니라 6개의 권역이라는 차이밖에 없다. 개별 정당 내 권역별 의석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지면관계상 생략을 한다. 부록 <표A 1>은 위성정당이 존재하는 심상정안에서 개별 정당의 권역별 비례의석 배분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표A 1>을 통해 우리는 6개의 권역별 비례의석수는 물론 권역별 차원에서 각 정당들이 어떻게 비례의석을 배정받게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무위성심상정’ 선거모델

위성정당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심상정안에 의한 정당별 비례대표의석 배분은

어떻게 나올까? 이 시나리오가 21대 총선거 자료를 통해 시뮬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시나리오상 위성정당이 부재하므로 실제 21대 총선에서 경쟁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선거 득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선거 득표를 모정당의 비례대표선거 득표로 간주하면 되는 것이다. 이 가정에 따라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선거 득표 흡수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선거 득표를 흡수하면 되지만, 비례대표용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는다. 열린민주당의 정체성이나 구성원의 관점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본 논문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의 창당 과정에 열린민주당에 가입한 자당의 당원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게다가 2020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하였지만 열린민주당은 합당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봤을 때, 열린민주당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포함시키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이유로 열린민주당은 제외시키고, 더불어민주당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간주한다.

위성정당이 부재하는 심상정안의 비례대표의석 정당별 전국적 배분의 가상결과가 <표 4>에 보고되고 있다. 총연동배분의석수가 62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정수 84석에서 22석의 잔여의석이 발생한다. 여기서 각 정당의 비례전국잔여의석수는 총잔여배분의석 22석에 각 정당의 비례대표선거 득표율을 곱한 값이다. 잔여의석 배분은 <표 3>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먼저 비례전국잔여의석수의 정수 부분을 각 정당의 비례의석으로 배분하고, 다음으로 단수가 큰 순서대로 해당 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한다. 그 결과가 <표 4>의 각 정당에 대한 잔여배분의석수이다.

위성정당이 존재하는 심상정안과 부재하는 심상정안을 비교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획득한 총의석수는 337석 중 194석으로 의석률은 58%가 되고(<표 3>), 위성정당이 없이 획득한 총의석수는 171석으로 의석률은

51%가 된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어 획득한 총 의석수는 116석으로 의석률은 34%이고(<표 3>), 위성정당 없이 획득한 총 의석수는 113석, 의석률은 34%이다. 심상정안에서 위성정당 존재 여부에 따라 양대 정당의 의석변화를 살펴보면, 미래통합당은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안 만드는 것보다 의석획득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군소정당의 경우, 심상정안에서 위성정당이 부재할 때 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각각 12석, 8석, 6석이 증가한 22석, 15석, 11석을 위성정당이 없을 때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당의 의석증가를 눈여겨볼 만하다.

한편 위성정당이 부재하는 심상정안에서 개별 정당의 권역별 비례의석 배분의 결과는 부록의 <표A 2>에 보고하고 있다.

<표 4> '무위성심상정'에서 비례대표의석의 정당별 전국배분

의석할당정당($i \in S$)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 민주당	합계
비례대표득표수(V_i)	9,307,112	9,441,520	2,697,956	1,896,719	1,512,763	24,856,070
지역구당선자수(D_i)	163	84	1	0	0	248
비례전국연동의석수($q_i \cdot NT$)	124.314	126.109	36.036	25.334	20.206	332
50%보정의석수(HC_i)	-19.343	21.055	17.518	12.667	10.103	42
연동배분의석수(L_i)	0	21	18	13	10	62
총잔여배분의석(TR): 84-62=22						
비례전국잔여의석수($q_i \cdot TR$)	8.238	8.357	2.388	1.679	1.339	22
정수부분	8	8	2	1	1	20
잔여배분의석수(R_i)	8	8	3	2	1	22
총비례의석수($P_i=L_i+R_i$)	8	29	21	15	11	84
총의석수($F_i=D_i+P_i$)	171	113	22	15	11	332

2. 수정안 적용

수정안의 시뮬레이션은 앞의 <표 1>에서 밝히고 있듯이, 위성정당의 존재 유무와 부칙(비례대표 총 47석 중 30석에 대하여 50%연동형 적용)의 적용 여부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된다.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로서 위성정당이 존재하고 부칙이 적용된 수정안 선거모델(‘위성수정안30’), 위성정당이 존재하고 부칙이 적용 안된 수정안 선거모델(‘위성수정안47’), 위성정당이 부재하고 부칙이 적용된 수정안 선거모델(‘무위성수정안30’), 위성정당이 부재하고 부칙이 적용 안된 수정안 선거모델(‘무위성수정안47’)이 시뮬레이션의 대상이 된다.

1) ‘위성수정안30’ 선거모델과 ‘위성수정안47’ 선거모델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위성수정안30’, 다시 말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원안이 폐기되고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수정안에 의해 실시되었다. 21대 총선에서는 300명 국회의원 정수에 지역구에서 253석을 선출하고, 비례대표의석 47석에 대해서는 30석에만 연동형(연동률 50%)이 적용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제 방식이 적용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은 예고대로 위성정당을 설립하였고, 제도개혁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실리를 추구한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작업에 뛰어들면서 지역구 선거에만 참여한 모정당과 모정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정당투표에서 경쟁하는 한국정치사에 길이 회화화될 일이 발생하였다.

<표 5>는 부칙이 적용된 수정안의 위성정당이 참여한 선거 결과로 21대 총선의 실제 결과이기도 하다. 우선 <표 5>에서 총(비례)유효투표대비득표율과 비례대표득표비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총(비례)유효투표수에서 (비례)의석 할당정당들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눈 값(0.891)²⁾이고, 후자는 모든 (비례)의석할

2) 총(비례)유효투표대비득표율이 0.891이라는 것은 비례의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정당들의 총 득표수가 10.9%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정당들의 득표수를 (비례)의석할당정당들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눈 값(1.000)이다.

<표 5>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총연동배분의석수는 147석이다. 이 수치는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 의석수와 연동해서(50% 연동) 배분하는 비례의석수 30석보다 크므로 <표 3>의 비례조정의를석수를 구하던 방식처럼 계산하여 의석할당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하여야 한다. 나머지 비례의석수 17석은 기존의 병립형 배분방식대로 계산한다. (비례)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득표비율을 17석에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를 기준으로 각 정당에 의석을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정한다. 만약 그 수가 같은 경우 의석 배정은 추첨으로 결정한다. 그 결과 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전체 의석 중 77%에 해당하는 36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11석을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였다. 전체 의석의 분포는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당이 84석,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민주당이 17석,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이다.

한편 위성정당이 존재하고 부칙이 적용 안 된 수정안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표 6>에 ‘위성수정안47’ 선거모델의 가상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표 6>의 결과를 <표 5>의 결과, 즉 21대 총선의 실제 결과와 비교해보면 대동소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차이라면 비례대표의석 47석 모두 연동형일 경우 30석만 연동형일 때보다 미래한국당은 1석을 더 잃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1석을 더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군소정당들의 비례대표의석에는 변화가 없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는 한마디로 지역구 선거결과와 비례대표 선거결과 사이의 연동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 지역구 선거에만 후보를 낸 모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한 정당(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겉모습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지만 속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선거가 진행되면서 2표 차원의 두

선거구(지역구와 비례대표) 사이에 전혀 연동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동형이 적용되는 비례의석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내재하고 있는 한계와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정당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표 5〉 ‘위성수정안30’의 정당별 비례의석 배분(실제 21대 총선 결과)

의석할당정당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미래 한국당	더불어 시민당	정의당	국민 의당	열린 민주당	합계
득표수(비례)	0	0	9,441,520	9,307,112	2,697,956	1,896,719	1,512,763	27,899,864
득표율(총유효투표대비)	0.000	0.000	0.338	0.334	0.097	0.068	0.054	0.891
비례대표득표수	0	0	9,441,520	9,307,112	2,697,956	1,896,719	1,512,763	24,856,070
비례대표득표비율	0.000	0.000	0.380	0.374	0.109	0.076	0.061	1.000
지역구당선자수	163	84	0	0	1	0	0	248
비례(전국)연동의석수	0.000	0.000	112.055	110.460	32.020	22.511	17.954	295
50%보정의석수	-81.500	-42.000	56.028	55.230	15.510	11.255	8.977	23.500
연동배분의석수	0	0	56	55	16	11	9	147
비례(30석)조정 의석수	0.000	0.000	11.429	11.224	3.265	2.245	1.837	30
정수부분	0	0	11	11	3	2	1	28
조정(30석)의석수	0	0	12	11	3	2	2	30
17석비례	0.000	0.000	6.457	6.365	1.845	1.297	1.035	17
정수부분	0	0	6	6	1	1	1	15
병립(17석)비례의석수	0	0	7	6	2	1	1	17
총비례의석수	0	0	19	17	5	3	3	47
총의석수	163	84	19	17	6	3	3	295

〈표 6〉 ‘위성수정안47’의 정당별 비례의석 배분표 6

의석할당정당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미래 한국당	더불어 시민당	정의당	국민 의당	열린 민주당	합계
득표수(비례)	0	0	9,441,520	9,307,112	2,697,956	1,896,719	1,512,763	27,899,864
득표율(총유효투표대비)	0.000	0.000	0.338	0.334	0.097	0.068	0.054	1
비례대표득표수	0	0	9,441,520	9,307,112	2,697,956	1,896,719	1,512,763	24,856,070
비례대표득표비율	0.000	0.000	0.380	0.374	0.109	0.076	0.061	1.000
지역구당선자수	163	84	0	0	1	0	0	248
비례(전국)연동의석수	0.000	0.000	112.055	110.460	32.020	22.511	17.954	295
50%보정의석수	-81.500	-42.000	56.028	55.230	15.510	11.255	8.977	23.500
연동배분의석수	0	0	56	55	16	11	9	147
비례(47석)조정(의석수)	0.000	0.000	17.905	17.585	5.116	3.517	2.878	47
정수부분	0	0	17	17	5	3	2	44
조정(47석)의석수	0	0	18	18	5	3	3	47
총비례의석수	0	0	18	18	5	3	3	47
총의석수	163	84	18	18	6	3	3	295

2) ‘무위성수정안30’ 선거모델과 ‘무위성수정안47’ 선거모델

위성정당이 부재한 수정안이 선거에 적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위성정당이 부재한 수정안에서 연동형 적용의 비례의석수 확대는 군소정당에 얼마나 유리한가? 이런 가상적 물음에 답하기 위해 위성정당이 부재하고 비례의석 30석만 연동형이 적용된 수정안(‘무위성수정안30’)과 위성정당이 부재하고 비례의석 47석 모두 연동형이 적용된 수정안(‘무위성수정안30’)에 대해 가상분석을 실시한다. 모정당의 위성정당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우리는 앞에서 위성정당이

없는 심상정안(‘무위성심상정’)에서 전제한 바대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선거득표율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선거득표율로 간주한다.

각 선거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표 7>, <표 8>에 나타나 있다. <표 7>, <표 8>에서 우선 지적할 사항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유일하게 50%보정의석수가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불어민주당의 연동배분의 석수가 0이라는 의미이고, 지역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결과(총 253석 중 163석 획득) 때문이다. 지역구 선거의 압승은 연동할 비례대표의석이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미래통합당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50%보정의석수가 음의 값은 아니지만 지역구 선거에서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양대 정당의 하나로써 지역구 선거결과를 지배한 만큼 역시 연동된 비례대표 의석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획득한 비례의석수는 19석인데, ‘무위성수정안30’ 모델에서는 15석, ‘무위성수정안47’에서는 13석을 얻어 각각 4석, 6석이 줄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실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비례의석수는 17석으로, ‘무위성수정안30’ 모델의 6석과 비교하여 11석이 감소하였고, ‘무위성수정안47’에서는 아예 획득한 의석이 하나도 없어 17석 순 감소를 보인다. 이 가상의 결과만큼 왜 양대 기득권 정당들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양대 정당과 반대로 군소정당들은 위성정당이 없는 가상의 선거모델에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혜택의 크기는 연동형 적용의 비례의석수가 커질수록 비례하였다. 실제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의석수는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모두 3석이었지만, ‘무위성수정안30’에서는 각각 12석, 8석, 6석으로 늘었고, ‘무위성수정안47’에서는 각각 15석, 10석, 9석으로 더 증가하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7〉 ‘무위성수정안30’의 정당별 비례의석 배분

의석할당정당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 민주당	합계
득표수(비례)	9,307,112	9,441,520	2,697,956	1,896,719	1,512,763	27,899,864
득표율(총유효투표대비)	0.334	0.338	0.097	0.068	0.054	1
비례대표득표수	9,307,112	9,441,520	2,697,956	1,896,719	1,512,763	24,856,070
비례대표득표비율	0.374	0.380	0.109	0.076	0.061	1.000
지역구당선자수	163	84	1	0	0	248
비례(전국)연동의석수	110.460	112.055	32.020	22.511	17.954	295
50%보정의석수	-26.270	14.028	15.510	11.255	8.977	23.500
연동배분의석수	0	14	16	11	9	50
비례(30석)조정의석수	0.000	8.400	9.600	6.600	5.400	30
정수부분	0	8	9	6	5	28
조정(30석)의석수	0	8	10	7	5	30
17석비례	6.365	6.457	1.845	1.297	1.035	17
정수부분	6	6	1	1	1	15
병립(17석)비례의석수	6	7	2	1	1	17
총비례의석수	6	15	12	8	6	47
총의석수	169	99	13	8	6	295

〈표 8〉 ‘무위성수정안47’의 정당별 비례의석 배분

의석할당정당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 민주당	합계
득표수(비례)	9,307,112	9,441,520	2,697,956	1,896,719	1,512,763	27,899,864
득표율(총유효투표대비)	0.334	0.338	0.097	0.068	0.054	0.891
비례대표득표수	9,307,112	9,441,520	2,697,956	1,896,719	1,512,763	24,856,070
비례대표득표비율	0.374	0.380	0.109	0.076	0.061	1.000
지역구당선자수	163	84	1	0	0	248
비례(전국)연동의석수	110.460	112.055	32.020	22.511	17.954	295
50%보정의석수	-26.270	14.028	15.510	11.255	8.977	23.500
연동배분의석수	0	14	16	11	9	50
비례(47석)조정의석수	0.000	13.160	15.040	10.340	8.460	47.000
정수부분	0	13	15	10	8	46
조정(47석)의석수	0	13	15	10	9	47
총비례의석수	0	13	15	10	9	47
총의석수	163	97	16	10	9	295

3. 병립형 적용

연동형 비례대표의 효과가 없는 과거 1인2표 병립제가 21대 국회의원의 결과에 가상적으로 적용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 것인가? 이 가상의 분석은 비례의석수가 현재와 같은 47석 선거모델(‘병립47’), 그리고 심상정안이 주장한 지역구 대비 비례의석 비율을 3:1로 조정한 84석 선거모델(‘병립84’, 이때 지역구의석은 253석이고 총 의석은 337석이 됨)을 활용해 실행된다. 위성정당이 부재할 때처럼, 이 선거모델들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득표는 더불어민주당

당, 미래한국당이 얻은 비례득표를 의미한다. 우리는 병립형 선거모델에 대한 가상분석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용성을 검토해볼 것이다.

앞의 가상의 선거모델들과 마찬가지로, 각 병립형 선거모델(‘병립47’, ‘병립84’)에서 상징하고 있는 비례의석(각각 47석, 84석)의 배정은 먼저 6개 권역의 인구율에 비례하여 헤어방식을 적용해서 권역별로 배분하고, 다음으로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을 개별 권역 내 정당별 비례대표선거 득표율에 따라 헤어방식으로 의석을 최종 배분한다.

두 선거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표 9>에 나타나 있다. ‘병립47’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제 21대 총선의 결과와 거의 흡사하다. 차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총 의석수가 1석 더 늘어났고, 미래통합당의 총 의석수는 1석 줄었다는 것뿐 나머지 정당들의 총 의석수는 똑같다. 마찬가지로 ‘병립84’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위성정당이 존재하는 심상정안(‘위성심상정’)과 거의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의석이 1석이 늘어난 반면 국민의당 총 의석은 1석이 줄어든 것 빼고 나머지 정당들의 총 의석은 동일하다. 결국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지역구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 비례대표 전문정당이 등장하게 되면 지역구 차원의 선거결과와 비례대표 차원의 선거결과 사이에 연동이 거의 없어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과거 병립형 선거제도와 유사한 선거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표 9〉 ‘병립47’, ‘병립84’의 정당별 비례의석 배분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합계
득표수(비례)	9,307,112	9,441,520	2,697,956	1,896,719	1,512,763	24,856,070
비례대표득표비율	0.374	0.380	0.109	0.076	0.061	1.000
<병립(47석)비례>	17.599	17.853	5.102	3.586	2.860	47
정수부분	17	17	5	3	2	44
병립비례의석수	18	18	5	3	3	47
총의석합계	181	102	6	3	3	295
<병립(84석)비례>	31.453	31.907	9.118	6.410	5.112	84
정수부분	31	31	9	6	5	44
병립비례의석수	32	32	9	6	5	47
총의석합계	195	116	10	6	5	332

이상의 각 선거모델에 대한 가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경험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는 군소정당에 긍정적으로, 거대 정당에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만, 거대 정당이 전략적으로 연동을 차단시키면 군소정당의 긍정적 효과는 사라진다.

둘째, 지역구 선거결과와 비례대표 선거결과 사이에 연동이 단절되면 비례대표 의석수의 크기, 연동률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와 유사한 선거결과가 발생한다.

셋째, 정당의 전략적 선택이 존재하는 한(예를 들면 연동 차단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는 발생하기 어렵다.

IV.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지역주의 정당체계 완화 효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혁 원안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의석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패권 정당체계를 타파하는 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의 또 하나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문제는 학계, 언론계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완화시키는 제도적 대안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자주 언급되었다. 그 논리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득표율과 의석률의 왜곡으로 인해 특정 정당의 지역 내 배타적 지배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비례성을 높여주는 정당명부식과 같은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다른 정당들의 의석 확보 기회를 높여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내 독점적 대표성을 줄이는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의 정당체계는 완화되고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일구어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심상정안은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였고,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패권 정당체계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을 주장하였다.³⁾ 그렇다면 심상정안은 그 제안한 바대로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완화시키는가? 심상정안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본 논문은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에 심상정안이 주장한 지역구 대 비례의석 비율을 3:1로 조정한 비례의석 84석이 포함된 선거모델(‘병립84’)을 심상정안들(‘위성심상정’, ‘무위성심상정’)과 비교한다(홍은주 2021). <표 10>은 ‘병립84’, ‘위성심상정’, ‘무위성심상정’의 3개 선거모델을 21대 총선 자료를 활용하여 가상분석한 결과이다. <표 10>의 정당별·권역별 비례의석의 각 칸에서 첫 번째 숫자는 ‘병립84’의 비례의석수를, 두 번째 숫자는 ‘위성심상정’의 비례의석수를, 세 번째 숫자는 ‘무위성심

3) 심상정안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전국형 비례대표제로 정당별 비례득표수와 지역구 의석을 활용하여 각 정당의 전국적 의석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연동형식 배분방식에 의해 정당별 권역별 의석을 권역별 명부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이다(정준표 2019).

상정'의 비례의석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위성심상정'과 '무위성심상정'의 비례의석수는 부록 <표A 1>과 <표A 2>에 있는 수치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지역주의 정당체계는 영호남 지역에서 보수 진보 양대 정당의 배타적 의석 독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가상결과에 대한 분석은 영호남 지역에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분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 권역에서 지역구 의석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고, 미래통합당은 호남·제주 권역에서 지역구 의원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표 10>에서 '위성심상정'의 경우 미래통합당은 호남·제주 권역에서 단 1석의 비례의석도 얻지 못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 권역에서 비례대표 1석을 얻는다. '무위성심상정' 모델에서는 미래통합당은 호남·제주 권역에서 1석의 의석을 얻는데 그치지만, 대구·경북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석의 비례의석을 획득한다. 그러나 '병립84'의 모델에서 미래통합당은 호남·제주 권역에서 무려 4석의 비례의석을 획득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대구·경북에서 3석의 비례의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지역주의가 심한 두 권역에서 지역패권 정당체계를 완화시키는 선거모델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과거의 병립형 선거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제도의 전반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실증적 분석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 할 수 있겠다.

〈표 10〉 가상 선거모델들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교분석(‘병립84’, ‘위성심상정’, ‘무위성심상정’)

제21대	권역	서울	인천·경기	강원·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제주	합계
인구수		9,766,288	16,046,564	7,072,184	7,966,259	5,134,387	5,840,605	51,826,287
총비례대표득표수		5,562,331	8,417,581	3,653,689	4,365,729	2,776,427	3,124,107	27,899,864
지역구의석수		49	72	36	40	25	31	253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석	6, 6, 0	10, 10, 0	4, 4, 0	5, 4, 4	3, 1, 3	4, 6, 1	32, 31, 8
	지역구의석	41	62	23	7	0	30	163
미래통합당	비례의석	6, 6, 8	10, 9, 14	4, 4, 3	5, 7, 2	3, 6, 1	4, 0, 1	32, 32, 29
	지역구의석	8	8	12	32	24	0	84
정의당	비례의석	2, 2, 4	3, 2, 7	1, 2, 2	1, 2, 4	1, 0, 2	1, 1, 2	9, 9, 21
	지역구의석	0	1	0	0	0	0	1
국민의당	비례의석	1, 2, 4	2, 3, 4	1, 1, 2	1, 1, 2	0, 0, 2	1, 0, 1	6, 7, 15
	지역구의석	0	0	0	0	0	0	0
열린민주당	비례의석	1, 2, 2	1, 2, 4	1, 0, 1	1, 0, 2	0, 0, 0	1, 1, 2	5, 5, 11
	지역구의석	0	0	0	0	0	0	0

심상정안의 석패율제도가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완화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심상정안은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의 동시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후보자명부 중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된 순위에 등재된 후보 중, 그 순위가 당선인으로 될 순위라면,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이 순위의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석패율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

를 그 지역구 당선인이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안 제189조제5항). 개정안은 권역별로 석패율 적용의 대상 순위를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안 제47조의2제1항), 이 권역별로 2개 이하의 석패율 적용순위에는 각각 해당 권역의 지역구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야 하며(안 제47조의2제5항), 석패율 적용에 따른 낙선한 지역구 후보의 부활당선은 특정 권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지역구의석 총수의 30%에 미달하는 정당에 한하여 적용하는 등(안 제189조제5항제3호)의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지역구 의석률이 30% 미만인 권역에 속한 지역구에서 낙선한 동일 정당 후보 중 최대 2인이 석패율이 높은 순으로 부활당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준표 2019, 21에서 재인용).

이런 석패율제도가 과연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가? 위성정당이 창당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21대 총선에서 호남·제주 권역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석패율제 적용을 먼저 살펴보자. 이 권역에서 미래통합당의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서귀포시(0.781), 제주시갑(0.761), 제주시을(0.742)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 지역에서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전주시을의 0.105였다. 제안된 석패율제도에 의한다면 서귀포시 후보와 제주시갑 후보 2명이 부활당선될 것이다.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석패율제의 취지대로 동일 권역 내 지역주의가 심한 곳에서 부활당선되는 것이 정상일텐데 결과는 지역주의가 심하지 않은 곳에서 부활당선자가 나왔다는 점은 이 제도의 실제 효과성을 의심케 만든다.

대구·경북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중 석패율 1위는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0.657)였고, 2위는 대구 수성을의 이상식 후보(0.653)였다. 동일 권역 내에서 지역주의가 심한 곳에 부활당선된 후보가 나왔다는 점에서 석패율제의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겠으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역시 석패율제의 문제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김부겸 후보는 이미 20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현직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힘지에서 지역구도를 깨는 상징적 존재로 유권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은 높은 평판도가 부활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편 이

상식 후보는 같은 지역구 내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는 구도에서 당선자의 득표수가 작아져서 석패율이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석패율제도 또한 지역주의 완화라는 원래 취지와 다르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선거의 경쟁구도, 지역적 특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의도치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V. 결론

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와 가상의 7개 선거모델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제안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본래 의도대로 군소정당의 의회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다당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 정당체계 완화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21대 총선에서 경쟁한 정당수 및 정당별/권역별 득표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하였다. 개정 선거제도의 연동형 비례대표 배정 공식에 근거하여 시나리오별로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들의 비례의석을 산출해냈고, 여러 조건(위성정당 존재 유무, 연동형 적용 비례의석수 크기 등)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가상의 선거모델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확인하였다. 우선 첫 번째 논문의 목적과 관련하여, 군소정당이 의회진출에 유리한 조건은 위성정당이 부재하고, 연동형 적용의 비례의석이 많고, 비례의석수의 규모가 클 때이다. 이 조건들은 애초에 심상정안이 제안한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심상정안 의도를 정치권이 충실히 받아들여 선거에 적용하였다면 군소정당의 비례대표의석 증가는 현실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반대로 움직였다. 실제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창

당되었고, 일부 비례의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이 적용되었고, 비례의석수의 증가도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현 정당들의 전략적 선택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의석 손실이 뻔해 보이는 불리한 제도하에서 거대 양대 정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지역구 선거결과와 비례대표 선거결과 사이의 연동을 차단시켰고 연동형 적용의 비례의석수도 최대한 낮추었다. 비례의석수의 증가는 한국의 여론과 배치된다. 겉보기에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주어진 환경에서 작용하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과 정치구조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일 것이다.

두 번째 논문의 목적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선거제도 개혁으로 상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안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실증분석 결과, 과거 1인2표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영호남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완화시키지 못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오히려 병립형 제도를 지지했다. 미래통합당은 호남·제주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였다. 이런 문제점에 비추어 각 정당에 비례대표 명부작성이나 당선자 결정방식에 최대한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인다.

그리고 석패율제도 지역주의 정당체계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의로 상징되는 특정 권역 내에서 지역주의가 심한 곳보다 심하지 않은 곳에서 부활당선자가 나왔고, 인물의 지역 평판도나 선거 경쟁구도가 부활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모든 것들은 원래 제도가 의도하는 지역주의 완화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도개선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석패율 명부작성도 최대한 개별 정당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점이다.

종합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행위자들의 전략적 유인과 정치구조적 특수성을 차단시켜야 하지만 이는 정치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행위자들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이다. 바람직한 목표와 규범적 가치를 내재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고 적용

하는 행위자의 이익과 동기와 상치하면 행위자의 선택은 전략적일 수밖에 없다. 기득권 양대 정당의 위성정당 설립이 좋은 예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동기와 유인을 바꾸기 이전에 현실에 적용가능한 제도 수립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지역주의 정당체계 극복 문제도 같은 논리다. 정치구조적 특성은 제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발생시킨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의 일반 효과는 한국의 특수한 지역적 환경에 의해 상실된다. 오히려 예전의 병립형 제도에서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완화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역시 한 국가의 특수한 구조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개혁이라도 소용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도적용은 반드시 현실을 제약하는 구조적 환경을 살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21대 총선결과와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역행하는 일당우위 양당제의 양상이 나타난 원인에 대하여 좀 더 숙고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대부분의 학계나 언론에서 주장하는 원인으로 거대 양대 정당의 위성정당 설립을 들고 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지역구 선구결과가 비례대표 선거결과에 연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드러난 현상의 한 단면만 파악할 뿐 그 구조적 요인을 깊이 통찰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연동형이 적용된 비례의석수는 30석으로 전체의석에서 고작 10%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역구 선출 의석수는 253석으로 전체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이른다. 이 253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4%에 해당하는 163석을 선거에서 차지하였던 것이다. 특정 일당의 압도적인 승리라 말할 수 있다. 2당인 미래통합당은 253석의 지역구에서 84석을 차지하였고 이 두 정당의 지역구 의석 합계는 247석으로 전체 지역구 의석에서 무려 98%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지역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양대 정당의 의석점유율이 일당 우위 양당제 양상을 설명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국회의원 의석에서 10%에 불과한 연동형 적용 비례의석에 대해 지역구 선거결과와 비례대표 선거결과 사이에 아무리 연동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지역구 선거에서 결과된 현상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과 함께 한국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역구 차원의 정당지지 패턴에 관한 연구가 더 심도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사태가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어떻게 강화 또는 약화시켰는지, 한국정치에서 특수성(예를 들면 지역주의)과 사건(예를 들면 반근혜 전대통령 탄핵)이 정당정체성의 형성과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유권자의 전략적 분할투표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후속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의 가상의 선거모델을 활용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시뮬레이션 분석은 주관적인 주장이나 규범적 논의, 단순 선거결과에 기초한 평면적인 논의에 대해 실증적 비교평가를 해봄으로써 이상적 관점에서 제안한 제도들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왜곡될 수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는 현실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참고문헌

- 강우진. 2020a. “한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개혁과 집합적 전략투표 동원.” 『현대정치연구』 13권 2호, 5-41.
- _____. 2020b. “한국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정 평가 - 주제, 목적, 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30권 4호, 65-86.
- 강원택. 2000. “뉴질랜드.” 박찬욱 편. 『비례대표 선거제도』 71-90. 서울: 박영사.
- 고주현. 2018. “남유럽의 정치체제와 선거제도.” 유럽정치연구회 편. 『유럽정치론』 65-93. 서울: 박영사.
- 김용호. 2000. “한국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분석.” 박찬욱 편. 『비례대표 선거제도』 263-286. 서울: 박영사.
- 김종갑. 2018.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판적 평가와 대안모델의 탐색.” 『선거연구』 1권 9호, 171-202.
- 김종갑 · 이정진.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1708호.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4&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28679>(검색일: 2021.1.20.).
- 김한나. 2019.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관한 비판적 검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9985)」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8권 4호, 165-200.
- 김한나 · 박현석. 2019.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치적 결과: 헝가리, 루마니아의 선거제도 연구.” 『유럽연구』 37권 2호, 173-195.
- 김형철. 202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치적 효과.” 『세계지역연구논총』 28집 2호, 79-100.
- _____. 2017.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방안과 쟁점.” 『민주주의와 인권』 17권 4호, 69-102.
- 박찬욱. 2000. “선거제도 개관.” 박찬욱 편. 『비례대표 선거제도』 3-41. 서울: 박영사.
- 송기도. 2000. “스페인.” 박찬욱 편. 『비례대표 선거제도』 159-180. 서울: 박영사.

- 윤지성.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체제의 변화.” 『의정연구』 26권 2호, 6-33.
- 이관후. 2019.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주권의 재구성: 한국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현대정치연구』 12권 1호, 146-175.
- 전용주. 2016. “민주주의 꽃, 선거와 투표.” 한국정치학회 편. 『정치학: 인간과 사회 그리고 정치』 195-221. 서울: 박영사.
- 정의정책연구소. 2020. “21대 총선 평가와 정의당의 과제.” 정의정책연구소 총선평가토론회 자료집.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29085(검색일: 2021.1.20.).
- 정영국. 2000. “필리핀.” 박찬욱 편. 『비례대표 선거제도』 115-132. 서울: 박영사.
- 정병기. 2018. “이탈리아 정당체제.” 유럽정치연구회 편. 『유럽정치론』 48-64. 서울: 박영사.
- 정준표. 2019.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작동원리와 문제점.” 한국정당학회 하계 학술회의. 경주. 8월.
- 조기숙. 2000. “한국 선거제도의 개선논의.” 박찬욱 편. 『비례대표 선거제도』 289-308. 서울: 박영사.
- 조한석 · 박명호. 2020.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험: 21대 총선을 통해 본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사회과학연구』 27권 3호, 204-226.
- 진시원. 2020. “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법과사회』 64호, 41-73.
- 홍은주. 202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와 한계: 심상정안과 그 수정안』. 영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Duverger, Maurice. 1954. *Political Parties*. New York: Wiley.

<부록>

<표A 1> '위성심상정'에서 정당내 비례대표의석의 권역별 배분

제21대	권역	서울	인천·경기	강원·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제주	합계
	인구수	9,766,288	16,046,564	7,072,184	7,966,259	5,134,387	5,840,605	51,826,287
	총비례대표득표수	5,562,331	8,417,581	3,653,689	2,776,427	4,365,729	3,124,107	27,899,864
	지역구의석수	49	72	36	40	25	31	253
무소속	당선자수	0	1	1	1	1	1	5
더불어민주당	비례득표수	0	0	0	0	0	0	0
	지역구의석	41	62	23	7	0	30	163
미래통합당	비례득표수	0	0	0	0	0	0	0
	지역구의석	8	8	12	32	24	0	84
미래한국당	비례득표수	1,841,544	2,641,948	1,290,055	1,899,603	1,549,727	218,643	9,441,520
	지역구의석	0	0	0	0	0	0	0
	비례연동의석수	6.242	9	4	6	5	1	32
	50%보정의석수	3.121	4	2	3	3	0	16
	연동배분의석수	3	4	2	3	3	0	15
	비례잔여의석수	3.316	5	2	3	3	0	17
	정수부분	3	4	2	3	2	0	14
	잔여배분의석수	3	5	2	4	3	0	17
	총의석	6	9	4	7	6	0	32
더불어시민당	비례득표수	1,846,902	2,920,461	1,146,895	1,178,823	449,419	1,764,612	9,307,112
	지역구의석	0	0	0	0	0	0	0
	비례연동의석수	6.152	10	4	4	1	6	31
	50%보정의석수	3.076	5	2	2	1	3	16
	연동배분의석수	3	5	2	2	1	3	16
	비례잔여의석수	2.977	5	2	2	1	3	15
	정수부분	2	4	1	1	0	2	10
	잔여배분의석수	3	5	2	2	0	3	15
	총의석	6	10	4	4	1	6	31

제21대	권역	서울	인천·경기	강원·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제주	합계
정의당	비례득표수	541,583	898,775	365,445	376,623	179,237	336,293	2,697,956
	지역구의석	0	1	0	0	0	0	1
	비례연동의석수	2.007	3	1	1	1	1	10
	50%보정의석수	1.004	1	1	1	0	1	5
	연동배분의석수	1	1	1	1	0	1	5
	비례잔여의석수	0.803	1	1	1	0	0	4
	정수부분	0	1	0	0	0	0	1
	잔여배분의석수	1	1	1	1	0	0	4
총의석	2	3	2	2	0	1	10	
국민의당	비례득표수	459,479	603,553	243,999	256,125	195,844	137,719	1,896,719
	지역구의석	0	0	0	0	0	0	0
	비례연동의석수	1.696	2	1	1	1	1	7
	50%보정의석수	0.848	1	0	0	0	0	4
	연동배분의석수	1	1	0	0	0	0	2
	비례잔여의석수	1.211	2	1	1	1	0	5
	정수부분	1	1	0	0	0	0	2
	잔여배분의석수	1	2	1	1	0	0	5
총의석	2	3	1	1	0	0	7	
열린민주당	비례득표수	327,109	487,281	180,567	191,031	81,821	244,954	1,512,763
	지역구의석	0	0	0	0	0	0	0
	비례연동의석수	1.081	2	1	1	0	1	5
	50%보정의석수	0.541	1	0	0	0	0	3
	연동배분의석수	1	1	0	0	0	0	2
	비례잔여의석수	0.649	1	0	0	0	0	3
	정수부분	0	0	0	0	0	0	0
	잔여배분의석수	1	1	0	0	0	1	3
총의석	2	2	0	0	0	1	5	
의석할당 정당 합계	비례득표수	5,016,617	7,552,018	3,226,961	3,902,205	2,456,048	2,702,221	24,856,070
	지역구의석	49	71	35	39	24	30	248
	연동배분의석수	9	12	5	6	4	4	40
	잔여배분의석수	9	14	6	8	3	4	44
	총의석	67	97	46	53	31	38	332

<표A 2> '무위성심상정'에서 정당내 비례대표의석의 권역별 배분

제21대	권역	서울	인천·경기	강원·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제주	합계
더불어민주당	비례득표수	1,846,902	2,920,461	1,146,895	1,178,823	449,419	1,764,612	9,307,112
	지역구의석	41	62	23	7	0	30	163
	비례연동의석수	33.933	53.658	21.072	21.659	8.257	32.421	171
	50%보정의석수	-3.533	-4.171	-0.964	7.329	4.129	1.211	4.0
	연동배분의석수	0	0	0	7	4	1	12
	비례조정석수	0.000	0.000	0.000	4.667	2.667	0.667	8
	정수부분	0	0	0	4	2	0	6
	조정석수*	0	0	0	4	3	1	8
	총의석	41	62	23	11	3	31	171
미래통합당	비례득표수	1,841,544	2,641,948	1,290,055	1,899,603	1,549,727	218,643	9,441,520
	지역구의석	8	8	12	32	24	0	84
	비례연동의석수	22.040	31.620	15.440	22.735	18.548	2.617	113
	50%보정의석수	7.020	11.810	1.720	-4.632	-2.726	1.308	14.5
	연동배분의석수	7	12	2	0	0	1	22
	비례잔여의석수	1.365	1.959	0.956	1.408	1.149	0.162	7
	정수부분	1	1	0	1	1	0	4
	잔여배분의석수	1	2	1	2	1	0	7
	총의석	16	22	15	34	25	1	113
정의당	비례득표수	541,583	898,775	365,445	376,623	179,237	336,293	2,697,956
	지역구의석	0	1	0	0	0	0	1
	비례연동의석수	4.416	7.329	2.980	3.071	1.462	2.742	22
	50%보정의석수	2.208	3.164	1.490	1.536	0.731	1.371	10.5
	연동배분의석수	2	3	1	2	1	1	10
	비례잔여의석수	2.208	3.664	1.490	1.536	0.731	1.371	11
	정수부분	2	3	1	1	0	1	8
	잔여배분의석수	2	4	1	2	1	1	11
	총의석	4	8	2	4	2	2	22

제21대	권역	서울	인천·경기	강원·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제주	합계
국민의당	비례득표수	459,479	603,553	243,999	256,125	195,844	137,719	1,896,719
	지역구의석	0	0	0	0	0	0	0
	비례연동의석수	3.634	4.773	1.930	2.026	1.549	1.089	15
	50%보정의석수	1.817	2.387	0.965	1.013	0.774	0.545	7.5
	연동배분의석수	2	2	1	1	1	1	8
	비례잔여의석수	1.696	2.227	0.900	0.945	0.723	0.508	7
	정수부분	1	2	0	0	0	0	3
	잔여배분의석수	2	2	1	1	1	0	7
총의석	4	4	2	2	2	1	15	
열린민주당	비례득표수	327,109	487,281	180,567	191,031	81,821	244,954	1,512,763
	지역구의석	0	0	0	0	0	0	0
	비례연동의석수	2.379	3.543	1.313	1.389	0.595	1.781	11
	50%보정의석수	1.189	1.772	0.656	0.695	0.297	0.891	5.5
	연동배분의석수	1	2	1	1	0	1	6
	비례잔여의석수	1.081	1.611	0.597	0.631	0.270	0.810	5
	정수부분	1	1	0	0	0	0	2
	잔여배분의석수	1	2	0	1	0	1	5
총의석	2	4	1	2	0	2	11	
의석할당 정당합계	비례득표수	5,016,617	7,552,018	3,226,961	3,902,205	2,456,048	2,702,221	24,856,070
	지역구의석	49	71	35	39	24	30	248
	조정석수	0	0	0	4	3	1	8
	연동/잔여배분의석수	18	29	8	10	5	6	76
	총의석	67	100	43	53	32	37	332

*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의석을 권역별로 정수로 먼저 배분하고 난 뒤, 비례조정석수의 단수가 0.667로 3개 권역에서 동일하여 추첨에 의해 2석의 잔여의석을 배정하였음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Linked Electoral System in South Korea: Simulation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Hong, Eun-Ju | Yeungnam University

Park, Young-Hwan | Yeungnam University

Jung, Joon-Pyo | Yeungnam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whether the semi-linked electoral system u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South Korea is meant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multi-party system that allows minor parties to enter the parliament, and how helpful the semi-linked electoral system would change the Korean party system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parallel system. To this end, the paper compares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with 7 different hypothetical election scenarios assuming in each scenario the vote share of each party is the same as that in the 21st election. The simulation results display that no satellite party, more seats allocated by the linked method, and increasing the seats in the proportional tier are favorable conditions for minor parties to have seat in the parliament. However, the opposite happened in the above conditions in the 21st election because of the two major parties' strategic behavior. The linked electoral system failed to form a multi-party system by not stopping the major parties from behaving strategically, and improve the region-based party system. Finally, the paper argues that the analysis of the 21st election results needs more study of the voting patterns of party support at district level besides the satellite party factor.

Key Words | Linked Proportional System, Parallel System,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Satellite Party, Region-based Party System

한국형 발전국가에서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에 따른 합의 민주주의의 요구: 세계화와 외환위기 및 코로나19 이후에 '민주주의의 질' 성찰*

김석동 | 서울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국문요약 |

민족적 동질성과 사회경제적 평등은 다수결 민주주의가 형성되는데 우호적인 조건이다. 반면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면 다수결 민주주의보다는 합의 민주주의가 대표성을 향상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세계화와 외환위기 이후에 사회적 다원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반영할 수 있는 합의 민주주의로 정치개혁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세계화 이후에 한국은 민족적 동질성의 약화와 함께 외국인과 탈북자 유입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다원화의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국가건설 초기에 평등한 사회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저성장 시대에 특히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대유행의 국면에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불평등한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앙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선거에서 현저한 쟁점으로 부상해왔으며, 반(半)다원적 사회로의 전환은 잠재적 쟁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당과 시민사회는 보편적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의제를 개헌 등의 담론을 통해 제기해왔다.

주제어 | 사회적 다원화, 불평등, 발전국가, 합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질

* 본 연구는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58 38).

익명의 세 심사자분의 건설적인 논평에 감사드립니다. 학술회의에서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전달해주신 김형철, 서복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필자의 연구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의 기회를 열어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터에도 감사를 포함합니다.

I. 서론

한국은 전후(戰後) 국가건설 과정에서 동원체제를 형성해왔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다수결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 제도를 유지해왔다. 일본, 한국 및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이하부터는 ‘발전국가’로 약칭)는 중앙 집권적 정부와 동원체제로 일반화되어 왔다(Woo-Cumings 1999).

민족적(ethnic) 동질성과 사회경제적 평등은 다수결 민주주의가 형성되는데 우호적인 조건이다. 한국은 국가건설 시기부터 단일민족 신화에 기초하여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였다. 한국은 국가건설과 고도성장기 동안 사회경제적으로 비교적 낮은 불평등을 유지했다. 이러한 낮은 불평등의 주요 이유는 국가건설 초기의 혁신적 토지개혁이 자산과 소득의 평등을 가져왔기 때문이며(Deininger and Olinto 2000), 부수적으로 교육개선과 낮은 실업률에 기인한다(Kim 2018, Chapter 4). 낮은 불평등에 힘입어, 한국에서 다수결 민주주의 제도가 형성되었다.

사회적 다원화 측면에서 한국은 국가건설 시기에는 단일민족 국가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강한 사회였지만, 탈냉전 이래 세계화를 거치면서 국내인구 대비 외국인 이민자와 탈북자의 비율도 증가하여 민족적으로 이질적인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민족·언어·종교가 다양한 인도와 같은, 또는 두 민족 간에 분단된 사회인 벨기에와 같은 다원적 사회는 아니다. 한국에서 이민자가 정치세력화할 정도의 사회균열은 발생하지 않아서 사회적 다원화는 (현저한 쟁점이라기보다는) 잠재적 쟁점이다.

한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선거에서 ‘현저한(salient)’ 쟁점으로 부상해왔다. 이러한 위기 이후에 저성장을 겪으면서 시민들은 불평등의 증가를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외환위기는 과거 고도성장과 비교적 낮은 불평등과 대비되었으므로 발전국가모델의 비효율성을 알리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김석동 2020).

불평등은 또한 2020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 이

하부터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 더욱 증가해왔다. 한국에서도 국내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국제교류와 민간 경제활동의 제약이 심해지자, 고용시장이 협소해지고 자영업자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총선에서 주요 쟁점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였다.

불평등에서 또 다른 중대한 변화는 중앙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심해져서 지방분권화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력과 자원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집중되어왔다. 한국 인구의 과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비(非)수도권에서 많은 소도시와 군(郡) 단위 농촌 지역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이상호 2018). 수도권으로의 권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분권화는 선거 때마다 현저한 쟁점으로 부상해왔다. 노무현과 문재인 행정부는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시의 수도 기능 강화를 추진해왔다.

한국에서 세계화와 외환위기 이후에 또한 코로나19 위협을 겪으면서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조합주의와 지방분권화를 포함한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요구는 합의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와 상응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저한 쟁점으로서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가속화되자 시민들은 경제민주화(이동원 2013)와 보편적 복지국가를 요구해왔으며,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합주의 틀 내에서 노사정 간의 대타협을 요청해왔기 때문이다(마인섭 2004, 120). 조합주의는 합의 민주주의의 주요 구성요소이다(Lijphart [1999] 2012, Chapter 9).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사회보호 서비스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합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또 다른 이유로서 잠재적 쟁점인 사회적 다원화에 대응하여 대표성을 도모하는 합의 민주주의는 이질적인 사회에서 갈등을 극복하기에 적합한 제도이기 때문이다(Lijphart [1999] 2012, Chapters 4 and 16). 동질적인 사회일수록 합의 지향적 사회를 구축할 수 있고(Hirschman 1973), 발전국가모델도 한국과 일본처럼 합의 지향적 사회에 잘 작동할 수 있다(Jones and Sakong 1980, 271-272, 304). 사회적 다원화

와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심각한 갈등이 노출되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포괄적 합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본고는 합의 민주주의를 통해 대표성이 향상되어 불평등이 해소되면 민주주의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합의 민주주의 방향으로의 정치개혁이 제도적으로 적합함을 강조한다. 2장은 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망인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에 대해 토론한다. 3장과 4장은 왜 한국에서 합의 민주주의로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의 차원에서 각각 설명한다. 5장은 한국에서 합의 민주주의 이행으로의 압력에 대하여 다양한 쟁점영역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고, 본 논문을 요약한다.

II.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1. 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망: 다수결 민주주의 對 합의 민주주의

레이프하트(Lijphart [1999] 2012)의 『민주주의의 유형(Patterns of Democracy)』은 정치제도가 의사결정에서 협소한 다수를 채택하는지 이 다수의 규모를 최대화하는가에 기초하여 세계의 민주주의를 다수결 민주주의와 합의 민주주의로 분류한다. 행정부-정당 차원과 연방제-단방제 차원이라는 두 차원을 통해 다수결 민주주의와 합의 민주주의 간의 다양한 제도를 범주화하고, 정당정치에서 입법부-행정부 간의 권력균형과 중앙-지방 간의 권력분권화의 차원에서 정부성격을 논의한다.

다수결 민주주의가 대통령제, 양당제, 다수결 선거제, 단방국가(unitary state) 및 단원제와 같은 승자독식정치(winner-take-all politics)이자 권력집중적 체제라면, 합의 민주주의는 의원내각제, 다당제, 비례대표제, 연방국가 및 양원제와 같

은 권력공유의 정치이자 권력분산적 체제다(Lijphart [1999] 2012, Chapter 1). 민주주의 연구자들은 민주주의가 다수의 지배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레이프하트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인민들이 의견의 일치로 보이지 않을 때 정부는 누구의 이익을 수용해야 하는가? 다수결 모델은 정부는 인민 단순다수의 입장을 수용하는 반면, 합의 모델은 정부는 가능한 최대한의 다수에 대응해야 하며 의사결정에서 포괄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Lijphart 1984, 4; Lijphart [1999] 2012).

파월(Powell 2000, 4-5)도 선거제의 측면에서 다수결 민주주의의 對 비례대표 민주주의로 민주주의의 두 전망을 제시한다. 다수결 민주주의는 인민의 권력을 정책결정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반면, 합의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비례대표 민주주의(proportional democracy)는 다수결 민주주의보다 대표성을 더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 정부의 통치 양자에서 중위투표자(median voter)의 관점에 더 가깝다. 소수자의 대표성과 소수자와 중도 정당 간의 연정 가능성을 고려하면, 비례대표 민주주의가 다수결 민주주의보다 중위투표자의 관점에 더 부합한다. 레이프하트에 따르면 합의 민주주의가 다수결 민주주의보다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부성과의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을 높이는 데 더 이점이 있다. 레이프하트는 합의 민주주의를 “더 자애롭고 더 온화한(kinder, gentler)” 민주주의로 옹호한다(Lijphart [1999] 2012, Chapter 16).

물론 다수결 혹은 합의 민주주의 어느 쪽의 요소만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이상형(ideal type)은 드물다. 하지만 대통령제와 양당제와 아울러 중앙집권적 정부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제도도 합의 민주주의보다는 다수결 민주주의에 더 가깝다(최태욱 2014; Lijphart [1999] 2012, Chapter 14).

한국의 민주주의 학계에서는 합의 민주주의로의 개헌이나 정치개혁이 대표성의 측면에서 적합함을 주장해왔다. 합의 민주주의의 두 축인 정당정치 차원과 연방제 차원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다루는 정당정치 차원에서 대통령제 개혁이나 온건다당제의 제도적 적합성에 관

한 연구는 합의 민주주의의 이상과 부합한다. 다수결 민주주의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대통령제 개혁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어왔다. 특히 일부 학자들이 논의한 의원내각제(안순철 2004)나 준대통령제(강원택 2001)로의 개헌은 합의 민주주의를 도모한다. 박종철(1995, 36)은 남북한 통일 후 다당제라는 가정에 따라 정치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이익대표체계를 제도화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온건다당제와 함께 선거에서 비례성의 확대를 제시한다. 홍재우·김형철·조성대(2012)는 연립정부가 의원내각제에서 일반적이지만 대통령제 하의 연립정부에서도 그 정치적 효과가 민주적 거버넌스에 긍정적임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와 의회선거의 비례대표제는 연립정부를 통해 합의주의를 이끈다. 반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의 동시선거는 연립정부 구성을 저해한다. 연합정치는 대통령제가 가지는 주요 문제점인 정치적 교착상태, 임기의 경직성 및 승자독식정치를 해소할 수 있다. 유재성 외(2017, 2-3)는 갈수록 행정국가화·복지국가화되는 경향에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으므로, ‘다당제하에서의 합의형 입법정치’를 모색한다.

그다음으로 연방제-단방제 차원에서 연방제와 지방분권화는 합의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이다. 성경룡(1997)은 통일한국의 정치·사회적 기반조성을 위해 분권형 통일국가 모델의 구성요소 하나로서 연방주의를 제시한다. 강원택(2018a)은 2017-18년에 부상한 개헌 논의에서 지방분권의 강화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지방분권이 지역 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질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단체장 1인 중심의 승자독식정치를 극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협치를 제도화하며, 지역주의 정당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정치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다.

한편 필자는 다수결 민주주의로부터 합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압력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잠재적 쟁점인) 사회적 다원화와 (현저한 쟁점인)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원인변수들은 탈냉전 이후의 세계화와 외환위기 및

코로나19 이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해왔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다원화가 잠재적 쟁점이라면 불평등의 심화는 현저한 쟁점이다. 이 두 변수로 인해 합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왜 제도적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고는 권력구조(대통령제 對 의원내각제), 정당제, 선거제 및 연방제와 같은 각각의 구성요소를 포괄하는 합의 민주주의라는 거시적 분석수준에서 정치제도를 논의한다. 김재한·레이프하트(1997)는 합의 민주주의라는 거시적 차원의 정치개혁은 제시하면서, 지역주의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권력 구조가 합의 민주주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레이프하트(Lijphart 1999)가 1999년에 출판한 『민주주의의 유형』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30년간을 넘길 만큼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이프하트(Lijphart [1999] 2012, Chapter 4)는 2012년에 이 저서의 개정판에서 한국을 포함하여 민주주의 역사가 30년을 넘긴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을 추가하여 36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의 유형을 분류하고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였다(레이프하트 2016, 8-9).

필자는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왜 한국에서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해 합의 민주주의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합의 민주주의는 대표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Lijphart [1999] 2012, Chapter 16), 다원적 사회에서 소수파의 배제를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본고는 대표성의 확대를 통해 합의 민주주의가 불평등을 개선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2.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주의 분석

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대한 전환점(critical juncture)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를 역동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의 지속과 환류 메커니즘(feedback mechanism)

을 설명한다. 제도의 지속과 변화는 결정적·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중대한 전환점과 또 그것이 지속하는 시기인 단절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으로 구분할 수 있다(Krasner 1984; 1988).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변화의 유인으로서의 외부 충격을 강조한다. 위기상황에 따른 중대한 전환점에서 정치는 주어진 규칙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새롭게 설정하는 문제로 전환된다. 다원적 사회의 도래와 불평등의 증가로 인해, 특히 외환위기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새로운 제도적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의 제도주의 분석은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의 증가로 인한 합의 민주주의로의 제도적 적합성을 평가한다. 레이프하트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합의 민주주의로 전환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한다(Lijphart [1999] 2012, 249-254). 레이프하트의 기본적인 가정은 다원적 사회(plural society)는 합의 민주주의에 제도적으로 적합하며(Lijphart [1999] 2012, 53-57; 1984, 127-128, 141), 대표성에 더 나은 정부성과를 보인다는 것이다(Lijphart [1999] 2012, Chapter 16). 본고는 사회적 다원화가 잠재적 쟁점이다라도 불평등은 현저한 쟁점으로 부상해왔으므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합의 민주주의의 요구가 커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합의 민주주의로의 제도개혁을 통해 대표성이 향상되어 불평등이 해소되면 민주주의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정치참여의 제도화 차원에서 다수결 민주주의는 협소한 다수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고 통치되는 배제의 정치라면, 합의 민주주의는 광범위한 다수의 정치세력을 정부 구성에 포함하는 포용의 정치다. 레이프하트(Lijphart 1984, 21)에 의하면, 다수의 지배와 정부를 구성하는 집권여당 對 야당의 대결적 패턴(government-versus-opposition pattern)은 배제의 원칙들(principles of exclusion)이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다. 패배한 집단을 정책결정에서의 참여에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우선적 의미를 위반한다(Lewis 1965, 64-65). 다원적 사회에서 합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합의 민주주의가 반대보다는 합의를 강조하고 패

배한 집단을 배제하기보다는 포함하고 또 근소한 과반수에 만족하는 대신에 지배하는 다수의 규모를 최대화하고자 시도하기 때문이다. 다원적 사회는 종교, 이데올로기, 언어, 문화, 민족 또는 인종 간의 균열에 따라 실질적으로 여러 하부사회로 분열되고 파편화된 사회이다. 이 하부사회는 각 집단 자신의 정당과 이익집단 및 의사소통의 통로로서 대중매체를 가지고 있다. 다수결 민주주의는 이러한 다원성을 받아들이기엔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 조건에서 다수결 원칙은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왜냐하면, 권력의 접근에 지속해서 부정당하는 소수파는 체제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을 것이며,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Lijphart 1984, 22-23).

사회균열이론(social cleavage theory)의 관점에서 한국은 점차 비(非)다원적 사회에서 반(半)다원적 사회로 변모하고 있으며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사회균열이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화되고 있다.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에 따르면, 사회균열구조는 정당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에서 종교개혁과 아울러 국민혁명(national revolution)과 산업혁명을 거치는 동안, 사회균열구조는 1) 중심부 對 주변부, 2) 국가 對 교회, 3) (산업자본가의) 제조업 對 (지주계급의) 농업, 4) 자본가 對 노동자라는 네 가지 중요한 갈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정당과 우파정당들이 형성되었다. 한국의 전후 국가건설 과정에서 혁신적 토지개혁의 성공으로 지주계급은 저항세력이 되지 못했고, 냉전구조 하에서 반공주의와 경제발전의 담론이 지배하면서 노동자계급은 억압받았다. 강원택(2018b, 10, 26)에 따르면,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 치하에서 반공 체제 내에서 제도화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였지만, 좌파 이념과 세력을 정치와 사회에서 배제함으로써 매우 협소한 이념적 스펙트럼 내로 제한되었다. 강원택(2011)은 립셋-로칸 모델을 한국 정당제 형성에 적용하여, 국민혁명을 해방 이후의 단정 대 통일 노선 간의 갈등, 산업혁명을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의 근대화로 간주한다. 한편 한국의 민주화와 외환위기 이후에, 그리고 지역주의를 주도했던 이른바 3김 정치인

(김영삼, 김대중 및 김종필)의 퇴장과 아울러 낡은 반공주의에 따른 반복정서와 반미주의가 퇴색되었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지배해 온 기존 균열은 약화된 반면, 경제의 저성장이 유지되면서 사회적 양극화, 사회적 이동성의 약화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강원택 2013, 8).

유럽의 정당제에서는 정당강령(*party program*)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정당이 발전해왔던 반면, 많은 개발도상국의 정당제에서는 부족, 인종집단 또는 종교와 같이 비(非)이념적 균열이 현저한 쟁점이 되어왔다. 따라서 개도국 정당제는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의 명제와 달리 이념적 균열과 그에 따른 국민혁명과 산업혁명에 의해 진화되어오지 않았다. 동아시아 발전국가에서 정치적·경제적 전환은 립셋과 로칸이 관찰했던 서유럽에서의 국민혁명과 산업혁명과 대조된다. 발전국가에서는 전후 국가건설 과정에서 토지개혁을 통해 기득권 계층이 해체되어 유럽혁명에서 중요한 행위자였던 지주, 농민계급 및 종교집단들로부터 중대한 저항이 없었다(Kim 2018, Chapter 3). 특히 중앙집권적 정부, 효율적인 관료제 및 합리적 정부계획에 따른 경제발전은 동원체제를 강화하였다(Johnson 1982; Woo-Cumings 1999).

유럽의 국민혁명과 산업혁명과 비교할 때 한국의 주된 전환은 냉전 하에서 전후 국가건설, 그 후에 발전국가의 발전, 그리고 토지개혁과 동반된 급속한 산업화(특히 수출지향적 산업화)라 할 수 있다. 국가건설 시기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급속한 산업화 시기에 장기적 경제발전에 대한 정부성과와 비교적 불평등이 낮았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한국의 사회균열구조에서 보수당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선거에서 이점을 발휘하였다. 오랜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하던 시기에 민주화는 또 다른 주요 균열이었다(Kim 2018, Chapter 6). 이 구도 하에서 동원체제가 형성되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다수결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하였다.

한편 외환위기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탈냉전 및 세계화 이후에 한국에서 다양한 사회균열이 형성되어 합의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우선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보편적 복지국가와 경제

민주화의 요구가 쟁점화되면서 진보진영 및 중도좌파정당들이 이 쟁점들을 선거에서 선점해왔다. 또한, 탈냉전 이후 보수진영은 반공 논리를 확산할 수 없게 되자 진보진영이 국회와 여론에서 영향력을 세력을 확대해나갔다. 세계화 이후 이민자와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균열구조의 다층화를 고려하면, 다수결 민주주의보다는 합의 민주주의가 대표성뿐만 아니라 정부성과에도 이점이 있다(Lijphart [1999] 2012, Chapter 16).

본고는 한국이 왜 합의 민주주의로 이행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한국에서 국가건설 이후 동원체제가 형성되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경로의존 효과로 인해 다수결 민주주의 요소 다수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탈냉전과 세계화 이후에 사회적 다원화를, 그리고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이후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전환점 이후에 대표성을 반영하는 제도적 균형은 다수결 민주주의보다 합의 민주주의에 더 가깝게 될 것이다. 특히 불평등의 심화 이후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다수결 민주주의보다는 합의 민주주의가 더 효과적이다(최태욱 2014).

아래의 <표 1>은 한국형 발전국가에서 (종속변수로서) 합의 민주주의의 요구가 증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독립변수로서) 사회적 다원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다원화가 잠재적 쟁점이라면, 불평등은 현저한 쟁점으로 선거에서 부상해왔다. 사회적 다원화가 부상한 계기로서 세계화 이후에 민족주의가 퇴색되고 동원체제가 쇠퇴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민자와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다. 불평등이 현저한 쟁점으로 부상한 주요 이유는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이후의 저성장 시대에 고용위기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등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정당들은 선거를 앞두고 보편적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및 지방분권화를 주요 의제로 제기해왔다. 동원체제하에서 고도경제성장과 비교적 낮은 불평등은 민주화 이후에 경로의존 효과로서 다수결 민주주의가 유지되어온 조건이라면,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이후에

불평등은 합의 민주주의로의 요구가 커진 조건이다.

<표 1> 한국형 발전국가에서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에 따른 합의 민주주의의 요구

변수	발전국가모델 진화	발전국가모델 쇠퇴	쟁점의 수준과 의제
국제적 상황변수	전후 국가건설; 남북한 체제경쟁	1) 세계화, 체제경쟁 종식; 평화구축 요구 2) 외환위기, 코로나19	잠재적 쟁점: 연방제 통일방안 구체화
주요 독립변수			
1) 사회적 다원화	강력한 민족주의; 동원체제 형성	민족주의 퇴색; 동원체제 쇠퇴; 이민자와 탈북자의 증가	잠재적 쟁점: 비례대표제 확대의 필요성 증대
2) 사회경제적 불평등	고도경제성장; 사회경제적 평등 (낮은 실업); 중앙집권적 발전	지성장; 사회경제적 불평등, 특히 고용위기,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현저한 쟁점: 보편적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및 지방분권화 요구 증대
제도의 지속과 변화	경로의존: 다수결 민주주의의 형성	증대한 전환점: 합의 민주주의의 요구	

III. 사회적 다원화: 단일민족 국가의 해체와 세계화

3장과 4장은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 차원에서 1990년대 초 이전까지 다수결 민주주의에 우호적이었던 기반을 검토한 후에, 합의 민주주의의 압력이 증가하게 된 요인을 설명한다.

1. 다수결주의: 민족적 동질성과 동원체제

한국전쟁 이후 국가건설과 국가 주도의 산업화 시기 이래 형성된 동원체제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우호적인 조건 중의 하나였다. 남북한의 체제대결 하에서 남북한 각자는 동원체제를 강화하였다. 한국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의 강압적 통치로 인해 동원체제가 유지되었다. 냉전기 권위주의 정권은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진보세력 및 시민단체를 국가보안법을 활용해서 민주화를 억압해왔다. 1987년 민주주의 이행기에 권위주의 지도부와 민주화 집단들 간의 협상을 통해 형성된 헌법과 정치제도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 국가건설 시기부터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였고 사회경제적 평등이 유지되었던 점은 다수결 민주주의 형성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민족적 동질성,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단일민족 국가라는 신화는 민족주의를 발전시키는 우호적인 기반 중의 하나였다. 한국은 강력한 민족주의를 발휘하여 국가의 주요 목표인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국민의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집단주의적인 동원체제를 고착시켰다(Woo-Cumings 1999, 8). 이에 기초하여 동원체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다수결 민주주의와 친화성을 가져왔으며, 경로의존 효과에 힘입어 다수결 민주주의가 유지되었다.

민족적 동질성과 사회경제적 평등은 동원체제와 다수결 민주주의 유지에 우호적인 요소이다. 허쉬만(Hirschman 1973, 561)은 국가가 “터널효과(tunnel effect)”를 잘 갖추고 있다면 경제성장과 공정성(equity)은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터널효과는 평등(equality) 수준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만족에 의존하는 개인의 인내이다. 한국에서 시민들의 취약한 복지체제뿐만 아니라 동원체제에 대한 인내는 일종의 터널효과이다. 이 터널효과는 토지개혁을 통한 초기의 평등한 분배에 따라 지지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준(準)완전고용(near-full employment)—매우 낮은 실업—과 공교육을 통해 장기간 낮은 불평등으로 유지

되었다. 허쉬만에 따르면, 동질적인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내는 상당히 크다.

2. 합의주의에 대한 압력: 단일민족 국가의 해체와 세계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 단일민족 국가라는 신화와 함께 강력한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동원체제가 건설되었지만, 1990년대 세계화 이래 국내인구 대비 외국인과 탈북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대표성을 강화하는 합의 민주주의 요소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세계화 이래 한국은 민족적 동질성의 약화와 함께 사회적 다원화—비(非)다원적 사회에서 반(半)다원적 사회로의 전환—의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레이프하트(Lijphart [1999] 2012, 53-57)는 다원적 사회일수록 합의제 민주주의가 제도적 친화성이 있다고 가정하며, 다원적 사회, 반다원적(semi-plural) 사회 그리고 비다원적(non-plural) 사회를 구분한다. 레이프하트는 뿌리 깊은 지역주의의 영향으로 지역 기반 정당 간의 경쟁으로 인해 한국을 반다원적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국가건설 시기에는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였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낮았기 때문에 분명히 비다원적 사회이다. 한편 레이프하트가 민주주의 국가를 분류했던 기준연도인 2010년이 훨씬 지난 현재 한국은 비다원적 사회에서 반다원적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부수적인 이유로서 세계화 시대에 외국인과 탈북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서 민족적 동질성이 다소 약해지고 있으며, 중대한 이유로서(자산·소득 불평등과 지역 간 불균등 발전에 기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탈냉전 이후에 한국에서 민족적 동질성에 근거한 민족주의가 퇴색되었다. 한국에서 권위주의 정권은 급속한 산업화 시기에 강력한 민족주의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서, 강력한 동원체제는 한국에서 제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탈북자는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탈북자들은 주로 북한에서의 체제위기와 경제난 때문에 한국에서 삶을 선택해왔다. 한국 정부는 UN난민협약에 따라 또한 국내법에 따라 한민족으로서 한국에서의 정착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현황”(검색일: 2021.01.10)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3-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3,000명 수준에 이르렀던 반면, 2012년 이후 입국 인원이 점차 줄어들었어도 1,000명대 이상 꾸준히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국민도 남한 국민과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지만, 남북한 국민 사이에 70여 년간의 오랜 분단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차원에서 이질감이 커지고 있다. 합의 민주주의는 탈북자와 남한 국민 간의 사회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도 남북한을 포괄하는 정치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은 결혼과 직업시장을 위한 이민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20)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비율은 2006년 1.1%(주민등록인구 대비)에서 2019년 4.3%(총인구 대비)로 약 4배 가량 증가하였다. 2006년은 주민등록인구(48,782,274명) 대비, 2019년은 총인구 대비 비율로 통계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국인주민 수는 최초 조사 연도인 2006년 536,627명에서 2019년 2,216,612명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 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정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0). 한국 내 외국인 증가 추세를 볼 때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다문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화에 따른 사회적 다원화는 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 쟁점이다.

IV.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

1. 다수결주의: 전후 국가건설과 산업화 시기의 사회경제적 평등

전후 국가건설과 산업화 기간에 한국은 사회경제적 평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정부를 포함하여 다수결 민주주의의 제도를 유지해왔다. 사회경제적 평등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권위주의 정권은 일종의 ‘터널효과’로서 취약한 복지체제에 대해 국민에게 인내를 강요하였다. 산업화 시기에 경제발전과 사회경제적 평등에 대한 성과가 부수적으로 다수결 민주주의의 지속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국가건설 시기에 자산과 소득의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평등한 국가 중의 하나였다.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전후처리 과정으로서 토지개혁도 지주계급을 포함한 지배계급을 해체하였다. 또한, 교육과 낮은 실업률도 비교적 낮은 불평등을 유지하는 부수적인 요인이었다(Kim 2018, Chapter 4). 한국, 일본, 및 대만 등의 발전국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 진행된 혁신적 토지개혁에 힘입어 토지 지니계수의 측면에서 토지의 평등을 이루었고(Deininger and Olinto 2000),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토지개혁 이후에 소득 지니계수도 상대적으로 낮았다(Kim 2018, Chapter 1). <표 2>는 Varieties of Democracy의 2016년 버전은 지니계수를 제시하지만, 최신 2021년 판은 지니계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최근 지니계수에 관해 OECD의 Stat Income Distribution Database도 참고하였다(검색일: 2021.03.21).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괄호 안에 있다(가령 한국의 (19)는 2019년이다). 한국의 가장 최근 자료는 통계청(20/12/18)에서 참조하였다. 하지만 OECD 통계는 대만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최근 대만 자료는 CIA의 The World Factbook을 참조하였다.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연간 변이가 작아서, 단순화를 위해 <표 2>에서 10년 단위로 소득 지니계수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표 2>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토지·소득 지니계수

국가	일본	한국	대만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영국
토지 지니	43.2	33.85	46	55.39	54.4	45.64	39.14	73.1	67.73
소득 지니									
년도									
1940	46.7			47.86		49		43.60a	37.27
1950	35.49	34b	57.4b	44.5		50.8		43.1	35.2
1960	36.7	32.25	45.55	38	50.53	54.3	37.4	42.3	35.4
중략									
1990	35	34.25	30.9	26.7	28	21.9	41	42.7	33.5
2000	31.9	35.33	31.9	29	28.2	29.2	28.8	40.1	34.6
2010	31.9	31.6	33.9	27	27	23	30	46.4	32
최근	33.9(15)	33.9(19)	33.8(12)	28.9(17)	30.1(18)	27.5(18)	26.2(18)	39(17)	36.6(18)

출처: 소득 지니계수(income Gini coefficients)는 Varieties of Democracy project(2016), OECD(검색일: 2021.03.21), CIA에서 참조함. 한국 최근 자료는 통계청(20/12/18)에서 참조. 토지(land) 지니계수는 Deininger and Olinto(2000)로부터 가져옴.
참고: a: 1944; b: 1953.

<표 2>의 시사점 중의 하나는 현재 한국이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국가건설 당시만 하더라도 토지 지니계수의 측면에서 토지자산이 평등한 사회였다는 점이다. 부동산 양극화는 중앙집권적 발전계획에 따른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간의 불균등 경제발전, 특히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현재에는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과 중앙과 지방 간의 발전 격차로 인해 지방분권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시사점은 한국은 국가건

설과 고도성장 단계에서 소득 지니계수 측면에서 불평등이 증대한 정점으로 떠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지니계수가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여서, 계층 간의 세부적인 차이가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불평등 경향만을 보여줄 뿐이다. 하지만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고용과 교육에서의 성과도 불평등 완화에 우호적 요인이다(한편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이후에 고용의 악화는 다음 절에서 논의한다). 사회경제적 평등으로 인해 분배갈등이 적어서 한국은 성장 지향적 동원체제를 효과적으로 건설하였다.

비교적 관점에서 유럽 조합주의 국가는 합의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민주적 조합주의의 형태로, 그리고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및 연정의 제도적 효과로 복지국가 발전을 이룩하였다.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유럽 복지국가는 모두 조합주의 형태의 개입주의 국가이지만, 발전국가는 국가 중심의 위계적 국가·사회 관계이면서, 노동이 배제된 합의 체계인 보수적 조합주의를 형성해왔다(Pempel and Tsunekawa 1979). 보수적 조합주의는 국가보다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조하는 사회적 조합주의 또는 민주적 조합주의와 다르다. <표 2>가 제시하듯이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1950년대까지만 해도 불평등한 사회였다. 주요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의 모델로 알려진 스웨덴도 극심한 불평등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지속적인 사회복지 지출과 복지국가의 제도화로 점진적으로 평등한 사회로 이행되어왔다. 과거에는 이 국가들이 한국보다 지니계수가 더 높았으나, 최근 기준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발전국가들의 지니계수가 더 높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발전국가는 취약한 복지체제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건설 및 급속한 산업화 시기인 1990년대 이전까지 토지개혁의 이점을 발휘하여 그리고 준완전 고용—즉, 매우 낮은 실업—과 교육의 분배 효과에 힘입어 자산과 소득의 평등을 유지하였다(김석동 2020). 한국은 국가건설 초기의 사회경제적 평등에 기초하여 중산층이 확대되고 교육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정부가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동원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동원체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다수결 민주주의와 친화성을 가져왔다.

2. 합의주의에 대한 압력: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

한국은 국가건설 초기에 평등한 사회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복지체제가 취약하여 사회복지 지출이 낮고 노약자와 여성 및 빈곤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협소하므로,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고도성장 단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고용과 교육이 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분배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비정규직·청년실업·정리해고 등의 고용갈등이 구조화되어왔다. <표 3>에서 보듯이, 통계청(21/01/20)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최근 5년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작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0년 12월에 이르러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표 4>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에 비자발적 퇴직자가 증가하였고 2018-19년에도 증가하였다. 고도성장기와 달리 현재에는 고용을 통한 분배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

<표 3> 연도별 실업자 수

단위: 만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2월)
실업자	97.6	100.9	102.3	107.3	106.3	113.5

출처: 통계청(21/01/20).

〈표 4〉 연도별 연령대별 비자발적 퇴직자 (매년 12월 조사기준 당해연도 퇴직자)

	전체 (A)	40대	50대	40+50대 (B)	4-50대 비율(B/A)
2000년	1,756,589	357,818	317,404	675,222	0.384
2001년	1,542,203	318,402	305,341	623,743	0.404
2002년	1,250,962	250,649	251,350	501,999	0.401
중략					
2014년	1,475,351	217,446	334,552	551,997	0.374
2015년	1,267,599	201,674	260,355	462,029	0.364
2016년	1,257,554	172,064	265,177	437,241	0.348
2017년	1,271,749	155,095	250,839	405,933	0.319
2018년	1,472,381	176,250	280,825	457,076	0.310
2019년	1,444,791	186,652	301,891	488,544	0.338

출처: 비자발적 실업자 자료는 추경호 의원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단위: 명. 연합뉴스(20/02/16)에서 재인용. 필자가 계산한 4-50대 비율은 40+50대 (B)를 전체 (A)로 나눈 값이다.

한국이 고도성장기에 낮은 불평등이 유지되어왔던 바와 달리, 외환위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속화된 ‘중대한 전환점’이라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유럽의 제도화된 복지국가에서는 실업률이 높아도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고, 사회복지 지출로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를 비교할 시에 평등한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저성장 시기에 한국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포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복지체제가 취약하다.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고용의 질이 나빠지면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불평등은 사회적 평화—즉 사회적 합의의 구축—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왔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에 발족한 노사정위원회는 민주적 조합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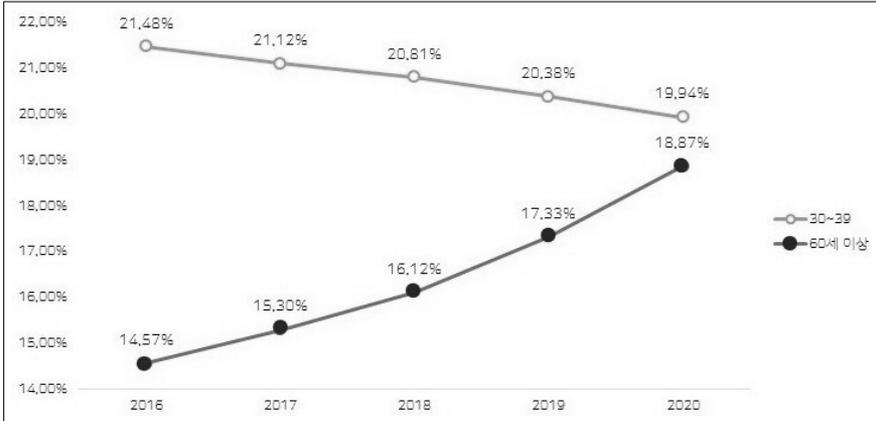
의의 틀 내에서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시도로서 도입되었다(마인섭 2004, 120). 불평등이 심각해질수록 포괄적 합의를 추구하는 조합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합주의는 합의 민주주의를 도모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Lijphart [1999] 2012, Chapter 9).

한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고도성장 하에 고용갈등이 적어서 불평등이 심각하지 않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저성장과 불평등이 동반된 시대에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 외환위기 이후 직업시장에서 비정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증가하여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청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도 줄어들어서 청년실업도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비정규직 및 시간제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두잡(two jobs)을 찾는 비중도 상당히 증가해왔다. <표 3>이 기술하는 바와 같이, 비자발적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에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도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40대와 50대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연합뉴스 20/02/16). 이러한 고용위기로 인해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분배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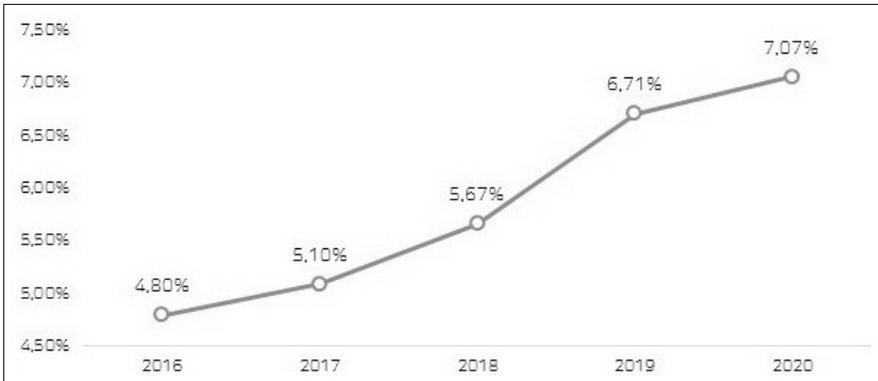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후 고용시장이 결빙되어 취업 대상자인 20대와 30대의 취업률이 급락하여, 미래의 중산층이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대외적 충격으로 인해 임금과 노동시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와 고소득자와 자산계급가에 비해 더 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취업 기회를 상실한 수많은 구직자가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찾거나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코로나19 위협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로 전체 취업자 내 연령별 비중 추이에서 청년들의 취업 비중이 작고, 주당 17시간 이하 취업자 비중도 증가하여 고용의 질이 낮아져 왔다(통계청; 헤럴드경제 21/01/16에서 재인용). 2021년 초 현재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로 고용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 20년 만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률은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 2021; 머니투데이 21/01/13).

〈그림 1〉 코로나19 이후에 청년들의 취업난과 고용위기

1. 전체 취업자 내 연령별 비중추이



2. 주당 17시간 이하 취업자 비중



출처: 통계청; 헤럴드경제(21/01/16)에서 재인용.

게다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중산층과 상류층보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빈곤계층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어서 팬데믹 시기에 집에

대피해 안락한 삶을 누릴 여유가 없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일하러 가야 한다. 그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거나 안전한 곳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전염병 억제 정책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 근로 취약계층은 비대면 재택근무가 쉽지 않다. 사무직 노동자보다 생산직 노동자들이 업무 특성 때문에 재택근무가 힘들다. 재정자원이 많고 기간시설이 잘 갖춰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재택근무의 선택지가 협소하다.

민간경제 차원에서는 2020년 이래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인간의 이동이 제약되어서 경제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에서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왔다. 정부의 방역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제공을 포함한 사회보호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을 포괄적이면서도 충분한 재원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한편 산업부문 차원에서는,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어 항공업과 관광업 및 서비스업이 큰 손실을 입어왔던 반면, 비대면 활동과 연관된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IT 산업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기회가 확대된 산업과 피해가 큰 산업 간의 이익 격차가 커서, 경제계는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K자형 경제회복” 형태로서 산업부문의 양극화를 우려하고 있다. 팬데믹 장기화 이후에 정당들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피해업종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조합주의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면 산업부문의 양극화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의 미비와 동반된 저성장으로 인해 실업자 증가와 고용 불안정 및 비정규직 양산을 경험해왔다.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고도성장 단계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가 상대적으로 현저한 쟁점이 아니었다. 반면 저

성장 시기가 도래하자 비자발적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동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고용보호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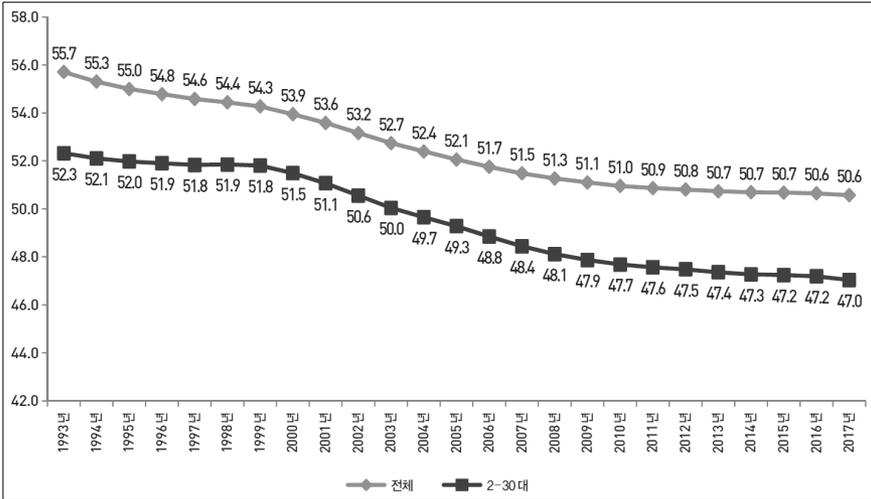
한편 한국에서 부동산의 양극화뿐만 금융자산 측면에서도 자산의 불평등이 증가해왔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토지 및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보다 이자와 주식배당과 같은 금융자산이 자산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한국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져 왔다. 김낙년(2019)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 성인 인구의 상위 10%, 1%, 0.1%의 전체 순자산 소유는 대략 62.9%, 23.9%, 10%이다.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자본주의의 고도화를 이루었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계층 간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보편적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동원 2013). 진보 또는 중도개혁 정당은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패와 정경유착을 척결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민주적 복지체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연대해왔다. 정당 간의 연합, 그리고 정당과 시민단체 간의 연대는 합의 민주주의의 요소 중의 하나인 조합주의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또 다른 중대한 차원은 중앙과 지방 간의 양극화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에 기인한다. 경제발전계획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 전략에 따라 중앙집권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수도권으로 인적·경제적 자원이 집중되었다. 한국은 서울공화국이라 일컬을 정도로 서울로 권력과 자원이 집중되었지만,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경제적 기반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림 2>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청년세대와 40-50대 등의 중장년층 다수는 대학교육, 직업활동이나 자녀교육을 위해 수도권에서의 생활을 선호해온 결과로, 삶의 질이 낮고 사회경제적 기회가 부족한 지방에서의 주거를 외면하여서 비수도권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앙-지방 간의 양극화는 지방소멸 위기를 부추겨왔다(이상호 2018).

<그림 2> 전국 인구 중에서 비수도권의 상대 인구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자료를 기반으로 산출. 이상호(2018, 4)에서 재인용.

중앙집권적 발전계획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등 발전은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긴 요인 중의 하나이다. <표 2>에서 설명한 바대로, 한국은 국가건설 시기에 토지자산의 측면에서 평등한 국가 중의 하나였지만, 부동산의 양극화로 인해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지방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들과 정당들은 지방분권화를 의제화해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부 일부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켰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받아서,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역할에만 머물고 국가를 대표하는 수도의 기능은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와 함께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래,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워왔다. 따라서 한국은 지방분권화 정책을 이행할 때,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한국은 합의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지방분권화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평등을 반영하여 발전국가모형을 수정함으로써 포괄적 합의의 정치경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V.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에 대한 쟁점 영역 간 비교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정치제도는 다수결 민주주의와 유사하였지만, 사회적 다원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합의 민주주의로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 장은 이러한 원인변수를 다양한 쟁점 차원으로 분석한다. 레이프하트(Lijphart 1984, 127-128)의 저서 *Democracies*는 정당제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구조와의 관계를 구체화하여, 1) 사회경제적 쟁점, 2) 종교적 쟁점, 3) 문화적·민족적(cultural-ethnic) 쟁점, 4) 도시·농촌 쟁점, 5) 체제지지(regime support) 쟁점, 6) 외교정책 쟁점, 7) 탈(脫)물질주의(postmaterialism) 쟁점 등의 쟁점 차원을 제시했다. 레이프하트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쟁점이 정당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종교, 도시·농촌, 외교정책 쟁점 순으로 정당제의 형성에 연관되며, 다차원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존재할수록 다당제의 경향이 높아진다(Lijphart 1984, 141).

이 책의 담론을 발전시킨 『민주주의의 유형』(Lijphart [1999] 2012)은 동일한 기준의 쟁점 차원은 제시하지 않고, <표 4>와 같이 다원적, 반(半)다원적 및 비(非)다원적 사회로 삼분화된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Democracies*(Lijphart 1984)에서 제시된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 차원을 한국에 적용하여, <표 5>에서 제시한다. 쟁점 차원에서 고(High)는 쟁점의 현저함(salience)이 높음, 중(Medium)은 현저함이 중간 수준이다. 아래 열과 우측 칸에서 쟁점 차원 총합은 고를 1점,

중을 0.5점으로 수치화할 때의 점수이다. 중앙-지방 양극화가 크다는 점에서 도시·농촌 쟁점은 현저한 쟁점, 사회경제적 쟁점과 외교정책 쟁점은 중간 수준의 쟁점으로 표현하였다.

〈표 4〉 다원주의 차원에서 민주주의 지수

사회 구분	인구	정부-정당제	연방-단방제
다원적			
인도	1,155,348	0.63	1.08
스페인	45,958	-0.63	0.42
캐나다	33,740	-1.03	1.81
벨기에	10,789	1.1	0.44
스위스	7,731	1.67	1.59
이스라엘	7,442	1.38	-0.81
트리니다드	1,339	-0.79	-0.34
모리셔스	1,275	0.42	-0.17
소계		0.34	0.50
반다원적			
미국	307,007	-0.63	2.18
독일	81,880	0.63	2.33
프랑스 IV			
프랑스 V	62,616	-0.89	0.02
이탈리아	60,221	1.13	-0.16
한국(2010)	48,747	-1.29	-0.1
네덜란드	16,531	1.17	0.28
오스트리아	8,364	0.64	0.97
핀란드	5,338	1.48	-0.83
룩셈부르크	498	0.38	-0.89
소계		0.29	0.42

非다원적			
일본	127,560	0.71	0.15
영국	61,838	-1.48	-1.12
아르헨티나	40,276	-1.01	1.34
호주	21,875	-0.65	1.58
그리스	11,283	-0.55	-0.77
포르투갈	10,632	0.04	-0.63
스웨덴	9,302	0.87	-1.09
덴마크	5,529	1.35	-0.42
노르웨이	4,827	1.09	-0.67
코스타리카	4,579	-0.38	-0.12
아일랜드	4,450	0.38	-0.46
뉴질랜드	4,316	-0.17	-1.65
우루과이	3,345	0.31	-0.84
자메이카	2,670	-1.56	-0.43
보츠와나	1,950	-1.62	-0.52
몰타	415	-0.75	-0.36
바하마	342	-1.33	-0.18
아이슬란드	319	0.55	-1.09
바베이도스	256	-1.2	-0.53
소계		-0.28	-0.41

출처: 인구는 레이프하트(Lijphart [1999] 2012, 54-55 <표 4.3>)에서 참고. 그다음에 나열된 두 열인 민주주의 지수는 그 책 부록에서 인용. 그 부록에는 1945-2010와 1981-2010, 두 기간에 대한 지수가 있지만, 본고는 최근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 후자만 제시함. 참고: 인구 (천 단위), 2009.

〈표 5〉 한국 정당제의 쟁점 차원 비교: 과거와 현재(1997년 외환위기 이후)

				쟁점	차원			
시점	사회경제	종교적	문화·민족	도시·농촌	체제지지	외교정책	탈물질	차원 수
과거					고			1.0
현재	중			고		중		2.0

출처: 열들에 나열한 쟁점 차원은 레이프하트(Lijphart 1984, 130)의 TABLE 8.1에서 가져왔다. 한국에 대한 적용은 필자가 추가.

필자는 레이프하트(Lijphart 1984, 127-128)가 제시한 정당제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구조를 한국에 적용하여, 한국이 어떻게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표 5>에서 표현한 바대로, 민주화 이전에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과 권위주의 하의 과거청산 문제가 쟁점이 되겠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체제지지가 현저한 쟁점은 아니다. 반면 외환위기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1) 사회경제적 쟁점, 4) 도시·농촌 쟁점, 6) 외교정책 쟁점이 현저한 쟁점이 되어왔다.

사회적 다원화에 관해, 한국은 건국 이후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였으므로 비다원적 사회였던 반면에, 세계화 이후에 민족주의가 퇴색되면서, 점차 민족적 이질성이 커져서 반다원적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소수민족 및 외국인이 전 국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다원적 사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국가들은 대체로 합의 민주주의 체제가 적합하다. 민주주의 국가들, 특히 벨기에와 스위스는 민족·언어 등 다양한 차원의 균열로 다원적 사회라 여겨지며, 합의 민주주의를 통해 정부성과를 개선해 왔다(Lijphart [1999] 2012, Chapter 3). 한편 민족적 동질성이 매우 강한—국민 대다수가 단일민족이라고 믿는—사회에서는 합의 민주주의보다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표 4>에서 한국은 다수의 다원주의 국가보다 인구가 더 많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체성이 강한 국가였으므로 비다원적 사회였다. 레이프하트는 지역균열로 인해서 한국을 비다원적 사회로 구분하고 있지만, 민족적 동질성 차원에서 과거에는 비다원적 사회였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전형적인 단일민족 국가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점차 커지는 이질적인 사회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 탈북자의 증가도 사회적 다원화를 촉진하고 있다.

한국에서 세계화 이후 이민자와 탈북자가 증가하면서, 문화적·민족적 쟁점도 세대를 거치면서 두드러질 것이다. 국가건설 당시부터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로서 문화적·민족적 차원에서 매우 동질적인 사회였으나, 3장에서 설명한 바대로 한국은 2000년대 이후로 외국인의 이민 증가로 이질적인 사회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 아울러 탈북자가 국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자·탈북자 집단은 아직 1세대에 불과하나 2, 3세대를 거치면서 사회적 다원화의 경향은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남북한 평화구축 논의가 활발해지면 이 쟁점은 더욱 현저해질 것이다.

사회적 다원화의 또 다른 차원에서 남북한 관계와 탈북자 증가를 고려하면, 외교정책도 점차 현저한 쟁점이 되고 있다. 남북한 관계에서 한국의 진보진영은 평화구축의 요구가 제기해왔던 반면, 다수의 탈북자를 비롯한 보수진영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과 같은 체제변화를 의제의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1980년대 말까지 냉전과 북한과의 체제 대립 하에서 친북세력에 대한 정치적 배제와 반공주의 노선으로 인하여 국내정치에서 외교적 갈등은 그 이후 시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약했다. 한편 중도개혁 성향의 노무현 정부는 한국외교정책의 전통적 노선인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외교적 균형을 모색하였다. 탈냉전 이래 한국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는 무역협상, 주한미군 주둔비와 미군의 민간인에 대한 범죄 등의 쟁점이 부각될 때마다 반미주의를 내세웠다. 또 다른 한편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한국 경제에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서 중국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친중 정책을 형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출해왔다.

한국이 외환위기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다원화보다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합의 민주주의로의 개혁을 요구하는 더 현저한 쟁점으로 부상해왔다. 여기에서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중앙-지방 간의 양극화도 포함한다. 한국은 건국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였으나,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침체로 인해 불평등한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고도성장 시기에는 토지개혁과 교육개선 및 매우 낮은 실업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평등 쟁점이 표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시대에는 불평등이 증가해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관해 본고는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 증가와 같이 고용의 질 하락, 조기 정리해고와 같은 고용위기와 취업난, 자영업자의 폐업, 그리고 노인·여성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빈곤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미비뿐만 아니라 중앙-지방 양극화를 강조한다.

이 맥락에서 도시·농촌 쟁점 차원에서는 중앙집권적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다차원의 권력이 집중되면서, 또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삶의 질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박정희 정권 이래 경제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부계획을 주도적으로 집행했던 불균등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 사이에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져 갔다. 중앙-지방 간의 양극화가 현저한 쟁점으로 부상하여서, 정당들은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같이 지방분권화 정책을 제시해왔다.

필자가 제시한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 지수와 3장과 4장에서의 분석을 반영하여 레이프하트(Lijphart 1984, 130-141)가 제시한 7개의 쟁점 차원을 고려하면, 한국은 비다원적 사회로부터 반다원적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레이프하트(Lijphart [1999] 2012, 57)에 따르면, 대부분의 반(半)다원적 사회들은 중대하지만 오로지 온건하게 분열적인 인종적 혹은 종교적 차이를 내재하고 있다. 레이프하트는 지역 간 경쟁구도(regional rivalries)의 현저함을 고려하여, 한국을 반다원

적 사회로 간주한다. 하지만 지역주의 투표 경향은 영남과 호남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보다는 김영삼 對 김대중, 그리고 그 이전에 박정희 對 김대중 간의 정치지도자의 라이벌 구도와 함께 카리스마적 정치지도자가 지역 기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던 점에 기인한다. 한국의 국가건설 및 산업화 시기에 동질적인 민족적 정체성과 사회경제적 평등은 비다원적 사회의 요소이며,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지역주의는 반다원적 사회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한편 세계화의 도래와 외환위기 및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시대에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이 커지고 있으며, 레이프하트의 척도로 보면 1) 사회경제적 쟁점, 4) 도시·농촌 쟁점, 6) 외교정책 쟁점 차원에서 다원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한편 사회적 다원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두 차원 각각에서 정도의 차이에 따라 합의 민주주의의 압력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가령 어떤 국가가 비(非)다원적 사회로서 연방제-단방제 차원에서는 특히 영토와 인구가 작은 국가이면서 민족적·인종적 차원에서 동질적인 사회라면, 연방제에 대한 압력은 강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지방분권화에 대한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연방제와 양원제는 남한 내부에 적용하기에는 합의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이후에 민족적 이질성보다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 현저한 쟁점으로 부상해왔다. <표 4>에서 작은 국가와 동질적인 사회에서는 연방제 지수의 값이 크지 않다. 현재 한국에서 합의 민주주의의 압력은 연방제-단방제 차원보다는 행정부-정당 차원에서 더 크다.

하지만 비다원적 사회를 가진 국가 중에서도 스웨덴과 같이 과거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했던 국가들은 합의 민주주의 제도에 힘입어 평등한 사회로 전환되었다(불평등에 관해서는 <표 2> 참조). 스웨덴, 덴마크 및 노르웨이에서는 행정부-정당 차원에서 권력분산 및 권력공유를 실현하는 정치제도인 의원내각제, 다당제 및 비례대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이 국가들은 비다원적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정당 차원에서 합의 민주주의의 경향이 강하다. <표 4>에서 보면 비(非)다원적 사회의 행정부-정당 차원에서 평균값이 -0.28 이

다. +2로 갈수록 합의 민주주의의 이상형에 부합하고, -2로 갈수록 다수결 민주주의의 이상형으로 간주된다. 스웨덴, 덴마크 및 노르웨이 이 세 국가의 값은 0.87, 1.35, 1.09이어서, 다원적 사회의 평균값인 0.34보다 합의 민주주의의 경향이 오히려 더 강하다.

한편 한국은 다른 반다원적 사회보다 대통령제, 양당제, 소선거구제, 중앙집권적 정부와 같은 다수결 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치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물론 사회적 다원화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한국 시민들은 합의 민주주의의 모든 요소를 선호하지는 않으며 합의 민주주의의 일부 제도에만 공감할 것이다. 가령 시민들은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에 더 친숙하고, 연방제와 양원제는 시기상조라 여길 것이다. 시민들의 일부 제도에 대한 친화성은 경로의존 효과에 의한 것이지, 그 제도가 효율적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은 대표성 확대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제 개혁과 지방분권화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것이 있다. 한국의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 정도를 고려하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합의 민주주의로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VI. 결론

한국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이후의 저성장 시대에 취약한 복지체제로 인해 합의 민주주의 요구의 현저한 쟁점으로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에 따라 이민자와 탈북자의 증가로 잠재적 쟁점으로서 사회적 다원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다원화는 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잠재적 쟁점이라면 불평등은 현저한 쟁점이다.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합의 민주주의의 이상에 부합하는 개혁을 통해 대표성을 확대하여 불평등을 개선하면, 민주주

의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한국에서 권력공유와 분산을 통해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계층 간 불평등과 지역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이프하트(Lijphart [1999] 2012)가 제시한 바와 같이, 다수결 민주주의가 대통령제, 양당제, 다수제 선거제, 단방국가 및 단원제와 같은 승자독식정치이자 권력집중적 체제라면, 합의 민주주의는 의원내각제, 다당제, 비례대표제, 연방국가 및 양원제와 같은 권력공유의 정치이자 권력분산적 체제이다. 합의 지향적 정치제도는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본고의 제도주의 분석을 요약하면, 민족적 동질성과 사회경제적 평등은 다수결 민주주의가 형성되는데 우호적인 조건이지만, 사회적 다원화와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면 다수결 민주주의보다는 합의 민주주의가 대표성을 향상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사회가 세계화와 외환위기 이후에 사회적 다원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반영할 수 있는 합의 민주주의로 정치개혁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의 국가건설과 국가 주도의 산업화 시기 이래 형성된 동원체제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우호적인 조건 중의 하나였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에서 국가건설 시기부터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였고 낮은 불평등이 유지되었던 점은 다수결 민주주의의 정착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게다가 국가건설과 산업화 초기에 한국은 낮은 불평등을 유지해왔으며, 고도 경제성장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중앙집권적 정부와 정치제도, 특히 다수결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세계화 이후에 한국은 민족적 동질성의 약화와 함께 외국인과 탈북자 유입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다원화의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한국인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은 결혼과 직업시장을 위한 이민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국가건설 초기에 평등한 사회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저성장 시대에 특히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대유행의 국면에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불평등한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외환위기는 한국형 발전국가모델의 변화를 초래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한국의 급속한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앙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선거에서 현저한 쟁점으로 부상해왔으며, 반(半)다원적 사회로의 전환은 잠재적 쟁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당과 시민사회는 보편적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의제를 개헌 등의 담론을 통해 제기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전환점을 겪으면서 한국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질’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1. “한국 정치에서 이원적 정통성의 갈등 해소에 대한 논의: 준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7권 3호, 29-50.
- 강원택. 2011.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룩칸 모델의 적용.” 『한국과국제정치』 27권 3호, 99-129.
-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국정당학회보』 12권 3호, 5-28.
- 강원택. 2018a.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 성공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한국과국제정치』 34권 1호, 25-49.
- 강원택. 2018b. “한국 정당 정치 70년: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정당 정치의 전개.” 『한국정당학회보』 17권 2호, 5-31.
- 김낙년. 2019. “우리나라 개인 자산 분포의 추정.” 『경제사학』 43권 3호, 437-482.
- 김석동. 2020. “발전국가에서 토지·교육평등 및 경제민주화의 경제발전에 대한 역할.” 『한국정치연구』 29집 2호, 183-211.
- 김재한·아렌트 레입하트(Arend Lijphart). 1997. “합의제와 한국의 권력구조.” 『한국정치학회보』 31권 1호, 99-120.
- 마인섭. 2004. “노사갈등과 참여정부의 역할: 전략적 노사동맹을 통한 변형.” 『신아세아』 11권 4호, 116-137.
- 머니투데이. 2021. ““한국 실업률 10년래 최고치…IMF이후 최악” -블룸버그.” 21/01/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313415746322&outlink=1&ref=%3A%2F%2F> (검색일: 2021.01.16).
- 박종철. 1995. “통일한국의 정치적 갈등구조와 온건다당제.” 『한국과국제정치』 11권 2호, 35-60.
- 성경룡. 1997. “분권형 통일국가 모델의 탐색: 연방주의의 논리.” 『통일한국의 정치·사회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중 제4 세부과제. 서울: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안순철. 2004. “내각제와 다당당체제: 제도적 조화의 모색.” 진영재 편. 『한국 권력 구조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
- 연합뉴스. 2020. “작년 직장서 밀려난 40·50대 49만명…5년 만에 최대.” 20/02/16.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5048200002> (검색일: 2020.02.16).
- 유재성·한정택·임유진·강신구·노정호. 2017. “다당제 하에서 합의형 입법정치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11월.
https://www.nars.go.kr/brdView.do?cmsCd=CM0010&brd_Seq=22253 (검색일: 2020.01.05).
- 이동원. 2013.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향: 대기업집단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7권, 3-36.
- 이상호. 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고용동향 브리프』. 한국고용정보원. 7월.
<https://www.keis.or.kr/user/extra/main/2107/publication/publicationList/jsp/LayoutPage.do?categoryIdx=126> (검색일: 2018.09.25).
- 최태욱. 2014.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시장의 우위에 서는 정치를 위하여』. 서울: 책세상.
- 통계청. “지니계수.” 20/12/18.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
- 통계청. 2021.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1월 13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7733 (검색일: 2021.01.13).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검색일: 2021.01.10).
- 행정안전부. 2020.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세종시. 10월 29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4&ntId=80781 (검색일: 2021.01.10).
- 헤럴드경제. 2021. “코로나로 취업 못한 90년초반생 영영 도태된다…“민간일자리

만들어 기회보전해줘야.” 21/01/1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15000869> (검색일: 2021.01.16).

홍재우 · 김형철 · 조성대. 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제도적 한계의 제도적 해결.” 『한국정치학회보』 46권 1호, 89-112.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Deiningner, Klaus, and Pedro Olinto. 2000. “Asset 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2375. Washington, DC: World Bank.

Hirschman, Albert O. 1973. “The Changing Tolerance for Income Inequality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4): 544-566.

Johnson, Chalmers.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Jones, Leroy, and Il Sakong. 1980. *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Kim, Seokdong. 2018. “Developmental States’ Weak Welfare Regimes but Long-term Low Inequality: Why Economic Nationalism Promotes Solidarity for Egalitarianism rather than Conflict for Resource Monopoly.” Ph. D. Diss.,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Krasner, Stephen D. 1984. “Approaches to the State: Alternative Conceptions and Historical Dynamics.” *Comparative Politics* 16: 223-246.

Krasner, Stephen D. 1988.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1(1): 66-94.

Lewis, W. Arthur. 1965. *Politics in West Africa*.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ijphart, Arend. 1984. *Democracies: Patterns of Majoritarian and Consensus Govern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 1999.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 [1999] 2012.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2nd Ed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 김석동 역. 2016. 『민주주의의 유형: 다수결 민주주의와 합의 민주주의 간의 정부 형태와 성과 비교』.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Lijphart, Arend. [1999] 2012.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2nd Edition). Yale University Press.
- Lipset, Seymour M., and Stein Rokka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In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edited by Seymour M. Lipset and Stein Rokkan, 1-64. New York: Macmillan.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검색일: 2021.03.21).
- Pempel, T. J., and Keiichi Tsunekawa. 1979. "Corporatism without Labor? The Japanese Anomaly." In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edited by Philippe C. Schmitter and Gerhard Lehmbruch, 231-270. London: Sage.
- Powell, G. Bingham, Jr. 2000. *Elections as Instruments of Democracy: Majoritarian and Proportional Vis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Varieties of Democracy (V-Dem) Project. 2016. Version 6. March.
<https://www.v-dem.net>.
- Woo-Cumings, Meredith. 1999. "Introduction: Chalmers Johnson and the Politics of Nationalism and Development." In *The Developmental State*, edited by Meredith Woo-Cumings, 1-31.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Demand for Consensus Democracy Depending on Social Pluralization and Inequality in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Quality of Democracy’ after Globalization, the Financial Crisis, and COVID-19

Kim, Seok-Dong | Seoul National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Ethnic homogeneity and socioeconomic equality are conditions favorable for the formation of majoritarian democracy. Meanwhile, as social pluralization and inequality increase, consensus democracy can enhance the quality of democracy more effectively through enhancing representation than majoritarian democracy. As Korean society experiences social pluralization and socioeconomic inequality after globalization and the financial crisis,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of political reforms for consensus democracy that reflects multiculturalism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Since globalization, South Korea has become increasingly more plural due to the weakening of ethnic homogeneity, as well as the increasing influx of ethnic minorities, foreigners, and North Korean defectors. Furthermore, during state building, South Korea was an egalitarian society, but is rapidly transforming into an unequal society in the socioeconomic dimension during the era of low economic growth after the financial crisis, particularly in the post-2020 COVID-19 pandemic. Moreover, during Korea’s rapid industrialization period, polarization between center and periphery has intensified due to economic development centered o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This socioeconomic inequality has emerged as a salient issue in elections, and the transition to a semi-plural society is a potential issue. Accordingly, Korean political parties and civil society have raised agendas of universal welfare state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through discourse such as constitutional amendment.

Key Words | Social Pluralization, Inequality, Developmental State, Consensus Democracy, Quality of Democracy

한국 민족주의의 두 가지 길: 박정희와 김대중의 연설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류상영 | 연세대학교*

김민정 | 연세대학교**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모든 연설문을 텍스트 마이닝하고 관련 사료를 분석하여, 두 인물이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민족주의를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이 방법이 갖는 장점인 주요 단어의 출현 빈도 수와 동시출현 관계의 규명에 그치지 않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구체적인 정치전략, 경제정책 및 제도에 반영되고 현실화되었는지 그 역사적·정치경제적 맥락을 보다 풍부하게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연설문 분석 결과 '민족'이라는 단어는 박정희가 김대중보다 월등하게 많이 언급해 그의 정치적 담론에 민족 개념이 더 자주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두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동시출현 관계를 비교해 보면, 이들이 민족에 대해 가졌던 생각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람은 모두 민족을 통일과 문화 등의 단어와 자주 사용하였으나, 박정희는 주로 경제개발과 정신 등에 관련된 단어들과 민족을 같이 자주 사용한 데 반해, 김대중은 민주주의, 세계, 화합 등의 단어와 같이 민족을 자주 사용하였다. 박정희는 민족주의를 경제성장을 위한 정치전략으로 동원하였고, 김대중은 민족주의를 민주주의를 위한 대항전략으로 접근하였다. 청소년기에 겪었던 경험과 한국의 현실은 두 지도자가 유사한 민족의식과 정서를 공유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민족 개념이 서로 다른 역사적 시대적 맥락 및 정치동학과 결합되면 서, 그들의 민족주의는 각각 경제성장의 행로와 민주주의의 행로를 밟으며 진화하게 되었다.

주제어 | 민족, 민족주의, 박정희, 김대중, 연설문, 텍스트 마이닝

* 제1저자, 교신저자

** 공동저자

*** 자료 정리에 도움을 준 당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석사과정 김지원과 김기태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1. 문제 제기: 한국에 ‘민족’은 어떻게 살아있고 ‘민족주의’는 어떻게 진화되었는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갖든지, 민족성(national identity)이 인간과 사회의 가장 내재적인 속성의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민족이 엘리트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그리고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정치권력과 정당성의 원천으로 작용해 온 사례들은 흔하다. 한국의 역사와 정치도 민족과 민족주의의 존재와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던 사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느 시기의 어느 정치가든 민족 문제와 민족주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치지도자들은 그들이 처해있는 시간적·공간적 환경과 맥락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시간과 공간적 맥락이 만들어 낸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민족 개념이나 민족주의 전략은 그들이 처한 특별한 시간적·공간적 맥락에 깊이 배태되어 있다. 그들이 민족을 재발견하였든 아니면 상상하거나 새롭게 창조하였든, 그들이 민족주의를 정치전략으로 동원하였든 아니면 민족주의의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선택되고 부상하였든, 정치지도자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전략과 해당 사회의 민족주의는 분리되기 힘든 관계에 있다¹⁾. 물론 그 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동태적으로 발현되며, 때로는 점진적으로 때로는 혁명적으로 진화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민족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어떤 민족주의를 추구하였는지를 생생하고 정확하게 포착해 내는 일은 쉽지 않다. 더구나 그들이 추구하였던 민족주의 전략이 어떤 정치경제적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상호관

1)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수많은 학제적 연구들은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종족 상징주의(ethnosymbolism)에서는 “민족은 사회적으로 발명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Smith 2010). 반면, 근대주의 시각에서 앤더슨은 민족을 이념이 아니라 ‘상상된 정치 공동체’라고 정의하였으며(Anderson 2016), 홉스봄과 랜저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전통도 사실은 최근에 발명된 것이라는 시각에서 민족주의를 권력 강화와 충성심 유발을 위한 국가의 지배수단으로 인식하였다(Hobsbawm and Ranger 1983).

계를 밝히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언어학, 심리학, 공학 등 모든 관련된 학문 영역에서도 이 과제가 극복되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사람의 생각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그 단어가 갖는 맥락을 어떻게 분석해 낼 것인지를 밝히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연설문을 텍스트 마이닝하는 것이 대표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정치지도자들의 연설문은 그들이 가진 생각과 전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공식적인 문건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모든 생각을 다 표현할 수는 없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연설문은 자신들의 생각을 정선된 단어와 담론을 사용하여 논리적이고 공개적이며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적절한 분석 재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민족과 민족주의가 한국에서 어떻게 등장, 동원, 진화되었는지를 박정희와 김대중의 연설문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기초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박정희와 김대중은 오랜 기간 같은 시기를 살아가면서 한국의 경제개발과 근대화, 그리고 민주화에 각각 가장 큰 영향을 남긴 정치지도자들로서, 이들이 민족과 민족주의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하였고 이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치적 노선과 역할이 대조적이었던 두 지도자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하여 보여준 유사성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 같은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져온 역사적 사회적 기원과 맥락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민족과 민족주의가 정치 현실에서는 의식과 정서, 정치전략, 그리고 경제제도 등에 반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 인물에 있어서 민족주의가 어떻게 달리 발현되고 진화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아래와 같이 구성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모든 연설문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이 이루어질 것이다.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단어 빈도와 동시출현 관계가 분석될 것이고, 시기 변화에 따른 빈도수 변화와 함께 단어들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도출된

텍스트 마이닝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맥락 분석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식과 정서 수준에 집중하여 민족과 민족주의의 기원과 확산을 추적해 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박정희와 김대중 모두에게 민족과 민족주의는 하나의 뿌리로 내재되어 있었음이 강조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민족 및 민족주의가 정치적 동원 전략과 경제 제도 및 정책에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지를 구명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개념에 관한 맥락분석이 정치전략과 경제정책 등의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주요 전략과 정책 등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박정희와 김대중이 추구하였던 민족주의가 두 가지 다른 행로로 진화하는 과정과 맥락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결론에서, 우리는 민족 및 민족주의가 특정한 역사적 정치경제적 맥락과 다양하게 결합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 연구가 갖는 의의와 향후 방향 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II. 텍스트 마이닝: 박정희와 김대중의 연설문에 나타난 민족과 민족주의

언어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어떤 언어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곧 그 언어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특히 정책결정자의 언어에는 가치지향에 기반한 정책 우선순위도 함께 반영된다는 사실이 이미 언어해석학과 정책학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이창길 2010, 167). 한국에는 다양한 정책결정자들이 존재하지만, 공식적인 통치제도로써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실질적으로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므로 특히 대통령의 언어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이창길 2010, 168). 본 연구는 대통령의 언어 중에서도 연설문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가치지향과 국가 비전, 국정 전반에 대한 철학과 정책 기초 등을 전달하는 핵심

적 수단 중 하나가 연설문이기 때문이다(이창길 2010, 168; 박준형 외 2017, 58). 또한, 대통령의 능력과 영향력은 그가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얼마나 국민들을 잘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시각(Neustadt 1990)에 따르면,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분석은 정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그러나 대통령 연설문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적은 편이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자체가 직선제가 도입된 1980년대 후반에서야 비로소 시작되었으며(Chung and Park 2010, 215), 연설문에 사용된 언어들에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시도들은 2000년대를 훌쩍 넘겨 시작되었다.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²⁾의 발달에 힘입어 최근의 연구들은 단순히 단어들의 사용 빈도수를 측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단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박준형 외 2017; 이창길 2010; 조수곤 외 2015; 홍주현·윤해진 2014; Chung and Park 2010). 이러한 연구들은 연설문을 통해 특정 인물이 언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단어들을 중시하고 해당 단어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그러한 언어 네트워크의 양상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가 다시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세하게 다룬 경우는 많지 않다. 샤프너(Schäffner 1996)는 정치적 담론 분석이 언어학적 분석뿐 아니라 그러한 담론에 내재되어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사회적 체제도 함께 분석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정치 담론 분석은 정책결정자의 언어 선택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갖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기존의 한국 대통령 연설문 분석은 특정 대통령이 어떤 단어들을 주로 사용했고, 그 단어들 사이의 언어학적 관계가

2) 텍스트 마이닝이란 방대한 분량의 비구조적(unstructured) 텍스트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 정제해 준구조화 혹은 구조화된 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나 통계적 방법론으로 분석해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던 구조화되고 흥미로운 패턴과 정보, 지식 등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Feldman & Dagan 1995; Hotho et al. 2005; Tan 1999).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현상적 분석은 면밀하게 이루어졌으나, 그러한 단어들이 어떤 정치적·사회적·제도적 맥락 때문에 선택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언어적 선택이 어떻게 실제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설득하고 동원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인물이 선택하는 단어와 담론들이 어떻게 그의 가치 지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정치경제 정책 혹은 제도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대통령의 다양한 언어적 선택 중에서도 민족 혹은 민족주의와 관련된 단어들이 어떻게 정치적 동원을 이끌어 내는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되었는지를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으나 서로 매우 다른 정치적 지향과 담론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박정희와 김대중이란 두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두 사람이 연설문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단어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우선 분석한 후, ‘민족’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로 어떤 단어들과 함께 언급되는지 분석한다. 이는 두 인물이 지향했던 핵심적인 가치들을 파악함과 동시에, 민족에 관한 각자의 정치 담론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이들의 정치경제적 정책들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정희의 재임기 시절 연설문과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 전, 재임기, 퇴임기 시절 연설문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대통령들의 재임기 시절 연설문들만을 분석하는데, 이는 한국 정치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집권기간이 긴 민주화 이전의 대통령들과 임기가 5년에 불과한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의 연설문들을 단순히 비교 분석하기에는 연설문의 양적인 차이가 크다. 또한 본인의 정치 인생 중 거의 전 시기에 걸쳐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박정희의 경우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연설문만으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데 반해, 김대중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 동안의 연설문만으로는 그러한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어렵다. 특히 박정희와 김대중은 비슷한 시기에 정치적 활동을 시작했으나 동일한 시기에 한 명은 대통령,

한 명은 정권에 반대 입장을 취했던 정치인이었으므로 해당 시기의 연설문들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이 둘의 인식이 얼마나 유사하거나 달랐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효용이 있다.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단어는 대통령의 재임기 연설문에 나타나는 일반 단어들보다 그 언어가 갖는 통시적, 공시적 의미가 더 크다. 민족과 민족주의는 일반 국정 관련 단어보다, 각 대통령이 그 단어에 대하여 갖는 생각이 오래된 기원을 갖고,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적·역사적 의미가 깊으며, 그 단어가 그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이 더 심층적이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통령 재임 중의 연설문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빈도수나 순위 등을 기준으로 국정철학이나 정책 등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기존의 대통령 연설문 분석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 연구가 분석하는 연설문은 박정희와 김대중이 전 생애를 통하여 연설문 형태로 남긴 모든 글을 포함함으로써, 민족에 대한 그들의 생각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그들이 동원하거나 추구한 민족주의가 형성된 배경과 내용을 긴 역사적 맥락과 개인적 특성 및 정치 현실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다른 모든 대통령과 그들의 연설문을 비교 분석하지 않고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대비되는 두 인물에 집중한 것은 위와 같은 연구 목적과 분석 방법에서의 차별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박정희는 1965년부터 1979년까지의 연설문을, 김대중은 1966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설문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각 대통령의 연설문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함께 두 대통령이 시기적으로 동시에 활동했던 1979년 이전까지의 연설문들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박정희의 연설문은 총 1,031개이고 김대중의 연설문은 총 1,275개(취임 전 337개, 재임기 839개, 퇴임기 99개)이다³⁾. 연설문의 텍스트 분석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써 우선

3)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https://www.pa.go.kr/index.jsp>, 검색일: 2019.10.15)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연설문으로 분류되어 있는 문건을 모두

파이썬(Python)의 자연어 처리 및 문서 분석용 파이썬 패키지인 NLTK(Natural Language Toolkit) 패키지를 이용해 문장 부호로 구분된 단어들을 나누어주고, 오픈 소스 형태소 분석 엔진인 MeCab을 사용하여,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진행했다. 기호, 관사, 전치사, 조사, 접속사 등 무의미한 단어들을 제거하기 위해 불용어(stop words) 사전을 활용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들만 데이터에 남겼다⁴⁾.

1. 단어 빈도수 분석

우선 본 연구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연설문에서 시기별 단어 빈도수를 분석했다. <표 1>은 박정희의 전 임기와 김대중의 취임 전, 재임기, 퇴임 후 연설문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었던 단어들을 순서대로 30개씩 나열한 것이다. 각 단어가 몇 번 언급되었는지(빈도)와 전체 단어 중 해당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했다. 두 사람은 김대중의 대통령 퇴임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경제’ 역시 모든 시기에 걸쳐 두 대통령 모두 자주 언급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대통령 모두 재임 시기에 ‘발전’이라는 단어를 여섯 번째로 많이 언급했다. 반면 각 대통령 및 시기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박정희는 연설에서 경제(4위), 발전(6위), 건설(9위), 개발(13위), 수출(18위), 공업(23위), 공장(28위) 등 경제 개발에 관련된 단어들을 자주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은 취임 전에는 통일(3위), 북한(6위), 남북(21위) 등 북한 관련 단어들을 자주 언급했으며, 민주주의(7위), 민주(12위), 선거(19위), 독재(27위) 등 민주화와 관련된

포함하였고,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은 대통령기록관의 재임기 연설문 자료와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편집한 『김대중 전집 I, II』(총30권)에 수록되어 있고 연설문으로 분류되어 있는 문건들을 스캔하여 코딩 작업이 가능한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 4) 참고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연설문에 등장하는 단어의 개수는 박정희 연설문은 총 803,892개이고 김대중 연설문은 총 780,880개 (재임전 412,205개, 재임기 313,295개, 퇴임기 55,380개)이다.

단어들도 자주 사용했다. 반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김대중도 경제(2위), 발전(6위), 산업(22위) 등 경제 관련 단어들을 자주 언급했다. 김대중이 자주 사용한 단어들은 대통령 퇴임 이후 다시 한번 변화했는데, 이 시기에는 북한(1위), 남북(7위), 핵(8위), 한반도(9위), 통일(11위) 등 북한 관련 단어들의 언급 빈도가 크게 상승했다.

〈표 1〉 각 대통령 시기별 단어 빈도수 상위 30개 단어

순위	박정희			김대중 취임 전			김대중 재임기			김대중 퇴임 후		
	단어	빈도	비중	단어	빈도	비중	단어	빈도	비중	단어	빈도	비중
1	국민	6293	0.056	국민	6130	0.054	국민	5240	0.051	북한	1488	0.070
2	나라	4312	0.038	미국	3903	0.034	경제	4316	0.042	평화	849	0.040
3	민족	3284	0.029	통일	3896	0.034	세계	4204	0.041	미국	729	0.034
4	경제	3277	0.029	경제	3551	0.031	협력	3158	0.031	대통령	619	0.029
5	정부	3012	0.027	한국	3423	0.030	한국	3037	0.030	협력	602	0.028
6	발전	2904	0.026	북한	3422	0.030	발전	2678	0.026	세계	580	0.027
7	노력	2809	0.025	민주주의	3101	0.027	정부	2634	0.026	남북	570	0.027
8	국가	2697	0.024	정부	2791	0.025	국가	2179	0.021	핵	542	0.025
9	건설	2485	0.022	정치	2738	0.024	노력	2113	0.021	한반도	530	0.025
10	평화	2450	0.022	정권	2628	0.023	평화	2112	0.021	경제	508	0.024
11	정신	2071	0.018	대통령	2337	0.021	나라	2095	0.021	통일	478	0.022
12	조국	2058	0.018	민주	2072	0.018	개혁	1824	0.018	한국	446	0.021
13	개발	1960	0.017	세계	2029	0.018	시대	1648	0.016	국민	396	0.018
14	통일	1957	0.017	나라	1866	0.016	문화	1564	0.015	중국	373	0.017
15	사업	1876	0.017	국가	1836	0.016	대통령	1554	0.015	성공	361	0.017
16	계획	1659	0.015	민족	1741	0.015	21세기	1505	0.015	관계	361	0.017
17	추진	1532	0.014	일본	1625	0.014	감사	1496	0.015	발전	348	0.016
18	수출	1409	0.012	평화	1603	0.014	남북	1487	0.015	대화	347	0.016
19	자유	1378	0.012	선거	1582	0.014	관계	1465	0.014	민족	346	0.016
20	세계	1368	0.012	정책	1521	0.013	기업	1428	0.014	시대	339	0.016
21	농촌	1366	0.012	남북	1507	0.013	북한	1413	0.014	회담	328	0.015
22	역사	1352	0.012	중국	1484	0.013	산업	1234	0.012	해결	324	0.015

순위	박정희			김대중 취임 전			김대중 재임기			김대중 퇴임 후		
	단어	빈도	비중	단어	빈도	비중	단어	빈도	비중	단어	빈도	비중
23	공업	1344	0.012	협력	1470	0.013	성공	1195	0.012	일본	279	0.013
24	한국	1341	0.012	시대	1462	0.013	민주주의	1167	0.011	국가	242	0.011
25	힘	1334	0.012	발전	1367	0.012	한반도	1162	0.011	감사	236	0.011
26	국제	1311	0.012	자유	1334	0.012	민족	1150	0.011	합의	228	0.011
27	북한	1299	0.011	독재	1261	0.011	추진	1149	0.011	공동	216	0.010
28	공장	1274	0.011	아시아	1220	0.011	위기	1128	0.011	민주주의	210	0.010
29	근대화	1186	0.010	주장	1216	0.011	역사	1114	0.011	동아시아	201	0.009
30	국력	1110	0.010	지식	1206	0.011	지식	1103	0.011	문화	198	0.009

특히, 박정희와 김대중이 동시에 정치적 활동을 했던 1979년 이전에 각 대통령 연설문을 분석해 보면(<표 2> 참조), 박정희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경제개발 관련어들을 자주 언급한 반면, 같은 시기에 김대중은 대통령(4위), 박(9위)⁵⁾, 선거(10위), 박정희(11위), 민주주의(12위), 독재(17위), 민주(25위) 등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 대한 언급과 민주주의 관련어들을 빈번하게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6위), 일본(8위)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언급이 높은 빈도로 언급된 것도 이 시기 김대중 연설의 특징이었다. 국민과 국가·나라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자주 언급했다는 점은 유사하나, 워드 클라우드(<그림 1>,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들이 동일한 시기에 상이한 단어들을 각각 활용해 연설을 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5) “박 정희씨”, “박 대통령”, “박 정권”, “박 후보” 등의 단어들에서 “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표 2〉 1979년 이전 박정희·김대중 대통령 빈도수 상위 30개 단어

순위	박정희		김대중 1979년 이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국민	6293	국민	941
2	나라	4312	통일	546
3	민족	3284	정권	546
4	경제	3277	대통령	509
5	정부	3012	한국	496
6	발전	2904	미국	482
7	노력	2809	나라	466
8	국가	2697	일본	444
9	건설	2485	박	352
10	평화	2450	선거	322
11	정신	2071	박정희	317
12	조국	2058	민주주의	297
13	개발	1960	자유	278
14	통일	1957	정부	271
15	사업	1876	남북	269
16	계획	1659	세계	259
17	추진	1532	독재	259
18	수출	1409	정책	258
19	자유	1378	정치	252
20	세계	1368	전쟁	227
21	농촌	1366	경제	225
22	역사	1352	국가	222
23	공업	1344	평화	210
24	한국	1341	민족	203
25	힘	1334	민주	202
26	국제	1311	대한민국	179
27	북한	1299	김일성	177
28	공장	1274	공산당	167
29	근대화	1186	신문	164
30	국력	1110	돈	156

〈그림 1〉 박정희 워드 클라우드



〈그림 2〉 김대중(1979년 이전) 워드 클라우드



2. ‘민족’ 단어의 동시출현 관계 분석

단순히 각 단어의 출현 빈도만 분석하는 것으로는 어떤 의미로 해당 단어를 사용한 것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동일한 단어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언급되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족이라는 개념은 의식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층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이며, 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다층적으로 그 의미가 구성되는 단어이다(Özkerimli 2010). 따라서 연설에서 언급된 ‘민족’의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 빈도수 분석이 아닌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분석해야 하며, 이는 동시출현(co-occurrence) 분석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기존의 대통령 연설문 텍스트 마이닝 연구들은 언어 네트워크 안에서 단어들끼리의 동시출현 밀도를 분석하고 다른 단어들과 동시출현 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주요 단어들을 추려내는데(이창길 2010; 홍주현·윤해진 2014), 특정 단어가 언급되는 맥락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들끼리 같이 언급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홍주현과 윤해진(2014)이 이러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해당 연구는 대통령 후보 연설문 중 전체 단어 네트워크에서 가장 자주 다른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중심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과 주로 동시출현 하는지를 보여준다. 위의 연구는 동시출현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단어들의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유사한 접근법을 취하지만, 두 대통령이 ‘민족’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사용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층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민족’ 관련 개념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체 연설문에 나타난 동시출현 단어들을 분석하는데, 이는 연구자가 연설문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부만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정책결정자가 특정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를 모호하게 유추하는 것에 비해 더 객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출현 단어 분석을 위해서는 카운트

벡터라이저(Count Vectorizer)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한 문서 안에서 각 단어에 해당하는 노드들의 쌍(pair)이 함께 출현하는 것, 즉 이 둘의 엣지(edge)가 출현하는 빈도를 세는 방식이다. 가중치(weight)⁶⁾가 높을수록 해당 단어들의 동시 출현 빈도가 높다.⁷⁾

<표 3>의 결과를 보면, 박정희와 김대중이 ‘민족’ 관련 단어들을 어떤 다른 단어들과 가장 자주 같이 언급하는지를 알 수 있다. 김대중의 대통령 재임기를 제외하면 모두 ‘통일’이라는 단어와 ‘민족’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두 대통령 모두 재임 중에는 ‘문화’와 ‘민족’을 가장 자주 같이 언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대통령 및 시기별로 차이를 살펴보자면, 박정희는 주로 발전(5위), 민족중흥(6위), 극복(10위), 기상(25위), 단결(26위), 번영(29위), 건설(30위) 등 경제개발과 발전에 관련된 단어들과 민족 관련어들을 자주 같이 언급하는 한편, 사상(7위), 금지(8위), 정신(16위) 등 생각과 정신에 관련된 단어들과도 민족 관련어들을 빈번하게 함께 언급했다. 김대중은 취임 전과 퇴임 후에는 북한 혹은 남북관계 관련어들과 민족 관련어들을 빈번하게 같이 사용했는데, 그 예로는 통일(둘 다 1위), 평화(2위; 9위), 화해(취임 전 24위; 퇴임 후 2위), 공동체(취임 전 3위), 남북(퇴임 후 4위), 분단(퇴임 후 30위) 등이 있다. 또한 취임 전에는 민족과 민주주의의 동시출현 빈도도 14위로 높았다. 한편 재임기 때의 김대중은 화합(4위), 전체(5위), 단합(6위), 세계(7위), 협력(26위) 등 협동과 융화 관련 단어들을 민족 관련어와 자주 언급했다. 이 시기에는 도약(9위), 경제(14위), 발전(22위) 등 경제 발전과 관련된 언어들과 민족 관련어의 동시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6) 본 연구에서는 연설문에 언급된 단어들을 벡터(vector)화하여 행렬(matirx) 형태로 문장을 분석했으며 sk-learn의 CounterVectorizer를 이용해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7) MeCab의 특성 상 한자와 한글을 따로 형태소로 추출하므로, 같은 단어가 한자와 한글로 따로 카운트된 경우에는 이 둘의 가중치를 더해 조정하였다. 또한, 단어 연결의 방향(source인지 target인지의 여부)이 상관없는 undirected 네트워크이므로 같은 단어들의 조합이 순서가 바뀌어 출현하는 경우 역시 두 가중치를 더해 사후적으로 조정했다. 불용어 사전으로 걸러지지 않은 무의미한 단어들 역시 사후적으로 삭제해 보정하였다.

〈표 3〉 각 대통령 시기별 “민족” 동시출현 빈도수 상위 30개 엷지

순위	박정희			김대중 취임 전			김대중 재임기			김대중 퇴임 후		
	source	target	weight	source	target	weight	source	target	weight	source	target	weight
1	민족	문화	1061.16	민족	통일	91.62	민족	문화	72.82	민족	통일	53.15
2	조국	민족	472.28	민족	평화	90.93	민족	독립	61.84	화해	민족	41.32
3	민족	통일	424.07	민족	공동체	80.68	한국	민족	59.75	민족	운명	31.57
4	민족사	民族	350.22	민족	국가	74.24	민족	화합	46.01	남북	민족	22.77
5	민족	발전	338.05	민족	내부	68.95	민족	전체	43.21	민족	장래	18.57
6	민족중흥	民族	314.62	민족	운명	65.90	민족	단합	38.13	민족	안전	17.95
7	민족	사상	293.60	민족	세계	62.34	세계	민족	37.29	민족	안정	17.75
8	민족	금지	249.62	민족	반역자	62.02	국가	민족	35.93	민족	체험	17.75
9	민족	국가	224.47	민족	독립	58.78	민족	도약	34.28	평화	민족	17.49
10	민족	극복	213.76	민족	친일파	54.99	민족	동질	33.78	민족	자주	16.84
11	사관	민족	191.41	민족	교육	53.48	세기	민족	32.03	민족	사이	16.84
12	민족	숙원	162.99	민족	문화	53.06	민족	분단	31.21	국민	민족	14.50
13	민족	오늘	142.54	민족	장래	51.84	민족	자존	30.13	협력	민족	14.11
14	민족	양심	141.25	민족	민주주의	51.45	경계	민족	26.82	민족	공멸	13.25
15	민족	역사	139.87	민족	정부	51.32	민족	시대	25.66	민족	지적	13.17
16	정신	민족	139.66	민족	금지	45.59	미래	민족	25.20	민족	세월	12.71
17	민족	고유	133.87	민족	공멸	40.90	민족	단위	25.12	민족	선구자	12.00
18	민족	앞날	131.45	민족	중국	40.61	민족	연합	24.53	민족	적개심	12.00
19	민족	옹비	126.10	민족	의의	40.35	민족	앞날	24.28	민족	동화	11.83
20	민족	독립	112.30	민족	애정	39.27	민족	운명	23.48	민족	동화력	11.83
21	민족	과업	111.97	민족	함양	39.27	민족	예술	23.26	민족	상실	11.83
22	민족	바탕	108.02	민족	적응	39.27	발전	민족	22.94	대학교	민족	11.51
23	민족	슬기	107.91	민족	주체	38.14	민족	세기말	22.13	세계	민족	11.06
24	민족	동질	104.36	민족	화해	37.93	민족	인종	21.77	민족	사랑	10.72
25	민족	기상	98.63	민족	자본	35.08	민족	되풀이	21.56	민족	정체	10.67
26	민족	단결	96.29	민족	정권	35.08	협력	민족	20.81	민족	중국	10.67
27	민족	지상	88.08	국민	민족	34.74	민족	평가	20.69	민족	변방	10.67
28	민족	비극	86.91	민족	시대	34.65	정부	민족	20.69	민족	흔적	10.67
29	민족	번영	83.73	민족	오늘날	34.62	민족	동화	20.50	민족	여생	9.85
30	민족	건설	83.69	민족	한반도	34.44	민족	정신	19.22	민족	분단	9.74

특히 같은 시기(1979년 이전) 두 인물의 연설문을 비교해 보면(<표 4>), 이들이 민족 관련어를 상이한 맥락에서 언급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박정희는 주로 경제개발과 발전, 국가, 조국, 민족중흥, 단결, 번영, 건설 등의 단어를 자주 동시에 사용하였고, 사상, 금지, 기상 등 생각과 정신에 관련된 단어들과 민족 관련어들을 자주 같이 언급하였다. 같은 시기 김대중은 정권(3위), 반민주(4위), 작태(7위), 민주주의(8위) 등 민주주의 관련어들을 활용해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민족 개념을 말했다. 또한 이 시기 김대중은 행복(11위), 사랑(12위), 세계주의(24위) 등 개방적인 감정을 뜻하는 단어들과 민족을 함께 자주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는 같은 시기 결의를 다지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고 개방적이거나 화해와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민족 관련어들을 함께 언급한 적이 없어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 같은 차이점은 한국 사회가 처한 역사발전의 단계와 박정희와 김대중의 성격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 가난과 저개발의 초기 조건에서 국가를 운영해야 했던 박정희의 전략, 리더십 형태, 개인적 기질 등과, 대중 참여를 주장하면서 형평 등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였던 김대중의 전략과 종교적 인생관 등이 그들이 선택한 언어 구성의 차이에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 1979년 이전 박정희·김대중 대통령 “민족” 동시출현 빈도수 상위 30개 옛지

순위	박정희			김대중 1979년 이전		
	source	target	weight	source	target	weight
1	민족	문화	1061.16	민족	역사	43.67
2	조국	민족	472.28	민족	교육	40.73
3	민족	통일	424.07	민족	정권	38.86
4	민족사	民族	350.22	민족	반민주	35.56
5	민족	발전	338.05	초월	민족애	34.00
6	민족중흥	民族	314.62	입각	민족애	34.00
7	민족	사상	293.60	민족	작태	32.06
8	민족	공지	249.62	민족	민주주의	29.08
9	민족	국가	224.47	민족	동일	28.27
10	민족	극복	213.76	민족	공산당	28.27
11	사관	민족	191.41	민족	행복	27.50
12	민족	숙원	162.99	민족	사랑	27.50
13	민족	오늘	142.54	민족	전투	26.14
14	민족	양심	141.25	활용	민족중흥	26.10
15	민족	역사	139.87	발휘	민족중흥	26.10
16	정신	민족	139.66	민족	의의	25.28
17	민족	고유	133.87	민족	의미	25.28
18	민족	앞날	131.45	민족	처음	25.28
19	민족	웅비	126.10	민족	공화	22.05
20	민족	독립	112.30	민족	운명	22.05
21	민족	과업	111.97	민족	도야	21.15
22	민족	바탕	108.02	민족	나라	20.33
23	민족	슬기	107.91	主義	민족	19.24
24	민족	동질	104.36	민족주의	세계주의	18.50
25	민족	기상	98.63	발견	민족주의	18.50
26	민족	단결	96.29	민족	세계	18.08
27	민족	지상	88.08	민족	능력	17.50
28	민족	비극	86.91	민족	본질	17.50
29	민족	번영	83.73	민족	배척	17.50
30	민족	건설	83.69	민족	급증	17.36

III. 의식과 정서에 나타난 민족과 민족주의: 같은 뿌리

위에 분석된 바와 같이 박정희와 김대중의 연설문에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민족주의가 그들의 사고, 정치전략, 그리고 정책과 주요 제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연설문에 자주 등장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들의 의식과 정서에 어떻게 각인되었을까? 그리고 민족이라는 단어로 집약되는 두 인물의 의식에서 가장 밑바닥에 공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요소는 무엇이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은 당시 한국 사회에 존재하던 민족과 민족주의의 기원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박정희시기에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정치전략으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에는 별 이견이 없다(최연식 2007; 김동노 2010). 하지만 모든 민족주의가 근대화 정치전략으로 동원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무엇이 이 같은 동원을 가능하게 하였는지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역사적 맥락과 정서적 요인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물론 박정희와 김대중의 민족주의를 제대로 그려내는 데 그동안 국내외에서 진행된 많은 학술적 연구들과 이론적 논쟁들이 도움이 된다. 서구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사례로 진행된 연구 쟁점은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첫째, 민족과 민족주의의 발생 순서에 관하여 민족이 민족주의를 촉발했다는 견해(Smith 2010)와 민족주의가 민족을 창조했다는 견해(Gellner 1971, 169; Tamir 1995)가 대립하고 있다. 이는 민족의 속성이 영구히 존재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출현하는지 등의 논쟁으로 연결된다. 둘째, 민족주의가 정치적 이념인지(Roshwald 1993), 아니면 문화적 현상인지(Anderson 2016)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즉, 민족주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고안된 이념이라는 주장과 영속적이고 특수한 문화적 현상이라는 주장이 대비된다. 셋째, 민족주의와 근대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민족주의가 근대화를 추동하였는지, 아니면 근대화의 결과로 민족주의가 발달하였는지에 대한 논쟁(Conversi 2008; Bergholz 2018)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민족주의가 합리적인지 비

합리적인지의 논쟁과도 연결된다. 넷째, 민족주의를 근대화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인정하더라도 민족주의와 근대화의 동태적인 관계가 주로 정치적 영역에서 나타나는지(Breuilly 1993), 아니면 경제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Jaffrelot 2003). 다섯째, 민족주의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쟁과 이론적 분석들이 존재한다 (Greenfeld 2001; Narin 1997).

한편, 최근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한국 내 연구들은 주로, 민족주의를 동원한 주체가 누구인지와 민족주의의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민족주의의 성격과 시대별 특성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정훈(2020)은 한국에서 종족적 민족주의가 시민적 민족주의로 진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고, 김경일(2020)은 ‘한국적인 것’과 근대 형성을 비교역사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김동노(2010)는 박정희의 민족주의를 개발독재 체제를 위한 도구적 민족주의라고 정의하였고, 김대중의 민족주의는 세계화에 적응하기 위한 실용적 민족주의로 규정하였으며, 문상석(2018)도 박정희의 민족주의를 개인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주장하였다. 홍석률(2002)은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를 관 주도 민족주의로 규정한 반면, 이에 반대한 민족주의의 흐름을 대중적 민족주의로 정의하여 비교하였다. 박의경(2015)은 한국의 민족주의는 국가로의 통합과 민족의 통일을 지향한다고 전제하고, 한국의 민족주의를 이승만의 일민주의, 박정희의 경제적 민족주의 그리고 장준하의 통일민족주의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김수자(2006)는 1987년 민주화 항쟁 이전과 이후의 한국의 민족주의를 위로부터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통일 민족주의로 분류하였다. 문정인(Moon 2012)은 시기별로 민족과 국민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주목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기욱(Shin 2006)은 한국의 민족주의에서 종족적 핏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제임스 프레다와 이기홍과 같이 공저한 논문(Shin et al. 1999)에서는 핏줄이 여전히 민족주의의 핵심 요소이고 분단현실에서 민족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그룹 내의 긴장이 더 고조된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위의 연구들이 한국 민족주의의 다양한 형태와 내용, 그리고 이의 시대적 변화를 밝히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특정한 역사적 인물이나 정치지도자가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였고 민족주의를 어떻게 동원 내지는 실현시켜 나갔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박정희와 김대중의 민족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청소년기부터 갖게 된 민족에 대한 생각과 이를 자신들의 민족주의로 개념화하여 정치적 전략과 문화적 패턴으로 동원 내지는 확산해 나가는 구체적 행로와 정치경제적 결과들은 미시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연설문을 텍스트 마이닝하여 민족이란 단어의 빈도수와 연관어를 분석하면서, 두 인물이 남긴 연설문 이외의 다른 자료들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이 갖게 된 민족에 대한 생각과 그들이 각각 구현하고자 한 민족주의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밝히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정희와 김대중이 남긴 연설문과 연설문 이외의 다른 형태의 글들을 보면, 두 지도자의 정치전략이나 철학의 차이와 무관하게, 당시 한국 사회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던 의식적 정서적 성격과 민족주의의 기원에 대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현재까지 찾을 수 있는 김대중의 글 중에서 그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이 가장 처음 본격적으로 표현된 문건은 1954년 1월 7일에 <새 별>이라는 잡지에 발표된 “갑오년 2대 과업: 자조의 노력으로 통일과 민생 해결”⁸⁾이다(김대중 1954). 이 글에서 당시 청년 김대중은 “민족의 운명과 사활을 좌우할 중대 문제로서 국토통일과 경제재건으로 민생의 안정을 기하는 두 가지를 들지 않을 수 없다...통일을 열원하는 민족의 초초한 심정이 어찌 절치액완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통일의 주체자는 우리 한국민족이다.”라고 민족 개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같은 민족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

8) 김대중은 이 글에서 “우리는 재건에의 함마아를 내리기 전에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할 것인가 경제의 방향부터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이후 나타나게 될 박정희의 경제전략과의 차이가 잉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39).

스스로 살 길을 찾고자 말겠다는 자조의 정신과 노력이 확고할 때에만 우방은 우리와 더불어 통일과 부흥의 대업을 도와주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자조정신과 자주외교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한편,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를 감행하기 직전 매형인 한정봉에게 보내 편지 속에 쓴 “국민에게”라는 시에서, “황파에 시달리는 삼천만 우리 동포, 언제나 구름 개이고 태양이 빛나리, 천추에 한이 되는 조국질서 못 잡으면, 내 민족 앞에 선혈 바쳐 충혈 원혼 되리라”라고 그의 마음을 피력한 바 있다(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17, 26)⁹⁾. 물론 글로 나타나지 않고 그 이전부터 머릿속에 담고 있던 박정희와 김대중의 생각을 온전히 그려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활자화된 위의 글들의 내용만을 보면, 민족의 비원으로서 통일과 경제재건,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조와 자주외교의 전략 등에서는 두 지도자의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그만큼 식민지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당시 엘리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 사이에 소위 “민족적 비원의 성취”를 향한 정서와 의식의 공감대와 연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정희와 김대중은 모두 성장 과정에서, 당시 조국과 민족이 처해있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적 정서나 의식을 일깨워 줄 많은 개인적 계기들을 경험하였던

9) 박정희는 1917년생으로 1924년생인 김대중보다 7년 연상이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오랜 기간 군인 생활을 하였기에 사회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밝히는 글은 거의 없다.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 이전에 주로 자연이나 개인적인 일상을 표현한 일기나 시를 남겼다. 1934년에 쓴 시 “금강산”이나, 1953년 12월 31일에 이순신 전기를 다 읽고 적은 일기 “북진통일” 등이 그것이다. 박정희가 정치와 사회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960년 4월 23일 동래 범어사에서 열린 4.19 혁명 희생자 위령제에서 군수기지사령관으로서 연설한 조사였다. 이 조사는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위하여 꽃다운 생명을 버린 젊은 학도들이여!...”로 시작되어 “여러분이 흘린 고귀한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여러분이 못 다 이룬 소원은 기필코 우리들이 성취하겠습니다”로 마무리되었다 (김종신 2011, 54). 5.16 이후 4.19에 대한 상징들을 지우고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5.16 직후 박정희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의 어머니 권찬주에게 서대문에 조그마한 집을 마련해 주었다는 증언은 흥미롭다(김춘복 2010).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 기간 동안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급기야 4학년 때는 73명 중 73등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본인 상급생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일본의 대륙침략과 식민지 전략이 노골화된 상태에서 대구사범의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일본 치하에서 성적만 우수한 것을 싫어했다고 한다(조갑제 1992, 67). 심지어 만주군관학교에서도 중국인과 한국인 생도들에게는, 일본 생도들과 달리, 쌀이 섞이지 않은 수수밥이 제공되는 식사차별이 일상화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나마 민족감정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정희는 1939년 문경공립보통학교 교사시절 학생들에게 한국어, 태극기, 한국 역사 등을 비밀스레 가르쳐 '불온교사'를 자처하기도 하였고(정운현 2004, 60), 일본인 교장을 구타하고 만주행을 결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일화들은 박정희가 개인적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과 민족적 현실에 대한 울분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조갑제 1992, 69; 정운현 2004, 72). 한편 김대중도 1936년부터 다닌 목포제일공립보통학교 4학년때 일본인 상급생을 구타하고 그 일로 학교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결석이 잦았고 성적이 하락하는 등, 민족적 차별에 대한 울분을 표출한 바 있다(NHK 취재반 1999, 36-38). 이 같은 일화들은 많은 식민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고 느끼는 상황들로서 민족정서나 의식을 일깨우는 계기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굳이 민족주의란 개념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특정한 정치전략에 따른 동원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대다수의 식민지를 겪은 청소년들에게 민족이라는 이미지나 개념, 정서, 그리고 의식 등이 싹텄고 살아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식민지 청소년에게 일제는 반감의 대상임과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었다. 박정희가 “긴 칼 차고 싶어서”(조갑제 1992, 84) 선택하였던 만주는 당시 식민지 청년에게 심리적 불만을 해소하고 출세를 도모할 수 있는 미지의 개척지일 수 있었다. 군인이란 직업을 동경하였던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혈서를 두 번이나 쓴 것(Eckert 2016, 97)도 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행위였다. 대구사범 동기인 황용주의 증언에 의하면, 박정희가 일본육군사관학

교에서 보았던 거대한 공업시설과 세계 최대 전함,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전투기는 박정희의 뇌리에 하나의 꿈으로 각인되었고 이것이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실현되었다는 것이다(조갑제 1994, 96-97; 안경환 2013). 한편 김대중도 하의도에서 목포로 이사한 후 목포항을 오가는 일제의 군함과 상선들을 보면서 “참 일본은 저렇게 힘이 세구나” 하고 일제의 존재를 실감하고 압도당한 바 있다(김대중 2006.07.27). 그리고 김대중도 너무 갑갑한 국내 현실에 좌절하여, 당시 한국인 식민지 청년들이 근대 문물을 배우고 관료로서 출세할 수 있는 첩경이었던 만주 건국대학교로의 진학을 고민한 바 있었다(김대중 2006.09.11; 김경재 2016, 34-37). 식민지 조국에서 겪었던 가난과 차별적 성장 환경, 출세욕 등 성격적 특성, 그리고 시대적 맥락 등이 한 개인의 정치적 선택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 박정희와 김대중의 서로 다른 정치행로도 이 같은 배경들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¹⁰⁾. 향후 서로 다른 정치적 행로를 걷게 된 박정희와 김대중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식민지 청소년으로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간직한 민족적 정서나 의식이 사라지기 힘든 민족주의의 뿌리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10) 민족과 민족주의의 기원 및 확산과 관련하여 식민지 경험은 의미있는 이론적 쟁점의 하나이다. 유럽에 의한 식민지 경험을 사례로 식민지와 민족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식민지 권력이 통치를 위하여 특정 종족 집단을 만들었다”는 견해(Calhoun 1997), 특정 종족에게 더 많은 권력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유발하고 관제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를 정착시키려 했다는 해석(Von Oppen 1994), 이에 저항하고자 하는 종족의 리더들은 집단적 정체성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게 되었다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Hobsbawm and Ranger 2017). 또한 “반식민주의 민족주의는 국가권력을 잡으려는 시도”로서 경제사회적 차별이 없어도 민족주의가 발생한다는 정치적 해석이 있는 반면(Breuilly 1993), 경제사회적 배경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경제사회적 차별이 소멸되더라도 종족적 갈등은 소멸되지 않는다 견해(Jeffrelot 2003)가 있다. 일본은 식민지 한국에서 일본화된 한국인을 만들어 제국과 민족의 불일치를 숨기려 관제 민족주의를 구사하였는데, 한국 민족도 본능적으로 ‘외래의(foreign)’ 통치에 대하여 저항적이었다(Anderson 2016, 109-111). 식민지를 경험한 비유럽국가의 민족주의를 분석한 차터지는 식민지에서 누가 공동체를 상상하는가 라는 논점을 새로이 제기하면서, 해당 민족이 서구의 물질적인 근대성은 받아들여되 민족의 고유한 정신은 보존하였다고 주장하였다(Chatterjee 1993).

IV. 정치전략과 경제제도에 나타난 민족과 민족주의: 두 개의 행로

동일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아직 각자의 정치전략이 구체화 되기 이전의 소년과 청년으로서, 박정희나 김대중이 가졌던 민족정체성이나 민족의식 및 정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동일한 민족성과 당시 한국이 처했던 정치경제적 현실 속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이 정치인으로서 초기에 상상하거나 실행한 몇 가지 정책들에서도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민족적 비원으로서 민족의 통일을 당위적인 목표로 지향한 사실, 농업 육성과 수입대체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한 산업화 전략, 국제무대에서 자주외교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민족적 의지 등이 그것이다¹¹⁾. 하지만 민족정서 차원에서의 동질성이나 초기 정책에서의 상당한 유사성(류상영 2013, 151-153)에도 불구하고, 제2

11) 어떻게 민족이 상상되었고, 이것이 정치적 힘을 가진 민족주의로 발전하였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는 한국의 민족주의 분석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네덜란드의 식민지 경험과 일본에 의한 간섭이라는 이중고를 경험한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건국 영웅으로 불리고 인도네시아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였으며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비동맹외교와 교도민주주의를 주창했던 수카르노의 사례는 앤더슨의 민족주의 연구에 좋은 소재였다. 앤더슨은 초기 연구에서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수카르노와 우호관계에 있었던 공산당과 일부 군부의 쿠데타 시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수하르토의 반격 쿠데타 및 이어진 극단적 폭력과 학살에 대한 현지 경험 분석에서, 이 정치격변은 공산주의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국 제국과 구제도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군부내 장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 사건의 배경으로 인도네시아내 자카르타 등 서구화된 도시와, 자바 지역의 전통적이고 가난하며 급진적-민중주의적인 사회 사이에 존재 하였던 큰 문화적 간극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은 반공을 내세워 정권을 장악한 수하르토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시각으로 비쳐 앤더슨은 1998년 수하르토가 실각될 때까지 입국이 금지된 바 있다. 그는 이어진 박사논문에서, 네덜란드 군대와외 전투와 독립혁명 시기(1944-1946) 자바섬 지역내 빈곤사회에서 나타난 청년 엘리트들의 급진적이고 민중주의적 활동은 단지 경제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으로만 설명하기는 힘들고, 당시 엘리트를 대중 속으로 파고들게 한 정당 및 각종 조직에서의 경험에 기원하였으며, 이것이 민족을 상상하게 하고 민족의식과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문화적 뿌리가 되었으며, 민족주의가 실질적인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Anderson 2016, 120-122; Bergholz 2018, 520).

장의 연관어 분석에서 민족이란 단어가 각각 다른 개념들과 더 자주 사용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박정희와 김대중은 곧 서로 다른 민족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다.

1. 경제개발과 민족주의: 박정희의 행로

박정희에게 있어서 민족주의의 핵심 전략이자 목표는 경제개발이었다. 박정희가 전체 연설에서 사용한 단어 중 민족은 3번째로 빈도수가 높아, 박정희가 정치 현장에서 민족주의를 많이 동원하였고 민족 개념이나 민족주의가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박정희의 연설에서 경제(4위), 발전(6위), 건설(9위), 개발(12위) 등의 단어들의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¹²⁾. 이 같은 차이는 동시 출현 단어 분석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다.

박정희가 생각하였던 민족주의는 그가 당시 주요한 정치사건이나 사회현실 등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전략 및 정책들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선,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에 대하여 “민족의 영구혁명”(박정희 1963, 27) 이라고 규정하였고, “5.16 군사혁명의 핵심은 ‘민족의 산업혁명’과 ‘민족국가의 중흥창업’에 있다”(박정희 1963, 259)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박정희는 1964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오늘 우리의 주변이 모든 부면에 걸쳐 「빈곤」이라는 먹구름 속에서 생기를 잃은 무기력과 침체된 양상을 시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 혼돈과 침체 속의 후진의 굴레에서 결연히 벗어나 우리의 조국을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의 정신적 혁명을 기조로 정치적 정화운동, 사회적 청산운동, 경제적 검약증산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대혁신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박정희 1964.01.10). 그에 의하면, 부정적 전통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민족의식이나 민족성도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12) 연설문에 등장한 단어들의 전체 순위를 보면 김대중의 경우, 경제(4위), 발전(25위), 개발(183위), 건설(304위) 등으로 나타났다.

가 1964년 8.15 경축사에서 언급하였듯이, 박정희에게서 민족의 재창조는 “민족의 기백과 정신이 더욱 새로워져야” 가능한 것이었다(박정희 1964.08.15). 1969년 10월 3일 개천절 경축사에서 박정희는 “한 민족의 성쇠는 전적으로 그 시대를 창조하는 국민들의 정신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박정희 1969.09.03).

박정희는 그가 말한 ‘민족의 산업혁명’과 ‘민족중흥’을 위하여 국가주도의 수출지향형 산업화 전략과 대기업이 중심이 된 중화학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농업 위주의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은, 1964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안이 수정되면서, 중단되었고 더이상 박정희 민족주의의 핵심 경제전략이 될 수 없었다.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그가 1962년에 비밀리에 추진하였다가 좌절된 통화개혁은, 박정희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안을 수정하여 내포적 공업화 전략을 포기하고 수출지향형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류상영 2020). 대기업 중심의 압축적인 공업화와 수출지향형 전략은 경제 분야에서 박정희 민족주의의 핵심 내용으로써 그의 임기 내내 지속되었다. 박정희는 1967년 제4회 수출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더 분발해서 수출을 제일주의로 하는 수출입국(立國),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빨리 우리 산업의 근대화, 산업의 공업화를 달성하고 그것이 실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수출산업의 성장과 수출고의 증대, 여기에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박정희, 1967.11.3). 아울러 그는 1967년 대전 유세에서, “투자효과가 크고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른 대기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키워야 한다”(박정희 1967.04.17)고 덧붙였고, 같은 해 저축의 날 담화문에서는 내자동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이 같은 주장들은, 이전 정부들에 대한 그의 비판적 대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끈질긴 사대주의와 환상적 대응책이 70년대 한국 민족주의가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병폐”라는 진단에 기초하였다(박정희 1967.09.15).

박정희의 경제적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은 그가 지향한 정치체제 혹은 민주주

의 개념으로 연결되었다. 미국식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거부하면서 구 정치인들의 생각을 가시적 민주주의 혹은 사대적 민주주의로 비판한 박정희는 1963년 9월 5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서울고등학교 교정에서 열린 첫 유세 연설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공식화하였다(김종신 2011, 236-237). 그는 근대화는 공업화와 산업개발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 서구식 민주주의는 맞지 않고 가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주의, 사상, 정치제도를 우리의 체질과 체격에 맞추어야 한다. 우리식 민주주의, 즉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김종신 2011, 289). 이 같은 생각은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의 기획과정에서부터 많은 생각을 공유하였던 대구사범 동기생인 황용주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다. 부산일보 주필이자 편집국장으로서 황용주는 “아시아에서는 독재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한 정부의 주도 아래 경제개발을 리드해야만 한다. 미국식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민간주도로 해서는 백년하청이다”라는 확신을 박정희와의 만남에서 수차례 피력하였고 박정희도 이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였던 것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36). 1967년 “자립에의 의지”라는 방송연설에서, 박정희는 “민족적 민주주의의 제1차적 목표는 자립에 있습니다. 자립이야말로 민족주체성이 세워질 기반이며, 민주주의가 기차 영생할 안주지”라고 하면서 “자립에 기반을 두지 않은 민족주체성이나 민주주의는 한갓 가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신조라고 밝혔다(박정희, 1967.04.15). 1970년 신년사에서 박정희는 “한국 민족주의는 밖으로 자주적인 주체의식을 앞세우며 안으로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더욱 신장하고 토착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박정희 1970.01.01). 제2장의 단어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정희가 연설에서 사용한 단어 중에 민주 혹은 민주주의가 자주 등장하였고 민주주의가 민족이란 단어와의 연관성도 높다. 이 같은 단어의 연관성은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화, 유신체제 등으로 대표되는 박정희의 경제전략이나 권위주의의 비민주성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을 고려하면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연설문

이나 다른 인쇄물 등에서 민주 혹은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자주 등장하는 배경에는 바로 위와 같은 민족적 민주주의론에 대한 그의 생각과 전략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화 과정에 있던 당시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박정희의 정권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의지와 전략, 이를 구체화할 대표적인 경제제도와 정책들의 실행은 그의 민족주의를 확산시키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박정희의 민족주의와 민족적 민주주의는 국민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그의 한국적 근대화를 추동하는 이념이 되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민족주의를 확산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운동으로서 재건국민운동을 시작하였고, 정치적으로 공화당을 민족주의의 동원 기구로 활용하였으며, 새마을운동도 농촌 지역에서 정신적 경제적 근대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박정희는 1967년 재건국민운동 창립 3주년 기념 치사에서 “모든 근대화작업은 국민정신의 근대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는 근대화의 원동력으로서 국민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박정희 1967.08.05). 박정희는 또한 자립경제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근대화 운동으로서 제2경제 운동을 추진하였는데, 공화당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정치적 조직이 이 운동의 추진에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968년 “제2경제 운동 실천 국민 쉼기대회 치사”에서, “제2경제 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지상 명제인 조국근대화와 민족의 중흥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적 주체의식을 확실히 하자는 운동이요, 사회적 연대의식을 투철히 선양하자는 운동이며, 미래에 밝은 비전을 가진 새로운 정신자세로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자는 운동”(박정희 1968.09.28) 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시 인간개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의 민족주의의 한 축으로 민족통일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1968년 공화당 당원에게 보내는 특별담화에서, 그는 “우리의 궁극적인 국가 목표는 우리 민족의 재통일”이며 “민주적인 통일 국가의 성취야말로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박정희 1968.08.15) 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1966년 대통령 연

두교서에서 박정희는 경제발전과 조국근대화가 남북통일을 위한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민족주의를 종족상징주의 혹은 원초적 민족주의, 아니면 근대화 민족주의 등 어느 시각에서 접근하든, 당시 한국의 일반 국민이나 정치지도자들에게 남북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은 저버릴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일 민족과 국가라는 민족의 상징성을 충족시킬 목적이든 혹은 같은 혈연으로서 민족이 합쳐야 한다는 사라지기 힘든 원초적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근대화 경쟁에서 승리하고 국민국가를 정치적으로 완성하기 위하든, 민족통일은 박정희의 민족주의에 매우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냉전이 고조되고 남북체제 경쟁이 본격화되었으며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박정희가 밝힌 남북통일은 승공 혹은 멸공을 통한 민족통일이었고, 경제개발 경쟁에서의 승리는 민족통일을 위한 첫 단계의 과제였다. 1972년 남북 공동성명도 이같은 민족적 여망과 정치적 전략이 합쳐져 선택된 정책이었다고 해석 가능하다.

다른 한편, 박정희는 집권 이전부터 한국 군부와 한미관계에 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김종신 기자와의 대화에서, “우리 군대는 우리 국민만을 지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자유우방의 일원으로서 희생적으로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요. 원조를 얻어 먹어도 배짱을 튼겨 가면서 얻어먹을 수 있는데, 왜들 꼴사납게 꼬리를 치는지 모르겠어!”(김종신 2011, 90)라고 말하면서, 한국군 장성들의 저자세와 미국의 소극성 및 오만함에 분노하였다고 한다. 1961년 11월 박정희는 집권 이후 미국을 첫 방문하여 케네디 대통령과 회견을 하는 자리에서도 검은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으로서 외교적 결례일 수 있지만 당시 당당한 자주외교의 상징적 행동 (김관수 2011, 131; 안경환 2013)으로 비쳤는데, 이러한 행동은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가 개인적으로 지켜내고자 한 민족적 자존심과 오기를 표현한 것이지도 모른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말부터 민족적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포항제철 건설(Rhyu and Lew

2011), 1970년대 주한 미군 철수를 계기로 박정희가 추진한 자주국방과 핵개발 시도 등은 그의 민족주의적 의식이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발현된 경우라 할 수 있다.

2.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김대중의 행로

김대중에게 있어서 민족주의의 핵심 전략이자 목표는 민주주의였다. 김대중의 연설문 전체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는 박정희와 동시대였던 1979년까지를 보면 전체 단어 중 26위로, 박정희의 3위에 비하여, 그 빈도수가 낮은 편이었고, 대통령 재임기에도 16위, 퇴임기에도 19위로 매우 자주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만큼 김대중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박정희에 비하여 덜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반면, 재임전 김대중이 연설에서 사용한 단어 중 민주주의와 민주는 각각 7위와 12위를 기록하였다¹³⁾. 그리고 김대중이 민족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한 단어는 문화, 통일, 민주, 세계, 평화, 민주주의 등이었다. 이 단어들은 김대중이 간직하고 추구하였던 민족주의의 내용, 그리고 이를 실현할 정치전략과 경제제도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의 민족주의는 정치권력을 이미 쥐고 있던 박정희가 동원하였던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민족주의는 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원되기도 하지만 정권을 비판하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이념이나 전략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김대중은 박정희가 동원한 민족주의와 이에 기초한 각종 정책과 경제적 제도들이 갖는 약점과 한계를, 자신이 제시하는 새로운 민족주의와 경제정책 및 제도를 통하여 비판하고 대체하고자 하였다. 김대중은 이미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가 민족주의라는 아젠다를 선점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민족 혹은 민족주의라는 동일한

13) 연설문에 등장한 단어들의 전체 순위를 보면, 박정희의 경우, 민주(93위), 민주주의(238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단어를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은 피하면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경제 정책을 자신의 논리로 재해석하여, 박정희의 민족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정치적 담론 및 이념에 대항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김대중은 “민족의 에너지에 방향을”이라는 <인물세계> 1970년 기고문에서, 1960년대에 박정희가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실시한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박정권이 60년대에 저지른 배리와 기만을 분쇄하고 민족의 에너지가 분출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결집해서 거대한 폭발을 실현하는 것으로 최대의 사명”으로 제시하면서, “우수한 자질과 개발된 두뇌와 근면한 개성을 가진 우리 민족은 올바른 전진의 방향을 잡는다면 틀림없이 위대한 행복을 차지할 자격을 가진 민족이다”라고 주장하였다(김대중 1970a).

김대중이 생각한 한국의 민족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개조되거나 재창조되어야 할 대상도 아니었다. 김대중은 “우리 민족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1981년 9월 30일자 옥중서신에서 역사상 나타났던 우리 민족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되게 비교하면서, 우리 민족이 세계 어느 민족에 비해서도 큰 손색이 없는 기본적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만이 유리하게 특별히 뛰어난 민족도 아니라는 점을 차분히 기술하고 있다(김대중 2000, 112-120; 임진영 2015, 71-72)¹⁴⁾. 김대중은 박정희와 대조적으로, 가난의 한에 대한 절박함이 심하지 않았고, 한국 민족의 역사나 문화가 남긴 부정적인 유산에 대하여도 문화적 상대성이나 다양성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예를 들어, 김대중은 우리 민족과 역사에 남긴 유교의 영향에 대하여도 유교의 문약성을 지적하기 보다는 유교 철학에 내재된 민주주의 이념을 재발견하고자 하였다(Kim 1994). 그리고 그는 민족적 애환과 슬픔이 스며있는 아리랑에 대하여도 패배주의와 운명론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문화적 자산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Rhyu 2015, 33-37). 그에게는 가난의 한을 풀기 위한 경제개발 보다 독재의 한을 풀기 위한 민주주의가 더 중요한 민족주의의 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한국 민족주의의 목

14) 김대중은 이 글에서 우리 민족의 단점의 하나로 진취성의 결여를 꼽았는데, “민족의 진취적 의욕을 고취한 점은 박대통령의 공”이라고 적고 있다.

표를 설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제도나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민족과 계급을 분리하여 사고함으로써¹⁵⁾ 민족 혹은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가려질 수 있는 노동운동의 비민주적인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즉 김대중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남북을 통일하고 한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수호해야 할 민족적 지상명령을 등한히 한 점”을 비판하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집권과 독재의 도구로 민족주의를 이용하면서 노동자들은 이중으로 악용과 희생을 당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김대중 1955.10.01).

김대중은 자신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으로 대중경제론과 대중민주체제를 주장하였다. 그는 1971년 그가 대통령선거에 신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중경제연구소 이름으로 간행된 선거자료집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김대중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서구적 대중사회의 기반을 갖지 못하고 불안정한 중산층만 존재하는 과도적인 사회에 속하며, 한국 경제는 관료적 독점자본과 전근대적 상업자본의 성격이 강한 이중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김대중은 소수 특권 세력을 제외한 국민 계층의 연대를 통하여 한국적 대중민주주의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전략으로 “민족경제의 자립 자주를 위한 자립적 국민경제(내포적 공업화)에 의한 자율적 재생산구조”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박정희의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화를 비판하고 민족자본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공업 우선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는 “선진제국과의 승산없는 충돌만 초래하고 우리의 능력에도 겨운 중화학공업 분야보다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

15)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 정리한 전체 단어의 빈도 분석을 보면, 1979년 이전까지 김대중은 노동자(75위)와 노동(363위)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고, 근로자(2021위)와 근로(1658위) 등의 단어는 덜 사용하였다. 반면, 박정희는 노동(869위)과 노동자(1194위) 단어를 선호하지 않았고, 근로자(267위)와 근로(1195위)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하였다. 김대중은 민족을 무시하고 계급을 강조한 공산주의도 비판하였지만, 계급의 문제를 무시한 채 민족주의의 명분 아래 국가 주도로 독점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박정희의 전략에 대하여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가 노동, 중소기업, 중산층, 독점금지법 등에 대하여 자주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야에 주력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분업관계를 확립하여 한없는 발전과 수입의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대항논리를 주장하였다(류상영 2013, 154-159). 그리고 1970년 사상계 신년호(김대중 1970b)에서 김대중은 “이 나라의 근대화를 가장 올바르게 추진하고 우리 국민대중을 사이비 민주시민으로부터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전환,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의 대안이 대중민주체제라고 확신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박정희 정부에 의해 3선개헌이 이루어지고 개발독재 체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박정희의 ‘한국적(혹은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은 민족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동원하기에 힘든 처지였다. 이미 현직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박정희가 민족주의를 선점하여 동원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현실 속에서, 김대중이 유사한 동원 전략을 채택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더구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김대중으로서는 같은 단어인 민족주의를 그의 정치적 경쟁자와 유사하게 동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당시 한국 사회에는, 어떤 개념이나 목적이든, 민족 및 민족주의가 갖는 정서적 반향과 정치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시대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김대중은 민족과 연관성이 큰 정책이나 사건에 집중하여 그가 생각한 민족주의를 차별화시키고 확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1970년 신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가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행한 김대중의 아래와 같은 연설 내용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족적 정서나 민족주의에 호소하고자 하는 그의 정치적 전략이 보인다. “나는 신민당 정권의 외교방향으로 민족외교를 제창합니다. 외교의 목적은 민족의 영예와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과 협조하고 평화에 기여하면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제1차적으로 추구하는 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협조는 우리 외교의 기본이며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는 어디까지나 민족의 이익과 주체성을 견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김대중 1970.10.16). 그가 사

용한 민족외교 개념은 이 연설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박정희 정권이 반민족인 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김대중은 신민당으로의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굴욕적인 한일협정과 국토방위를 무시한 월남파병을 박정희가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하여 민족이익을 버린 반민족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대중 1967.04.01). 그리고 1971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은, “박정권이 추구하는 있는 것은 진정한 민족 외교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정권 안보에 불과하다... 진정한 민족의 안보는 국민이 정부를 얼마나 지지하며 그 정부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만큼 피 흘릴 각오가 돼 있느냐의 정도에 좌우된다... 박정권은 민족안보의 주도적 담당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진정한 민족주의를 위하여 민주주의가 필수불가결함으로 강조하였다(김대중 1971.01.23).

원초적 민족주의나 종족 상징주의 등 서구에서 논의되는 민족주의 이론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나라에서나 역사적 사회적으로 누적되어 형성되고 살아 있는 민족정서나 민족주의적 열망은 쉽사리 사라질 수 없는데, 한국의 경우 특히 위기 시에 민족주의적 열망과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1997년 경제 위기를 맞은 한국에서 일어난 금 모으기 운동은, 결코 경제적 합리성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민족적 정서가 국민적인 민족주의 운동으로 발전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Rhyu 2015, 59-64). 많은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의 재현으로 인식하였는데, IMF 관리 체제 하에서 민족의 잃어버린 경제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금 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는 위기극복과 총체적 개혁을 추동하기 위하여 제2 건국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박정희가 실시하였던 새마을운동과 비슷하게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동원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은 1998년 ‘전국 새마을운동지도자 대회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국가의 틀을 새로이 짜는 총체적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제2의 건국운동'에 국민의 저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한 '제2의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합시다. 국정을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제2 건국운동'의 선봉이 되도록 합시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김대중 1998.12.08).

분단 민족으로서 통일은 누구에게나 한국의 민족주의와 근대 민족국가를 완수하는 핵심적인 과제였다. 이 점에서는 김대중과 박정희에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최소한 1971년 대통령선거 기간의 정책 논쟁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김대중과 박정희 모두 승공 혹은 멸공 통일을 추구하였다¹⁶⁾. 김대중은 1967년의 기고문에서 “조국의 영광과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북괴가 비협조적이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통일에의 역량을 강화하여 통일에의 압력을 가증시키고 민주적 승공통일에의 여건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김대중 1967.10.01). 하지만, 김대중은 그 이후 4대국 안전보장론을 주창하고 북한과의 화해협력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른바 3단계 통일론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2000년 6월 13일 순안공항에 내린 김대중의 연설은 김대중 자신은 물론 한민족 전체의 민족정서와 민족주의를 일깨우기에 충분하였다. 그는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북녘 산천이 보고싶어 여기에 왔습니다...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우리 굳게 손잡읍시다”(김대중 2000.06.13)라고 말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던 민족정서를 다시 발견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김대중은 반독재투쟁 시기에 국제사회에 한국의 비민주적 현실을 알리면서도 민족의 주체성과 국민의 자주적 노력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성취될 수 없다는 인식을 견지하였다. 그는 미국에게도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단지 권위주의 정권을 돕는 것은 중단하라는 의사를 일관되게 전달했던 것이다. 1983년 1월 5일에 미국 CNN에서 방송된 프리먼 리포트에 출현한 김대중은, “레이건 행정부

16) 김대중의 연설에 등장하는 통일이란 단어의 빈도 순위는 재임 전, 재임기, 퇴임기에 각각 3위, 84위, 11위를 기록하였다. 박정희의 경우는 14위 기록하였다. 두 지도자에 있어서 모두 통일은 자주 언급되는 단어였다고 할 수 있다.

가 내치에 관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도덕적 지지를 바랄 뿐이고 독재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은 우리 자신의 문제여야지 미국의 문제여서는 안됩니다”(김대중 1983.01.05). 하지만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다루어나가는 과정에서 김대중은 민족주의와 함께 현실주의적 접근을 병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6.15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김대중은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였던 박지원에게 회담 장소에서의 “숨소리까지 미국 대사에게 얘기하라” 하면서 “우리 정부가 철저한 한미공조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조선일보 2017/07/24). 이 점은 미국에게 많은 것을 숨기려 하였던 박정희의 배타적 행태와는 비교되는 부분인데, 이 같은 차이¹⁷⁾는 두 지도자의 개인적인 성격적 특성과 국제적인 사안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 등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데탕트와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이어서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어진 여건 속에서, 1997년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김대중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대적 맥락의 차이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이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요 단어의 출현 빈도 수와 동시출현 관계의 규명에 그치지 않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구체적인 정치전략, 경제정책 및 제도에 반영되고 현실화되었는지 관련 사료 분석을 통하여 그 역사적 정치경제적 맥락을 보다 풍부하게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박정희와 김대중의 연설문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은 두 인물이 가졌던 생각과 전략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모두 보여주었다. 동일한 민족의 뿌리를 가졌지만, 박정희와

17) 김대중의 연설에 등장하는 미국이란 단어의 빈도 순위는 재임 전, 재임기, 퇴임기에 각각 2위, 34위, 3위로 기록되었고, 박정희의 경우는 148위로 나타났다.

김대중의 민족주의는 서로 다른 경로를 갖게 되었다. 청소년기에 경험하였던 시대적 맥락과 민족적 차별은 두 지도자가 민족의식과 정서를 공유하게 만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다른 정치적 길을 걷게 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민족주의의 목표와 전략도 상이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박정희는 경제성장을 민족주의의 핵심 전략과 목표로 설정한 반면,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민족주의의 목표이자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정서와 의식 수준에서의 민족은 항상 살아있었고 쉽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는 시대적 역사적 상황 및 정치적 맥락과 다양하게 결합되면서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상상되거나 발명되기도 하였고 민족주의가 다른 모습으로 동원되거나 진화되어 나갔던 것이다.

연설문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는 연구자가 가졌던 지적 가설과 호기심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위의 해답을 찾기 위한 본령은 여전히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방법론적 심화와 사회과학적 분석, 그리고 많은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대한 인문학적 천착에 있을 것이다. 한국현대사에서 발생한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현상 및 제도 등을, 어떻게 민족이라는 개념과 민족주의라는 시각에서, 얼마나 깊이 있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이론적으로 정치하게 해석해 낼 것인가는 학문적·현실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주제이다. 박정희와 김대중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 분석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보다 생생하게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이 스쳐 지나간 많은 세부 주제나 사건, 쟁점 등에 대한 분석, 그리고 ‘민족’과 ‘민족주의’가 정치경제적 맥락과 다양하게 결합되어 가는 장면들은 별도의 기회에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https://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19.10.15).

- 김경일. 2020. 『한국의 근대형성과 한국학』.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김경재. 2016. 『박정희와 김대중이 꿈꾸던 나라』. 서울: 도전과 미래.
- 김대중. 1954. “갑오년 2대 과업: 자조의 노력으로 통일과 민생 해결.” <새별> (1월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I』. 제1권, 37-4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김대중. 1955.10.01. “한국노동운동의 진로.” <사상계> (10월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 제1권, 17-18.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김대중. 1967.04.01. “왜 우리당이 이겨야 하나-신민당.” <청맥> (4월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I』. 제4권, 570-575.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김대중. 1967.10.01. “공화당의 반성을 촉구한다.” <정경연구> (10월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I』. 제5권, 17-24.
- 김대중. 1970a. “민족의 에너지에 방향을.” <인물세계> 1970년 기고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I』. 제6권, 406-409.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김대중. 1970b. “70년대의 비전: 대중민주체제의 구현.” <사상계> (1월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I』. 제6권, 216-232.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김대중. 1970.10.16. “희망에 찬 대중의 시대를 구현하자.” 1970.10.16.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I』. 제6권, 358-362.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김대중. 1971.01.23. “대중반정을 실현하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I』. 제6권, 412-421.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김대중. 1983.01.05. “프리먼 리포트에서의 대담.”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10권, 13-26. 서울: 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 김대중. 1998.12.08. “제2의 건국의 중심이 되는 제2의 새마을운동: 1998년 전국 새마을운동지도자 대회 연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 제2권, 224-228.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 김대중. 2000. 『김대중 옥중서신』. 서울: 연세대학교.
- 김대중. 2000.06.13. “긴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왔습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 제5권, 92-94.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김대중. 2006.07.27. “김대중 구술사 인터뷰 제1차 (질문자: 류상영).”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 김대중. 2006.09.11. “김대중 구술사 인터뷰 제3차 (질문자: 류상영).”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 김대중. 2010. 『김대중자서전 1』. 서울: 도서출판 삼인.
- 김동노. 2010. “한국의 국가 통치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 『현상과 인식』. 34권, 203-224.
- 김수자. 2006.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 6월항쟁-김대중정권.” 『사회과학연구』. 14권 2호, 44-78.
- 김정훈. 2020. 『한국인의 에너지, 민족주의』. 서울: 피어나.
- 김종신. 2011. 『영시의 햇불-박정희대통령 수행기자 7년의 기록』. 서울: 기파랑.
- 김춘복. 2010. “작가의 말.” 장편소설 꽃바람 꽃샘바람 출판기념회. 10월 16일. <https://blog.naver.com/pilwooje/120116833887> (검색일: 2020.11.20).
- 김판수. 2011. 『시인 신동문 평전: 시대와의 대결』. 서울: 북스코프.
- 류상영. 2013. “대중경제론에서 병행발전론까지.” 류상영, 김동노 편저. 『김대중과 대중경제론』.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139-175.
- 류상영. 2020. “1962년 박정희의 통화개혁과 한국의 민족주의.” 『현대정치연구』. 13권 3호, 119-153.
- 문상석. 2018. “박정희와 민족주의.” 『현상과 인식』. 42권 1호, 43-70.
- 박의경. 2015. “한국민족주의의 두 얼굴: 국가로의 통합과 민족의 통일.” 『한국동양

정치사상사연구』. 14권 1호, 1-26.

- 박정희. 1963. 『국가와 혁명과 나』. 서울: 향문사.
- 박정희. 1964.01.10. “1964년 대통령 연두교서.”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4.08.15. “8.15 제19주년 경축사.”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7.04.15. “자립에의 의지 방송 연설.”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7.04.17. “대전유세 연설.”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7.08.05. “재건국민운동 창립 제3주년 치사.”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7.09.15. “제4회 저축의 날 담화문.”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7.11.03. “제4회 수출의 날 기념식 치사.”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8.08.15. “공화당 당원동지에게 보내는 특별담화.”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8.09.28. “제2경제운동 실천 국민결기 대회 치사.”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69.10.03. “제4302주년 개천절 경축사.”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1970.01.01. “1970년 신년사.” 대통령기록관.
-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17. 『박정희전집 01: 박정희 시집』.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박준형, 유호선, 김태영, 한희정, 오효정. 2017. “대통령 연설기록 내용분석을 통한 역대 대통령의 중심가치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권 2호, 57-78.
- 안경환. 2013. 『황용주, 그와 박정희의 시대』. 서울: 까치.
- 윤형준 “박지원, DJ는 숨소리도 미국대사에 얘기하라 해,” <조선일보>, 2017.07.24.
- 이창길. 2010. “정권 초기의 가치지향과 정책 우선순위: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언어네트워크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4권 3호, 165-189.
- 임진영. 2015. “희망의 논리, 화해의 수사학: 김대중 글쓰기의 변화과정과 연설문의 수사학적 특징 분석.”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저작목록집』.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40-106.
- 정운현. 2004. 『실록 군인 박정희』. 서울: 개마고원.
- 조갑제. 1992. 『박정희 1: 불만과 불운의 세월 1917-1960』. 서울: 까치.
- 조수곤, 조재희, 김성범. 2015.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트렌드 연구.” 『대한산업공학회지』. 41권 5호, 453-460.

- 최연식. 2007. “박정희의 ‘민족’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권 2호, 43-7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9. 『격동기 지식인의 세가지 삶의 모습』. 성남: 현대사연구소.
- 홍석률. 2002.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두 흐름.” 『사회와 역사』, 62권, 169-203.
- 홍주현, 윤해진. 2014.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연설문 네트워크 분석.” 『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지』, 14권 9호, 24-44.
- NHK 취재반. 1999. 『김대중자서전 1: 역사와 함께 시대와 함께』. 서울: 도서출판 인동.
- Anderson, Benedict. 201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Verso.
- Bergholz, Max. 2018. “Thinking the Nati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by Benedict Anderson,” *American Historical Review*. 123(2): 518-528.
- Breuilly John. 1993. *Nationalism and The Stat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Calhoun, Craig. 1997. *Nationalism*.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Chatterjee, Partha. 1993. *The Nation and Its Fragments: Colonial and Postcolonial Histo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ung, Chung Joo, and Han Woo Park. 2010. "Textual analysis of a political message: The inaugural addresses of two Korean presidents." *Social Science Information* 49(2): 215-239.
- Conversi Daniele. 2008. “Democracy, Nationalism and Culture: A Social Critique of Liberal Monoculturalism.” *Sociology Compass*, 2(1): 156-182.
- Eckert, Carter J. 2016. *Park Chung Hee and Modern Korea: The Roots of Militarism, 1866-1945*.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Feldman, Ronen and Ido Dagan. 1995. “Knowledge Discovery in Textual Databases (KDT).” *In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 Discovery and Data Mining (KDD-95)*, Montreal, Canada, August 20-21, AAAI Press, 112-117.
- Gellner, Ernest. 1971. *Thought and Change*. London: Weidenfeld and Nicholson.
- Greenfeld, Liah. 2001. *The Spirit of Capitalism: Nationalism and Economic Growth*.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Hobsbawm, Eric and Terence Ranger, eds. 2017.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tho, Andreas, Andreas Nummerger, and Gerhard Paaß.. 2005. "A Brief Survey of Text Mining." In *LDV Forum-GLDV J. Comput. Linguistics Lang. Technol.*, 20(1): 19-62.
- Jaffrelot, Christophe. 2003. "For a Theory of Nationalism." *Research in Question*. CERI. HAL Id: hal-01065058
<https://hal-sciencespo.archives-ouvertes.fr/hal-01065058> (검색일: 2018.02.15).
- Kim, Dae-jung. 1994. "Is Culture Destiny?." *Foreign Affairs*, 73(6): 189-194.
- Moon, Chung-in. 2012. "Unraveling National Identity in South Korea: *Minjok* and *Gukmin*." Gilbert Rozman, ed. *East Asian National Identity: Common Roots and Chinese Exceptionalism*.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19-237.
- Narin, Tom. 1997. *Faces of Nationalism: Janus Revisited*. London: Verso.
- Neustadt, Richard E. 1990. *Presidential Power and Modern Presidents: The Politics of Leadership from Roosevelt to Reagan*. New York: Free Press.
- Oppen, Achim von. 1994. "Mobile Practice and Local Identity." Heidrich, Joachim ed. *Changing Identities: The Transformation of Asian and African Societies under Colonialism*. Berlin: Centre for Modern Oriental Studies.
- Özkirimli Umut. 2010. *Theories of Nation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Rhyu, Sang-young and Seok-jin Lew. 2011 "Pohang Iron and steel company." in Byung-kook Kim & Ezra F. Vogel (eds.). *The Park Chung Hee Era*.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322-344.

- Rhyu, Sang-young. 2015. *The Spirit of Korean Development*.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Roshwald, Avriel. 1993. "Untangling the Knotted Cord: Studies of Nationalism."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24(2): 293-303.
- Schäffner, Christina. 1996. "Editorial: Political speeches and discourse analysis." *Current Issues in Language and Society*, 3(3): 201-204.
- Shin, Gi-Wook, James Freda and Gihong Yi. 1999. "The Politics of Ethnic Nationalism in Divided Korea." *Nations and Nationalism*, 5(4): 465-484.
- Shin, Gi-Wook. 2006.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mith, Anthony D. 2010. *Nationalism: Theory, Ideology, History*. Cambridge: Polity.
- Tamir, Yael. 1995. "The Enigma of Nationalism." *World Politics*, 47(3): 418-440.
- Tan, Ah-Hwee. 1999. "Text Mining: The State of the Art and the Challenges." In *Proc of the Pacific Asia Conf o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PAKDD'99 workshop on Knowledge Discovery from Advanced Databases*, 65-70.

투고일: 2021.02.20.	심사일: 2021.03.18.	게재확정일: 2021.04.05.
------------------	------------------	--------------------

Two Paths of Nationalism in South Korea: A Text Mining Analysis of Official Speeches of Park Chung-hee and Kim Dae-jung.

Rhyu, Sang-Young | Yonsei University

Kim, Min-Jung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all official speeches of the former Korean presidents Park Chung-hee and Kim Dae-jung to explore how they perceive the concepts of ‘nation’ and ‘nationalism’ and how they realized those concepts in their political careers. We used text mining approaches to not only find the statistics of the words these two presidents used, but also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political economic contexts to understand how their perceptions of a ‘nation’ got materialized into their political strategies and economic institutions. The text mining results show that Park used the word ‘nation’ in his political rhetoric a lot more often than Kim did. Comparing the co-occurring words in their speeches, we found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ntexts of which they talked about the nation. Both Park and Kim said the word ‘nation’ most often with the words ‘reunification’ and ‘culture.’ However, while Park often talked about the nation with the words related to economic growth and spirits, Kim did with the words related to democracy. Park mobilized nationalism as one of his political strategies for economic growth, whereas Kim used nationalism as his strategy to fight for democracy. They shared some similar national consciousness and sentiments due to their similar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ir younger days. However, their ‘nationalism’ took the different paths as their concepts of ‘nation’ got combined with different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Key Words | Nation, Nationalism, Park Chung-hee, Kim Dae-jung, Speech, Text Mining

『현대정치연구』 편집 및 심사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현대정치연구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12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임기가 종료되는 편집위원은 본인의 사퇴 의사가 없는 한 자동으로 위촉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소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업무를 총괄할 필요에 따라 연구소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 역할을 할 선임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논문의 초심과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나.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
 - 다.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 의결은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제 3장 현대정치연구 발간

제5조 (기고 논문의 접수)

1. 현대정치연구 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연구소 홈페이지(www.polsci.ac.kr)나 편집위원장을 통해 투고한다.
2. 현대정치연구 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학문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타 학술지나 잡지 혹은 인터넷 등 매체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3년 동안 현대정치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다.
3. 제출 원고는 현대정치연구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쓴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게재신청 논문의 내용이 현대정치연구 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저자에서 반송할 수 있다.
6. 각 호 논문 접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봄호-2월 말, 여름호-6월 말, 겨울호-10월 말

제6조 (논문 게재 신청 자격)

1.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편집위원회에 의해 정치학 연구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편집위원은 익명성과 공정한 절차의 준수를 전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4.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특수관계(가족 및 친족)일 경우, 교신저자는 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를 심사 이전에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 통보한다.

제7조 (논문 게재 횟수)

1. 논문투고자는 각 집(輯)당 1회에 한해 단독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2. 각 집에 이미 단독 논문을 게재한 게재자는 해당 집에 1회에 한해 공동 논문을 추가 게재 할 수 있다.

제8조 (논문 게재자의 의무)

1. 편집위원회는 게재논문에 대해 게재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 게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구 소장이 결정한다.
2.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 투고자는 게재료 200,000원을 부담한다.
3.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현대정치연구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하에 본 연구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현대정치연구는 각 권호에 수록된 최종 출판물에 대해 학술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자 본인이 본인 웹사이트 및 소속기관 혹은 리포지터리 등에 본인 논문을 게재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4. 원고 분량이 150매를 초과할 경우, 1매당 5,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제9조 (발간 예정일)

1. 현대정치연구는 년 3회 발간하며, 봄호는 4월 30일, 여름호는 8월 31, 겨울호는 12월 30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 접수는 봄호는 2월 15일, 여름호는 6월 15일, 겨울호는 10월 15일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마감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제 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10조 (초심) 편집위원장은 매달 편집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상황을 알리고, 편집위원들과 심사위원 위촉을 논의한다. 단,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제외한 편집위원들과 논의하도록 한다.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들과 논의하여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3. 기일- 초심 결과는 3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4. 판정기준-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초심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결과
가	가	가	게재 가
가	가	수정 후 게재	
가	가	게재불가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1조 (수정 후 재심)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1.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경우, 저자는 1 주일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고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현대정치연구 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를 위해 논문을 제출했던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2.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편집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심사 결과에 대해 논문투고자에 의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지 않는다.

제 5장 기타 규정

제14조 (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3. 현대정치연구는 심사와 출판이 완료되는 대로 현대정치연구소 홈페이지에 무료로 온라인 논문게재를 한다.

제15조 (게재증명과 표절처리)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현대정치연구 저술윤리 강령에 의해 처리한다.

제16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구소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현대정치연구소 정관 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02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과 현대정치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따른다.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의 길이

- (1)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한 180매를 넘지 못한다.
- (2) 제출 논문의 표지에 원고 매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 (3) 원고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 필자는 원고지 초과분의 매 1매당 5,000원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한다.

2. 원고의 구성

- (1) 원고는 국문 요약, 영문 및 기타 외국어 요약, 본문, 각주, 참고 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 (2) 국문 요약은 제목과 저자명/소속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3매를 넘지 못한다. 영문 요약은 영문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소속을 포함하여 국문 요약의 분량에 준하여 작성한다.
-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5행(200자 원고지 1장)을 초과하는 각주는 본문 중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한다.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에(구두점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 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각주 내에서 각주의 번호는 본문 좌단과 일치시키되 둘째 줄부터는 첫째 줄 각주 번호 뒤에 나오는 첫 글자와 일치시킨다.
- (5)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 (6)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혼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지 않은 표나 그림(삽화, 사진 포함)의 경우 직접 마스터를 뜯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3. 저자의 익명성

- (1)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예: 줄고(拙稿)XXX... 혹은 ...(拙著)YYY...

4. 기타 사항

- (1) 한글 사용: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지체주의(肢體主義)...

- (2) 외래 용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 (3) 외국 인명: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마오쩌둥(毛澤東)...;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

- (4) 외국 지명: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재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뉴욕(New York)...; ...치앙마이(Chiang Mai)...

- (5) 외국 기관, 단체, 정당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이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는 역내 통화 간의 가치 안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1979년 3월에 창설되었다. EMS에는 현재 유럽공동체의 12개 회원국 모두가 가입하고 있다.

- (6) 출처의 표시: 본문과 각주에서 출처를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처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처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 서양서 및 현대물의 출처 표시 요령 〉

1. 출처는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예
 - (1)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6)은...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무어(Moore 1966)...
 - (2)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 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2)... 혹은 ...(Moore 1966)...
 -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Evans 1979, 56)... 혹은 ...(허생 1990, 12)...

- (4) 국문의 경우, 저자가 2명인 경우 “.”을, 3명 이상인 경우 “외”를 활용하고, 영문의 경우 2명은 “and”를, 3명이 이상인 경우는 “et al.”을 사용하며, 아래의 예를 따른다.

예: ...(한배호 . 어수영 1991), (한배호 외 1995), (Almond and Verba 1963) (Verba et al. 1995) ...

- (5)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하되, 한국 문헌을 외국 문헌 앞에 두고, 한국 문헌은 가나다 순서를, 외국 문헌은 알파벳 순서를 따른다.

예: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Cumings 1981, 72; Lee 1968)...

- (6)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年/月月/日日 (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年/月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중앙일보 93/04/08,5)혹은 ...(신동아 93/5, 233).

-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출판예정’을 사용하고, 미간행 원고는 “미간행”이라고 기재한다.

예: ...잉거정(출판예정); ...홍길동(미간행).

-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외교안보연구원 1992)...

〈 인터넷 자료 인용 〉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1988.10.20).
2. 분량이 많은 경우,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예: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1998.10.20>. (1/10 Bar).

〈 참고문헌 작성 요령 〉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 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 홍길동, 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未來社.

린위진(林昱君).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 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인도·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격쇠 (『』)로 표시한다.
 -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 (3) 각 문헌의 첫 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 (hanging indentation)

가.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장서방. 1993. 『변화하는 유권자: 17대 총선의 분석』. 서울: 믿음사.

Tillich, Paul. 1963. *Systematic The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출전 인용 규칙을 따르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홍길동·허생·홍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Berelson, V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이창동·김명희·허윤기.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나. 학위 논문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다. 편집된 책 속의 글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장노자. 1991. “국건력과 시민사회.” 김서방 외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호박사.

Schydllowsky, Daniel M., and Juan J. Wicht. 1983. “The Anatomy of an Economic Failure.” Cynthia McClintock and Abaraham F. Lowenthal, eds. *The Peruvian Experiment Reconsidered*.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94-113.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 자본주의의 정치』. 서울: 집현연구소. 261-306쪽.

라.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Bell, Daniel 저. 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개벽사

마. 동양 고전의 참고 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기재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바.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스코트, 제임즈. 1991. “20세기 초 말레이시아에서의 자본주의의 농촌 침투와 농민 운동.” 『집단 선택 이론』 5집 1호, 75-101.

이사마. 1993. “법가의 유가적 기원.” 『계간 춘추』(봄), 101-22.
Jilberto, Alex E. Fernandez. 1991.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8, No. 1(Winter), 32-65.

사.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김민주. 1988.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이론.” 한국정치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 5월.

Haggard, Stephen. 1996.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 San Diego. U.S.A.
September.

아.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일), 5.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April 22), 23.

자. 편저

편저에 포함되어 있는 저자가 밝혀진 글을 언급할 경우 해당 저자 중
심의 문헌 정보를 제공한다. 단, 같은 편저 내의 많은 글이 언급될 경
우 해당 편저의 완전한 문헌 정보르르 제공한 후 각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Cox, Robert W. 1979. “Labor and the Multinationals.” *Modleski*(1979),
414-29.

Hymer, Stephen. 1979. “The Multinational Cooperation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Modleski*, 386-403.

Modleski, George, ed. 1979.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World*

Power: Reading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5. 이 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편집위원회(705-8616, polsci@sogang.ac.kr)로 문의한다.

현대정치연구 저술 윤리강령

1. 목적

- (1) 현대정치연구소는 저자들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혹은 게재 신청)하는 회원은 본 저술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3) 본 저술 윤리강령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와 저자들 간 특수관계에 의한 연구논문 출간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표절 및 중복게재의 기준

- (1)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 ①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②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 ③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등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2) 다음 각 사항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 ①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 ②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편집위원회는 모든 독자의 제보 내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 (2)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와 연구위원회가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2차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 및 판정을 한다.
- (4)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가 특수관계(가족 및 친족)일 경우, 교신저자는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 이전에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 통보한다.

4. 제재방식

- (1) 표절에 대한 제재
 - ①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 기간을 통보한다.
 - ③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현대정치연구를 통하여 공지한다.
- (2)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 ①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현대정치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및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 기간을 통보한다.
 - ③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현대정치연구를 통하여 공지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5. 기타

- (1)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기 출간된 논문을 다른 저술의 형태로 재출간 시 원 출처를 밝혀야 한다.
- (2) 본 강령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게재 신청한 논문에 적용된다.

부록1: 현대정치연구소 학술활동 (2015년 3월~2018년 5월)

1. 2015년 3월 제 3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논문 발표회(현대정치연구소 & BK21Plus 사업팀(정치학의 과학화) 공동주최)

·일자: 2015년 03월 27일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501호

·내용:

가. 발표:

- 여지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 복지균열의 부상에 관한 연구-무상급식부터 경제민주화담론까지의 시기 (2009-2012)를 중심으로
- 김태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균등이념과 제헌헌법
- 김성모(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사회적 자본이 사회실패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네트워크 자본을 중심으로
- 정성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 현상 소고
- 이태규(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 당- 국가 체제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과 위상 변화
- 선민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중국식 민주에서의 사회집단의 역할 고찰’ - 위로부터의 정치개혁과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저항을 중심으로

나. 토론:

- 김찬송(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권도혁(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심은정(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정결(서

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한유동(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한성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다. 사회:

- 전재호(서강대), 이민자(서울디지털 대학교)

2.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4월 29일(수) 16시

·장소 : 다산관 209B호

·내용 : 서구중심주의와 역사교육의 공과 (서강대학교 김민정)

3.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4월 25일(토) 13시

·장소 : 다산관 209B호

·내용 : 중국학술의 주체성과 유럽중심론의 비판 (상해 화동사범대학교 류칭)

4. 현대정치연구소, SSK 좋은 정부 연구단,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후원 “정당정치 의 변화 왜 어디로” 저자와의 대화

·일자: 2015년 5월 28일

·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내용:

가. 발표:

정진민(명지대) : 한국의 새로운 정당모델 - 대안으로서의 유권자 정당

강신구(아주대) :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대중정당론의 적실성에 대하여

최준영(인하대) : 대통령제 정당체제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한계

채진원(경희대) : ‘오픈프라이머리 정당 약화론’과 네트워크정당모델

서정건(경희대) : 후보 선출과 정당 조직의 연계 및 변화: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이현우(서강대) : 미국 정당의 양극화 평가 - 약화(decline)인가 적응(adaptation)인가

안병진(경희사이버대) : 정당정치의 혁신에 대한 시론 - 미국과 한국의 민주당 사례를 중심으로

임성호(경희대) : 정당 내 정파(faction) 문제와 정치 양극화 - 탈산업시대 정당의 위험요소와 극복 방향

나. 사회:

김민전(경희대)

5. 현대정치연구소 · SSK 탈서구중심주의연구단 공동주최 세미나

·일자: 2015년 6월 5일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209A호

·내용:

가. 발표:

- 엄한진(한림대) : “서구가 바라본 오리엔트, 오리엔트가 바라본 서구”

김은실(성신여대) : “유럽중심주의와 러시아 정체성 논쟁”

박은홍(성공회대) : “동남아시아에서 반(反)서구중심주의 ‘아시아적 가치’의 양면성”

조경란(연세대) : “서구중심주의와 중국중심주의의 대립과 충돌-역사적 회고와 전망”

김광수(한국외국어대) : “아프리카중심주의(Afrocentrism) 시각에서 본 아프리카 르네상스의 역사적 맥락화”

- 김은중(서울대) : “라틴아메리카의 관점에서 본 권력의 식민성, 자본주의 세계경제, 유럽중심주의”

- 이지은(한국외국어대) : “서구와 탈서구, 근대와 탈근대-인도 역사학

의 여정”

- 고희탁(서강대) :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근현대 일본의 동화전략과 역
전전략의 이중주”

나. 토론: 장경섭(서울대), 김태연(서울대), 이한우(서강대), 정수복(사회학자
/작가), 임기대(한국외국어대), 박정원(경희대), 김진영(서강대), 이새봄
(연세대)

다. 전경옥(숙명여대), 장인성(서울대)

6. 현대정치연구소 · SSK 좋은정부연구단 공동주최 해외학자초청 세미나

·일자: 2015년 6월 5일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501호

·내용:

가. 발표:

- Edgar Grande(LMU MUNICH, 뮌헨대학교) : “Globalization and the
Re-Structuring of Political Conflict in Western Europe“

나. 사회:

이현우(서강대)

7.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7월 24일(금) 16시

·장소 : 다산관 603호

·내용 :

- 한국 심리학계의 탈서구중심적 연구동향: 유학심리학의 연구를 중심
으로 (서강대학교 조공호)

- ‘우리성’과 ‘쪽’의 심리학: 한국적 세계관에 바탕한 심리학의 한 모형
(한규석) (전남대학교 한규석)

8.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8월 17일(월) 16시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3호

·발표 :

- ‘가족개인’과 한국의 계층질서: 소소유자의 존재와 의식(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 탈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유교사회학적 모색(이영찬) (계명대학교 이영찬)

9.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4호

·발표 : 제국의 역사는 서구중심주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조선대학교 공진성)

10.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10월 2일(금)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발표 : 보편주의적 한국국제관계이론 구축 시도 속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전북대학교 조영철)

11. 현대정치연구소, 한국사회기반연구(SSK) 좋은정부 연구단 공동 주최 해외학자 초청 강연

·일자: 2015년 10월 16일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209B호

·내용:

가. 발표:

- Sverker C. Jagers(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Gothenburg & Luleå University of Technology) : Ecological Citizens - Realism or Utopia?
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values for generating green behaviour and consumption

12. 사회과학연구소, 현대정치연구소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해외학자 초청 강연회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15시 30분

·장소 : 다산관 209B호

·내용 : “유교민주주의의 가치: 도구적 가치로부터 내재적 가치로” (홍콩시립 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김성문)

13.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11월 6일(금)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발표 : “패치워크문명론” (동국대학교 황태연)

14. 현대정치연구소, SSK 좋은 정부 연구단 공동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자: 2015년 11월 27일

·장소: 다산관 209B호

·내용:

가. 발표:

이수상(부산대) : 언어 텍스트 자료의 네트워크 분석 방법

나. 사회:

이현우(서강대)

15. 현대정치연구소, SSK 좋은 정부 연구단 공동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자: 2015년 12월 4일

·장소: 다산관 209B호

·내용:

가. 발표:

이남영(세종대) : 지역투표현상은 퇴조하는가

나. 사회:

이현우(서강대)

16.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12월 11일(금)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발표 : 유럽중심주의와 역사학 비판 - 국내 서양사학계의 유럽중심주의 논의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 김택현)

17. 서강대 SSK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현대정치연구소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6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발표 : 소농사회론에서 유교적 근대론으로 (성균관대학교 미야지마 히로시)

18. 2016년 2월 제 4회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논문발표회(현대정치연구소 & BK21Plus 사업팀(정치학의 과학화) 공동주최)

·일자: 2016년 2월 24일

·장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603호

·내용:

가. 발표:

- 추정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5.24조치의 정책적 효용성에 대한 연구 - 2010년 이후 북한의 무역 변화를 중심으로

- 황하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대선 후보 단일화 실패와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 1987년 13대 대선을 중심으로

이석희(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서구중심주의의 극복전략과 정치적 정당성: 역전적 동화주의 분석 -정관웅의 『성세위언』을 중심으로

양해만(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북한변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권도혁(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경제민주화는 어떤 민

주화인가?

나. 토론:

김태영(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한성훈(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유재승(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김찬송(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윤호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다. 사회:

전재호(서강대), 한영빈(서강대)

19.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탈서구중심주의 연구단 · 한국정치사상학회 3월 월례학술회의

·일시 : 2016년 3월 19일(토) 15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101호

·내용 : “존 롤스 정치이론에서 공동체주의적 요소” (국민대학교 이종은)

20.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SSK 좋은 정부 연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일시 : 2016년 4월 29일(금) 13시 00분

·장소 : 서강대 가브리엘관 109호

·내용 : “What is Good Government in Asia”

21.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10시 30분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3호

·내용 : “Dynamic lobbying: Empirical evidence from foreign lobbying on free trade agreement”

·발표 : 유혜영 교수 (Vanderbilt University)

22.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선거학회 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5월 20일(금) 17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501호
- 내용 : “The Consequences of Government Ideology and Taxation on Welfare Voting”(정부 이데올로기와 조세수준이 복지투표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신정섭 교수 (한양대학교)

23.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사회과학연구소 공동주최 해외학자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6월 27일(월)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 내용 : “Rethinking “Capitalism” and Long-Run Paths of Development in East Asia”
- 발표 : 김원익 교수 (Louisiana State University)

24.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선거학회 공동주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 : 2016년 11월 2일(수)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 내용 : “Factories for Votes? How Authoritarian Leaders Gain Popular Support Using Targeted Industrial Policy”
- 발표 : 박선경 교수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25.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주최 “2016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

- 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 09시 3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 내용 : “선거제도, 여론조사 그리고 선거결과”, “유권자 지형의 변화와 양대 정당의 미래 / 미국 밖에서의 포퓰리즘.”
- 발표 : 이현우 교수 (서강대학교), 하상응 교수 (서강대학교)

26.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선거학회 공동주최 확대월례 세미나

- 일시 : 2017년 4월 21일(금)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정하상관 311호
- 내용 : “2017 촛불집회: 누가 그리고 왜”
- 발표 : 이현우, 서복경, 이지호 교수(이상 서강대학교)
- 토론 : 장우영(대구카톨릭대학교), 신진욱 (중앙대학교), 하상응(서강대학교), 김욱(배재대학교)

27.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특별학술대회

- 일시 : 2017년 6월 30일(금) 13시 30분
- 장소 : 서강대 정하상관 311호
- 내용 : “촛불과 태극기의 정치”
- 발표 : 김종범(대전대), 전상진(서강대), 신진욱(중앙대), 도모연(영남대), 이현출(건국대),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이현우, 이지호, 서복경(이상 서강대)
- 토론 : 전재호(서강대), 김윤철(경희대), 박명호(동국대), 강신구(아주대), 황아란(부산대), 이재묵(한국외대)

28.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월례세미나

- 일시 : 2018년 5월 31일(목) 16시 0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601호
- 내용 : “저자와의 대화: 정당의 과거와 미래를 묻다.”
- 발표 : 정진민(명지대)
- 토론 : 전진영(입조처), 강신구(아주대), 서정건(경희대), 안병진(경희대), 이성호(경희대), 채진원(경희대), 최준영(인하대)

29.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11주년 기념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13시 20분
- 장소 : 서강대 정하상관 311호
- 내용 : “한국 정치과정연구의 새로운 아젠다”
- 발표 : 박선경(인천대), 강신구(아주대), 조영호(서강대), 강원택(서울대), 장훈(중앙대), 이지호(서강대), 서복경(서강대)
- 토론: 하상웅(서강대), 허석재(입조처), 임성호(경희대)
- 사회: 이현우(서강대), 정진민(명지대)

30. 2019 현대정치연구소 콜로키움

- 일시 : 2019년 4월 12일(금) 16시 20분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209B호
- 내용 : “미디어생태계 변화와 시사평론의 세계”
- 발표 : 장희영 시사평론가

■ 편집위원회 명단 (가나다 순)

강우진(경북대)	김면희(한국외대)
박범섭(영국레딩대)	박선경(인천대)
박영득(충남대)	송병권(서강대)
우병원(한국외대)	이선우(전북대)
이현우(서강대)	조영호(서강대)
최일성(한서대)	하상응(서강대)
한경준(테네시대)	홍지연(홍콩과기대)

현대정치연구 2021년 봄호 (제14권 제1호)

인 쇄 | 2021년 04월 25일
발 행 | 2021년 04월 30일

발행인 | 이현우
편집인 | 조영호
편 집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펴낸곳 | 도서출판 네임북스 (www.namebooks.co.kr)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Sogang Institute of Political Studies)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35 Baekbeom-ro, Mapo-gu, Seoul, 04107, South Korea
TEL | (+82)2-705-8616 FAX | (+82)2-705-8617
E-mail | polsci@sogang.ac.kr

ISSN 1976-9466
